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4(1)

한 · 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김진오 · 권기수 · 고희채 · 박미숙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4(1)
연구보고서 10-18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김진오·권기수·고희채·박미숙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0년 세계지역 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04-04(1)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진오 전문연구원	권기수 부연구위원 고희채 전문연구원 박미숙 연구원
협력연구기관			

서 언

중미지역은 경제규모는 작지만 1990년대 이후 개혁 및 개방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미는 중미통합체제(SICA)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에 노력 중이고, 낮은 산업발전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미국 등 주변시장을 목표로 하는 외국기업들의 투자진출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미 각국은 물론 지역 차원에서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FTA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한 결과, 거대경제권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중미지역은 교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국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또한 중미는 북미와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표적인 투자진출 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국은 중미와 정상회담 개최, 지역 차원의 협의체 운영, ODA 제공, 개별국과의 각종 협력협정 체결,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추진 등을 통해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호 이해부족과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협력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중미를 이해하고, 대(對)중미 협력을 확대하며,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종합적·심층적인 연구 및 조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미지역의 협력 여건을 종합적·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와의 협력증진을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중미지역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한·중미 개발협력', '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한·중미 IT산업협력' 등의 과제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그 결과를 별도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김진오 전문연구원, 권기수 부연구위원, 고희채 전문연구원 및 박미숙 연구원이 작성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담당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김형주 박사, 이혜란 서기관 및 기타 익명의 평가자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주목받지 못한 중미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재평가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양자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이 향후 정부의 정책구상과 민간부문의 중미지역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2월

원장 **채 욱**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화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 및 협력 가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중미지역 및 각국의 경제구조 및 특징, 경제발전 전략, 경제통합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중미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경제권이면서 저개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간 격차도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대외의존성과 산업구조의 미분화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미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기에는 성장의 동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미지역 공동개발정책과 각국별 경제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부족과 사회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미지역의 특징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지만, 반대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발전 잠재력을 지닌 중미는 향후 소득이 향상될수록 소비시장으로서의 규모도 확대되고, 우리의 투자진출 교두보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미지역은 1990년대 이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최빈개도국의 지위에서 탈피하였다. 또한 현 수준에서 다소의 한계는 있지만,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해외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내·외 경제통합은 중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시장으로 진출하기 위

한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앞서 중미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대중미 협력전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미국, EU, 중국 및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의 대중미 진출 현황과 협력전략은 상호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실익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면서도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중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을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대중미 협력전략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국가의 능력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 우선 논리, 중국과 대만의 외교적 논리, EU의 개발협력 논리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실익과 외교 논리를 앞세우는 일본의 협력전략이 가장 취사선택 가능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 논리는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가 취해온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단지 전략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대중미 협력방안이 부재했을 뿐이다.

셋째, 대중미 통상협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제4장에서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 투자, 제도적 협력을 진단해보고, 특히 한국의 대중미 수출 및 투자진출의 실질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협력 현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협력의 애로사항을 도출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중 측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양측은 각각 세계시장에서 지닌 경쟁력을 한·중미간 교역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섬유와 운송장비 등은 중미로의 수출이 활발하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경쟁력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저조한 수준이다. 중미국가들은 농산물, 가공식품, 원자재, 동물성 유지 및 왁스, 섬유·고무·제지, 목재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 중 한국에 활발하게 수출되는 상품은 커

피, 반도체, 일부 원자재 등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양 지역은 높은 교역증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중미 수출확대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실시한 시장진출 애로사항 조사에서 마케팅 능력 부족,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 환율변동, 높은 관세 등이 지적되었다. 비관세 장벽으로는 △수입을 위한 복잡한 사전허가 및 승인 필요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과 부담이 과도 △외환거래 및 송금규제로 인한 어려움 △전시품 및 샘플 통관의 특혜가 없으면서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및 허가 절차 필요 등 다양하게 나타나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출 애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이 정부 및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은 △중미에 한국 경제, 문화 등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중미와의 신속한 FTA 체결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중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교육기관 또는 과정 마련 확대 △홈페이지, 안내서, 설명회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제공 △상무관, 무역관 등 정부 관련기관 설치 확대를 통한 현지수출 애로 해소 지원, 현지 비자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간 협상 필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컨설팅 서비스 △중미국가와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미 투자는 국별·분야별로 쏠림 현상이 심하였다. 국별로는 파나마에, 투자업종의 경우 파나마에서는 서비스 업종에, 나머지 국가에서는 섬유봉제업에 국한되어 있었다. 중미지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중미 외국인투자가 전통적인 저임금 기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관광, IT, 환경, 인프라 개발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우리의 대중미 투자도 업종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었다. 한편 중미 투자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시장성이 크고 인접국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낙후, 현지금융 활용 한계 등이었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제도적 통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확대 필요성이 있었다. 투자보장 협정과 한·SICA 대화협의체를 제외하고는 평가할 만한 제도가 없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유일하게 파나마와만 체결한 상태다. 실질적인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양국간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및 정례회의의 활성화 등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미지역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별 협력 여건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계량적 모형을 통하여 협력 분야를 선정하기보다는 중미의 일반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중소기업 협력, 녹색산업 협력, IT산업 협력을 선정하여 한·중미간 분야별 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미 분야별 협력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물론 중미지역의 관점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진출 가능성도 높았다. 녹색산업 및 IT산업은 최근 부각되는 협력 분야로서 정부 및 기업의 진출 노력이 필요하였고, 개발 및 중소기업 협력은 확대 및 성숙 단계로 진입해야 할 분야로 평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중미를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은 소규모 저개발국, 빈곤국, 정치사회적 불안정, 공산품 수출시장, 농산물 및 자원 수입시장,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형 투자 우회수출 전진기지, 일방적인 ODA 수원국, 외교목적의 일회성 협력국 등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실익을 강조한 교역, 투자, ODA 정책은 강조된 반면, 중미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 양측은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통상만을 현상 유지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증진의 한계는 협력전략 부재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안 미비,

협력제도 부족, 불균형적인 통상구조 향유, 이벤트성 단발적인 외교정책, 중미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협력 등에서도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첫째, 중미를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수출시장 혹은 투자진출보다 개발협력을 통해 미래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협력의 기본은 중미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는 상생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중미의 가치와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전략과 더불어 지역 블록 차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협력 확대의 기본으로 각종 제도적 협력 장치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미에 적합한, 중미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리의 진출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인된 산업분야별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차 례

서 언 ····· 7

국문요약 ····· 9

제1장 서 론 ·····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6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7
가. 연구 내용 ····· 27
나. 연구 방법 ····· 28
3. 선행연구 현황 ····· 29

제2장 중미 경제 개관 ····· 33
1. 중미 경제구조 및 현황 ····· 34
가. 중미 경제의 특징 ····· 34
나. 산업구조 ····· 37
다. 수출 경쟁력 평가 ····· 43
라.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45
2. 경제발전전략 ····· 55
가. 중미 공동개발정책 ····· 55
나. 국별 경제발전전략 ····· 56
3. 지역경제통합의 현주소와 과제 ····· 72

가. 역내 경제통합 현황 ····· 72
나. 역외 경제통합 현황 및 성과 ····· 81
다. 경제통합의 문제점 및 과제 ····· 83

제3장 주요국의 대중미 협력전략 및 시사점 ····· 87

1. 미국 ····· 88
가. 미국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 88
나. 미국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 93
2. EU ····· 97
가. EU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 97
나. EU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 104
3. 중국 및 대만 ····· 110
가.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 110
나.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 114
4. 일본 ····· 120
가.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 120
나.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전략 ····· 128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 130

제4장 한·중미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 133

1.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 134
가. 무역 ····· 134
나. 투자 ····· 143
다. 제도협력 ····· 148
라. 통상관계 평가 및 과제 ····· 149
2. 수출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 150

가.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 ····· 151
나. 수출 동기 및 계기 ····· 151
다. 수출 성과 ····· 152
라. 수출 애로사항 ····· 153
마. 비관세장벽 ····· 154
바. 한·중미 FTA 관련 ····· 155
사.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 156
3. 투자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 158
가. 투자설문조사 방법 및 한계 ····· 158
나. 개요 ····· 159
다. 투자 동기 및 정보입수 ····· 162
라. 현지경영 실태 ····· 164
마.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 182
바. 투자진출 환경 평가 ····· 191
사. 향후 경영전략 ····· 192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주요 협력분야별 현황 및 평가 ····· 197
1. 개발협력 ····· 198
가. 현황 ····· 198
나. 평가 ····· 203
2. 중소기업 협력 ····· 204
가. 현황 ····· 204
나. 평가 ····· 210
3. 녹색산업 협력 ····· 212
가. 현황 ····· 212
나. 평가 ····· 215

4. IT산업 협력 ····· 216
가. 현황 ····· 216
나. 평가 ····· 224

제6장 21세기 한·중미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 229
1. 소결론 ····· 230
2. 대중미 협력증진을 위한 제언 ····· 233
3. 협력 확대방안 ····· 234
가. 한·중미 경제협력전략 수립 ····· 234
나. 통상협력 확대방안: 제도화 ····· 235
다. 개발협력 확대방안 ····· 238
라. 주요 산업협력 확대방안 ····· 241

참고문헌 ····· 261

Executive Summary ····· 265

표 차례

표 1-1. 선행연구 현황 ····· 30
표 2-1. 중미국가(SICA) 경제 개황(2009년 기준) ····· 34
표 2-2. 중미의 경제성장률 추이 ····· 35
표 2-3. 중미 국별 산업구조 추이 ····· 37
표 2-4. 산업별 RCA 지수(2007년 기준) ····· 44
표 2-5. 중미지역 최근 경제성장 실적 및 전망 ····· 46
표 2-6. 중미지역 교역증가율 추이 ····· 48
표 2-7. 중미지역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 증가율 추이 ····· 49
표 2-8. 중미지역 FDI 및 재외국민 송금 추이 ····· 50
표 2-9. 중미지역 재정 및 외채 추이 ····· 54
표 2-10. 중미(CACM 기준) 역내교역 추이(2004~08년) ····· 81
표 2-11. 중미(CACM 기준) 국가별 역내 수출입 추이(2008년) ····· 81
표 3-1. 미국의 대중미 교역액 추이 ····· 88
표 3-2. 미국의 대중미 상품수출액 추이 ····· 89
표 3-3. 미국의 대중미 상품수입액 추이 ····· 90
표 3-4. 미국의 대(對)중남미 해외직접투자 추이 ····· 91
표 3-5. 미국의 대중미 해외직접투자 추이 ····· 93
표 3-6. 미국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2010년 9월 현재) ····· 95
표 3-7. 미 의회의 CAFTA 비준 표결 결과 ····· 96
표 3-8. EU(27개국)의 대SICA 수출입 추이 ····· 98
표 3-9. EU(27개국)의 대SICA 품목별 수출입 추이 ····· 99
표 3-10. EU(27개국)의 대SICA 세부 품목별 수출 추이(2009년) ····· 99

표 3-11. EU(27개국)의 대SICA 세부 품목별 수입 추이(2009년) ····· 101
표 3-12. OECD/DAC EU 회원국 및 EC의 대SICA ODA 추이 ····· 103
표 3-13. 중미의 대EU 관세인하 양허안 ····· 108
표 3-14. EU의 대중미 관세인하 양허안 ····· 108
표 3-15. 중미의 대(對)중국 및 대(對)대만 무역(2009년 기준) ····· 111
표 3-16. 대만 ICDF 지원 분야 및 내용 ····· 112
표 3-17. 현재 진행 중인 ICDF 중미 지원 프로젝트 ····· 113
표 3-18. 중국의 지역별·연도별 해외원조(2002~07년) ····· 114
표 3-19. 대만의 수교국 ····· 115
표 3-20.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국가(2000년 이후) ····· 116
표 3-21. 대만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 ····· 118
표 3-22.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 ····· 119
표 3-23. 최근 5년간(2004~08년) 일본의 대중미 수출입 현황 ····· 121
표 3-24. 최근 5년간(2004~08년) 일본의 대중미 수출입 증가율 추이 ····· 122
표 3-25. 일본의 연도별 대SICA 직접투자 추이 ····· 123
표 3-26. 일본의 업종별 대SICA 투자 현황 ····· 123
표 3-27. 중미 거주 일본인 수 및 일본 거주 중미인 수 현황(2008년 말 현재) ·· 125
표 3-28. 일본의 대중미 ODA 추이 ····· 126
표 3-29. 일본의 대중미 엔차관 지원 현황 ····· 126
표 3-30. 일본의 대중미 무상자금협력 지원 현황 ····· 127
표 3-31. 일본의 대중미 기술협력 지원 현황 ····· 127
표 3-32. 도쿄선언문의 주요 실천계획 ····· 129
표 4-1. 한국의 대중미 무역(2009년 기준) ····· 134
표 4-2. 한국의 대중미 산업별 무역(2009년 기준) ····· 136
표 4-3. 한국의 대중미 상위 20위 수출품(2009년 기준, HS4 단위) ····· 138
표 4-4. 한국의 대중미 상위 20위 수입품(2009년 기준, HS4 단위) ····· 139

표 4-5. 한국상품의 중미국가에서의 경쟁력(MCA, 2007년 기준) ····· 140
표 4-6. 한국상품의 중미시장에서의 경쟁력 ····· 141
표 4-7. 중미상품의 한국에서의 경쟁력(MCA, 2007년 기준) ····· 142
표 4-8. 단계별·국별 대중미 투자 ····· 145
표 4-9. 단계별·업종별 대중미 투자 ····· 145
표 4-10. 한국의 지역별·업종별 투자 비중(1980~2009년 누적액 기준) ····· 147
표 4-11. 한·중미 통상협정 현황 ····· 148
표 4-12. 한국의 대중미 수출품목 ····· 151
표 4-13. 한국 기업의 대중미 수출 동기 ····· 152
표 4-14. 수출실적 평가 ····· 152
표 4-15. 한국 수출기업의 주요 경쟁대상국 ····· 153
표 4-16. 경쟁대상국에 대한 경쟁우위 요인 ····· 153
표 4-17. 수출시장 진출 애로사항 ····· 154
표 4-18. 중미 수출 시 애로사항 해결방법 ····· 154
표 4-19. 중미 수출 시 비관세장벽 애로사항 ····· 155
표 4-20. 한·중미 국가간 FTA 협상에 대한 관심도 ····· 156
표 4-21. FTA 우선 체결대상국 ····· 156
표 4-22. 한·중미 FTA 관심 협상분야 ····· 156
표 4-23. 한국 정부·기관 요청사항 ····· 157
표 4-24. 중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개요 ····· 159
표 4-25. 기업형태 ····· 160
표 4-26. 진출형태 ····· 160
표 4-27. 투자형태 ····· 161
표 4-28. 분석대상 업종별 형태 ····· 161
표 4-29. 투자동기 ····· 163
표 4-30. 정보 입수원 ·····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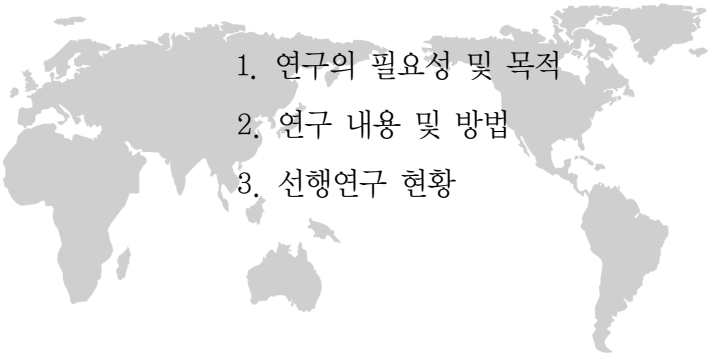
표 4-31. 금융조달 ····· 165
표 4-32. 원부자재 조달 ····· 165
표 4-33. 현지법인 생산품목 ····· 166
표 4-34. 현지법인 생산설비 ····· 167
표 4-35. 제품 수명주기 ····· 168
표 4-36. 현지 생산활동 결과 ····· 169
표 4-37. 총 매출액의 지역별 구성 ····· 169
표 4-38. 판매 시 사용상표별 구성비 ····· 170
표 4-39. 내수판매 시 유통경로 ····· 170
표 4-40. 현지법인의 기술도입 원천 ····· 172
표 4-41. 이전기술과 국제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관계 ····· 172
표 4-42. 동종업종 중 경쟁국가 기업 ····· 173
표 4-43. 현지업체와의 경쟁력 척도 비교 ····· 174
표 4-44. 임금수준 결정 ····· 175
표 4-45. 연평균 임금 증가율 ····· 175
표 4-46. 월평균 급여 ····· 176
표 4-47. 투자진출 결정 시 인건비 예상치 ····· 177
표 4-48. 본사와의 관계 ····· 178
표 4-49. 현지 평균 체류기간 ····· 178
표 4-50. 사업실적 평가 ····· 179
표 4-51. 실적개선 이유 ····· 180
표 4-52. 실적악화 이유 ····· 180
표 4-53. 현지 경쟁력 유지 요인 ····· 181
표 4-54. 현지공장 가동 후 국내 모기업의 변화 ····· 182
표 4-55. 현지시장 진출단계 애로사항 ····· 183
표 4-56. 현지 경영 및 운영 단계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 ····· 184

표 4-57. 고용상의 애로사항 ····· 185
표 4-58. 임금관리 애로사항 ····· 186
표 4-59. 인력관리 애로사항 ····· 187
표 4-60. 자금조달 애로사항 ····· 188
표 4-61. 현지 원부자재 조달 시 애로사항 ····· 189
표 4-62. 내수판매 시 애로사항 ····· 190
표 4-63. 상품판매 시 물류상 애로사항 ····· 191
표 4-64. 산업 인프라 관련 애로사항 ····· 191
표 4-65. 현지시장 특성 ····· 192
표 4-66. 향후 현지사업 운영방향 ····· 193
표 4-67. 향후 현지사업이 지향해야 할 경영전략 ····· 194
표 4-68. 향후 원자재·부품 조달선 변경 계획 ····· 194
표 4-69. 향후 한국 본사와의 분업관계 ····· 195
표 4-70. 현지국과의 FTA 체결 시 진출기업의 기대 혜택 ····· 195
표 5-1. 한국의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 현황(순지출 기준) ····· 198
표 5-2. 중미 국가들의 OECD/DAC 지위 ····· 200
표 5-3. 대중미 분야별 무상원조 ····· 202
표 5-4. 한국의 대중미 투자진출 추이 ····· 207
표 5-5. 중미 진출 투자기업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 비교 ····· 208
표 5-6. 한국의 대중미 업종별 투자진출 추이 ····· 210
표 5-7. 한국 녹색산업의 대중미 협력여건 SWOT 분석 ····· 216
표 5-8. 중미지역 국별 IT 전략 및 정책 ····· 222
표 5-9. 한국의 대중미 주요 IT 협력 사례 ····· 223
표 5-10. 대중미 IT산업 협력여건 평가 순위 ····· 225
표 6-1. 대중미 개발협력 확대 및 효율성 증대 방안 ····· 239

그림 차례

그림 2-1. 중미지역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적 및 전망 ····· 47
그림 2-2. SICA 조직도 ····· 74
그림 2-3. 중미 역내교역 추이(1960~08년) ····· 75
그림 2-4. 중미 국별 1인당 GDP 추이(1990~2008년) ····· 84
그림 3-1. 중미 진출 일본업체 수 현황 ····· 124
그림 4-1. 한국의 대중미 무역 추이 ····· 135
그림 4-2. 한국의 대중미 산업별 무역(2009년 기준) ····· 137
그림 4-3. 단계별 대중미 투자 ····· 144
그림 4-4. 한국의 국별 대중미 투자(1980~2009년 누적액 기준) ····· 147
그림 5-1. 한국의 대중미 양자간 ODA 현황(순지출 기준) ····· 199
그림 5-2. 한국의 국별 양자간 ODA 현황(2005~08년 누적, 순지출 기준) ····· 200
그림 5-3. 중미지역 정보화 현황: ICT 발전지수(IDI) ····· 217
그림 5-4. 중미지역 정보화 현황: ICT 이용지수 ····· 218
그림 5-5. 중미지역 정보화 현황: ICT 접근성 ····· 218
그림 5-6. 중미지역 정보화 현황: ICT 활용능력 ····· 219
그림 5-7. 중미 및 세계의 전자정부 발전지수 비교 ····· 219
그림 5-8. 중미 네트워크 준비지수(2009~10년) ····· 220
그림 6-1. 한·중미 중소기업 협력 확대방안 ····· 242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미 8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은 비록 경제규모는 작지만 1990년대 이후 개혁 및 개방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미는 중미통합체제(SICA)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모색하고 있고, 낮은 산업발전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미국 등 주변 시장을 목표로 하는 외국기업들의 제조업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미 교역은 2009년 기준으로 66억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1%와 대중남미 교역의 17%에 불과하지만 급신장하고 있고, 한국이 약 4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한국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미는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대표적인 우회 투자진출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바, 1968~2008년 사이에 대중남미 총투자의 11%인 1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최근 중미지역에서는 국별 FTA 체결 외에도 지역차원에서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데 이어 유럽연합(EU)과의 포괄적인 제휴협정(FTA 포함)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거대경제권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 중미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중미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국은 중미와 정상회담 개최, 지역차원의 협의체(한·중미 대화협의체) 운영, ODA 제공, 개별국과의 각종 협력협정 체결, 지역 금융기관(CABEI) 가입 시도 등을 통해 협력을 도모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호간의 이해부족과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협력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중미를 이해하고, 우리의 대중미 협력을 확대하며,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종합적·심층적인 연구 및 조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바, 본 연구가 이 수요에 부합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와 중미지역의 협력 여건을 종합적·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양자간 협력증진을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6월 VIP의 중미 순방으로 중미 각국 및 SICA와의 관계증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고, 그 후속사업의 발굴 및 실천에 노력해야 하는 측면 등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질문을 출발점으로 활용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중미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나라에 앞서 중미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대중미 협력전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대중미 통상협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넷째, 중미지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별 협력 여건은 어떠한가? 특히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협력전략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중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 혹은 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중미 각국 혹은 중미지역의 경제구조 및 특징, 경제발전 전략, 경제통합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 및 협력 가능 분야를 파악하고자 했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및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의 대중미 진출 현황과 협력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중미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미간의 통상협력 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적 협력을 통해 진단해보고, 협

력확대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한국의 대중미 수출 및 투자진출의 실질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협력 현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협력의 애로사항 및 협력 분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제5장에서는 개발, 중소기업, 녹색산업, IT산업 등 분야별로 한·중미 간 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상의 전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해 한·중미 간 새로운 협력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국내외 문헌 조사 및 분석에 바탕을 둔 정성적 분석기법을 활용했다. 중미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주요국의 중미 진출 현황 및 특징, 한·중미 통상관계 및 주요 협력 분야별 분석 등은 국내 문헌 및 통계자료, 현지 주요 국제기관이 발행한 자료, 현지 각국의 1차 문헌을 통해 우선적으로 수행했다.

둘째, 문헌조사의 단점인 비현장감을 극복하고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대중미 무역 및 투자 성과 등은 회수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일부 계량화했다.

셋째, 연구방향의 올바른 설정 및 적합성 검토, 연구 결과물의 유의성 검토 등을 위해 KIEP가 주관해 운용하고 있는 대외경제전문가풀과 중남미경제연구회 등 자문그룹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

넷째, 국내외 출장을 통해 주한 중미 각국 대사관 인사, 중미 관련 정책 당국자, 현지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인사 등과 면담을 실시, 그 결과를 양자간 협력 수요

및 분야를 발굴하는 데 활용했다.

다섯째,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본 연구의 특성을 감안하고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내 중남미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간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중미와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선정된 개발 협력, 중소기업 협력, IT 산업 협력, 녹색산업 협력 등은 외부 전문가에 연구를 위탁하여 그 결과를 별도 보고서로 출간했다.

마지막으로 연구 중간단계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결과의 실질적인 수요처인 정부, 기업,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내용을 질적으로 한층 보완하며, 연구결과를 확산 및 홍보하는 데 노력했다.

3. 선행연구 현황

그간 중미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해 역사도 일천하고 깊이나 수준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즉 대부분의 연구가 중미를 하나의 지역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남미지역에 부속된 소지역 개념으로 접근하거나, 연구의 내용도 국별 시장 리포터(투자 가이드) 혹은 이슈 리포터(CAFTA-DR, 중미통합 등)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원의 중미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박영호(1995년)의 연구(『中美共同市場(CACM) 및 會員國別 經濟現況』)를 시발로 2000년대에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협력 이슈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에 그쳤다. 2000년대 주요 연구로는 △ 김진오(2007)의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 김진오(2005)의 『대중미 경제협력 강화방안 연구 : 금융협력을 중심으로』 △ 김진오(2003)의 『미국의 대중미 및 카리브정책과 향후 미국·중미·카리브 관계 전망』

△ 김진오(2000)의『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및 활용의 중요성』△김원호·권기수(2000)의『미국의 중미·카리브지역 무역특혜조치(CBTPA)의 주요 내용 및 영향』등이 있다.

표 1-1. 선행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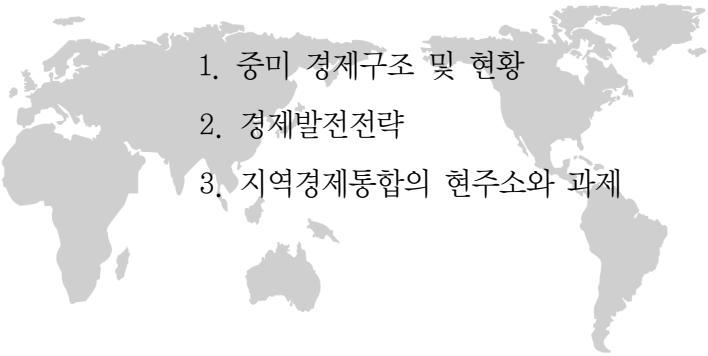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박영호(1995),『中美共同市場(CACM) 및 會員國別 經濟現況』 - CBI 수혜지역인 CACM 및 회원국에 대한 경제, 산업 현황, 투자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종합 정리,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문헌연구	- CACM 현황: 발전과정, 미국의 무역특혜 - 5개 회원국별 경제현황: 경제동향, 개혁정책, 산업, 교역 및 FDI 동향 - 한국과의 경협 관계 및 전망
주요 선행 연구	2	- 수출입은행(2005년),『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 국가 현황 및 진출방안』 - 2005년 VIP의 중미(코스타리카) 순방을 지원하는 보고서로서, 선행연구 1번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 문헌연구	- 중미 개관: 약사, 지역특성, 경제개황, 한국과의 관계 - 중미 지역기구 소개: SICA, CABEI, CACM, CAFTA-DR - 8개 회원국 정치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 - 한국-SICA 통상관계, 애로사항, 진출방안
본 연구		- 우리나라와 중미지역의 협력 여건을 종합적·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양 지역간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 제시 - 2010년 6월 VIP 순방의 후속사업과 연구결과를 연계시키는 방안도 모색함.	- 문헌연구 - 현지면담, 설문조사 - 정량적 방법론 - 공동 및 협동연구	- 중미 경제 현황 및 전망: 경제구조 및 특징, 경제통합, 경제발전전략 - 주요국의 대중미 협력: 협력 현황 및 전략, 시사점 - 한·중미 협력관계 평가: 분야별(무역 및 투자, 개발 협력, 중소기업 협력, IT산업 협력, 녹색산업 협력) 현황, 주요 이슈, 협력 확대방안

원외에서는 수출입은행(2005년)의『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연구가 유일하며,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2009년, 역서)의『중앙아메리카:

분열된 국가』가 출간되었으나 역사서를 번역한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미와의 경제협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즉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탈피하여 최근 투자 및 교역시장은 물론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한층 중요성이 더해진 중미지역을 종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망 협력 분야로 '무역 및 투자 협력', '개발 협력', '중소기업 협력', 'IT산업 협력', '녹색산업 협력' 5개 분야를 선정, 전문성이 높은 외부 연구진과 심층적인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협력방안을 발굴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중미 경제 개관



1. 중미 경제구조 및 현황
2. 경제발전전략
3. 지역경제통합의 현주소와 과제

1. 중미 경제구조 및 현황

가. 중미 경제의 특징

중미지역은 경제적으로 국별 차별성이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중미지역은 국토면적,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작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별 소득수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1]에서 나타나듯이, SICA 8개 회원국 GDP의 경우 벨리즈는 13.3억 달러, 도미니카(공)는 466억 달러로 큰 차이가 나며, 1인당 GDP도 니카라과는 1,080달러, 파나마는 7,150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1. 중미국가(SICA) 경제 개황(2009년 기준)

국가명	면적 (1,000km^2)	인구 (백만 명)	GDP[1] (억 달러)	1인당 GDP[1] (달러)	교역규모[2] (백만 달러)
코스타리카	50.7	4.6	293.0	6,370	19,713
엘살바도르	21.0	6.2	211.0	3,400	10,567
과테말라	108.9	14.0	373.2	2,670	17,962
온두라스	112.5	7.5	143.2	1,910	12,650
니카라과	130.0	5.7	61.5	1,080	6,314
벨리즈	23.0	0.3	13.3	4,430	1,003
파나마	75.4	3.4	243.2	7,150	24,389
도미니카(공)	48.4	9.8	466.0	4,760	17,779
SICA 회원국 합계	569.9	51.5	1,804.4	3,500	110,377

주: 1) 잠정치, 2) 상품교역(FOB) 기준.
자료: ECLAC(2010. 1), Statistical Yearbook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9, LC/G.2430-P/B; CEPAL(2010. 12),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ia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0; ECLAC(2010. 7), Economic Survey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9-2010, LC/G.2458-P.

둘째, 중미 경제는 대외의존성, 자원부족, 농업 및 저부가가치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인하여 외부충격에 쉽게 취약성을 나타낸다. 교역, 투자 및 경제원조 등에서는 과도하게 대외의존적이고, 화석에너지 자원이 전무 혹은 극소량 부존하며, 환경적 특성과 저개발로 산업구조 면에서 농업생산과 보세가공 수출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외화소득의 상당 부분을 부침이 심한 해외교포들의 송금과 관광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즉 1차 상품 및 보세가공품 수출구조, 미국 중심의 편향된 해외시장 구조, 재외국민들의 송금 및 관광수입 중심의 외화수입 구조, 에너지자원 순수입 등의 경제구조로 인하여 글로벌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1990년대 들어 정치적 안정기를 맞이하면서 다른 중남미지역과 비교해 볼 때 경제성장률은 다소 높게 유지되고는 있지만, 부침이 심한 가운데 지역의 최대 현안인 빈곤문제 해결과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표 2-2. 중미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명	1991~95	1996~2000	2001~04	2001	2003	2005	2007	2008	2009
MCCA	4,3	4.0	3.2	2.2	3.6	4.6	5.6	3.2	-1.5
코스타리카	5.5	4.9	3.7	1.1	6.4	5.9	7.9	2.6	-1.1
엘살바도르	6.2	3.1	2.0	1.7	2.3	3.3	4.3	2.5	-3.5
과테말라	4.3	4.0	3.0	2.3	2.5	3.3	6.3	4.0	0.5
온두라스	3.5	3.0	4.3	2.7	4.5	6.1	6.3	4.0	-1.9
니카라과	1.8	5.0	2.9	3.0	2.5	4.3	3.1	3.2	-1.5
벨리즈	4.2	4.8	6.0	5.0	9.3	3.0	1.2	3.8	0.0
도미니카(공)	4.1	7.7	2.1	1.8	-0.3	9.3	8.5	5.3	3.5
파나마	5.5	5.0	3.6	0.6	4.2	7.2	12.1	10.7	3.2
SICA	4.4	4.7	3.5	2.3	3.9	5.3	6.2	4.5	0.1
중남미	4.7	3.1	1.8	0.4	2.2	5.0	5.8	4.1	-1.9

자료: ECLAC(2010. 1), Statistical Yearbook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9, LC/G.2430-P/B; CEPAL(2010.12),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ia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0.

넷째, 서비스산업, 특히 호황을 맞고 있는 관광산업은 중미경제를 견인하는 중요 부문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남미 3대 문명인 마야문명을 비롯한 문화유적, 태평양과 카리브의 자연휴양지 및 생태관광지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각국은 전체 외화소득의 25~45% 수준에 해당하는 관광수입을 기록 중이고, 2009년 중미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약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다. 중미는 세계 면적의 2%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지형적·기후적 특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생물종의 12%를 보유하여 생태 및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중미는 지역경제통합의 선발 주자다. 중미는 19세 초 독립 이후 추진하였던 중미연방 건설의 이상을 달성하고, 협소한 시장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일찍부터 지역통합을 추진하였다. 1960년에 EU 모델을 본떠 중남미 최초의 지역경제통합체인 '중미공동시장(CACM)'을 결성하여 현재 불완전한 관세동맹 단계이지만 5개 회원국(SICA 회원국 중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 제외) 간에 △무역자유화 △비관세장벽 제거 △공동관세제도 및 세관통합 △노동이동 자유화 등을 통한 완전한 공동시장 구축에 노력 중이다. 또한 CACM을 근간으로 1991년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통합체인 중미경제체제(SICA)를 출범시켜 포괄적인 지역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역내 경제통합 외에도 중미지역 및 각국은 미국, EU는 물론 주요국과의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및 FTA 등을 통해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미지역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공통의 정치·사회·환경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빈번한 정쟁, 부정부패, 인권문제, 빈곤 및 양극화 문제와 같은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들을 지니고 있고, 무분별한 자연자원 개발과 환경관리 부재로 심각한 자연재해(지진, 허리케인, 홍수, 한발)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

나. 산업구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생산, 수출, 고용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중미지역에서는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다. 그러나 정치가 안정되고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진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높아지는 구조적 변화를 보였다. 특히 서비스업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져 대부분의 국가에서 50%를 상회하였고, 파나마의 경우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77%에 달하기도 했다. 국가별로는 과테말라,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의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2-3. 중미 국별 산업구조 추이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산업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코스타리카	농업	13	13	13	9	9	9	9	7
	제조업	22	22	23	25	22	22	22	21
	서비스업	57	58	57	58	62	62	62	64
과테말라	농업	24	24	23	-	15	14	12	12
	제조업	14	14	14	-	20	21	20	20
	서비스업	56	56	57	-	56	56	58	58
벨리즈	농업	17	18	17	17	15	16	15	12
	제조업	11	12	11	11	10	9	12	14
	서비스업	63	61	63	62	65	66	65	65
도미니카(공)	농업	10	9	9	7	7	7	7	7
	제조업	27	27	27	26	25	25	22	24
	서비스업	54	54	54	57	58	60	61	60
파나마	농업	8	7	7	7	8	8	7	6
	제조업	9	13	11	10	8	8	7	7
	서비스업	75	72	74	74	76	74	77	76

표 2-3. 계속

국가명	산업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온두라스	농업	24	22	19	16	13	13	13	14
	제조업	17	18	19	23	22	21	21	22
	서비스업	47	47	50	52	56	58	57	55
엘살바도르	농업	15	14	13	10	9	10	11	13
	제조업	23	23	23	25	25	24	22	22
	서비스업	55	56	57	58	58	60	60	58
니카라과	농업	22	25	23	21	19	19	20	-
	제조업	19	18	17	17	20	19	18	-
	서비스업	51	48	50	51	51	51	51	-

자료: World Bank.

1) 농업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이 중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농업의 중심도 곡물 등 내수용에서 비전통 수출부문으로 이동하였다. 1994년 중미 농축산업의 비중은 16.6%에서 2008년 11.4%로 축소되었는데, 니카라과와 파나마의 경우 2%포인트, 온두라스의 경우 10%포인트까지 낮아졌다. 이와 같은 농업 비중의 변화는 서비스업과 보세가공 수출산업 중심의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농업부문 지원 부족, 농업신용지원 부족, 국제농산물 가격 변동성, 자연재해 및 개발에 따른 농지 감소, 이농, 농촌사회의 교육 및 보건 인프라 부족 등 농업 자체의 문제들에 기인한다.

한편 비전통 수출 및 축산업의 성장이 농업구조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들 부문은 비전통 농업생산을 촉진하는 한편 쌀과 옥수수 등 기초곡물 생산 감소를 야기하였고, 결과로 중미에서 내수용 기초곡물 수입이 증가되었다. 생산구조의 변화는 농지활용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1995년 기준으로 내수용 작물 농지는 56%, 전통 수출용 작물 농지는 31%, 비전통 농작물 농지는 13%였으나, 2007년에는 54%,

30%, 16%로 각각 변화되었다.[1] 주요 농축수산물도 커피, 바나나, 설탕 등 전통적인 품목에서 어류, 수산물, 화훼, 장식용 식물, 열대과일, 낙농제품 등 비전통 품목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환경 변화 결과로 식용 농산물 생산은 줄어드는 반면,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업용 작물 생산은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05~07년 사이 중미의 농업 수출은 연평균 5.2%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기초곡물을 중심으로 11.4%나 증가하였다.

내수용 기초곡물의 수입 증가는 결국 중미지역에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2008년 4월 중미 농업 각료들이 식량생산 증대, 역내 식량 우선공급을 위한 역내 자유무역 확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지원 모색, 농업생산 품질 개선, 식량 재고·생산·교역·감시 정보 상시 교환체제 마련, 기후변화 분석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2] 식량위기에 대응한 역내 통합제도인 중미농업위원회(Consejo Agropecuario Centroamericano)는 통합시장 조성, 경제규모별 농업교역 전략 수립, FDI 유치, 국제협력 활용, 제3국 농업협상 능력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 2008-2017'을 수립했다.

2) 공업

중미의 공업은 전자, 의료장비, 화학 등으로의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제조업과 보세가공업에 집중되어 있다. 즉 내수용 중간재 및 가공식품 제조업과 의류산업 중심의 보세가공 수출산업(마킬라도라)의 중요성은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 1995~2007년 사이 연평균 4.3% 성장하고, 2007년 기준으로 역내 GDP의 21%를 차지했다. 특히 마킬라는 1990년대 들어 역내 내수 활성화와 자유수출공단

1) CEPAL, SIAGRO http://www.eclac.org/estadisticas/bases/ 참고.

2) CEPAL(2008), Subregión Norte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Información del Sector Agropecuario. Las Tendencias Alimentarias, 1995-2007, LC/MEX/L.874, p. 290.

(Zona Franca) 설립 촉진정책을 바탕으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수출의존성이 높던 미국시장 소비가 감소하고, 중국·동남아시아 등의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섬유 및 봉제 중심의 마킬라는 2000년부터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마킬라를 제외한 주요 제조업종은 식음료담배인데, 대부분 국내 및 역내시장 소비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중미지역에서 제조업은 국가별로 다소 특화되어 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에는 섬유·봉제업이 퇴조한 반면 반도체, 전자 및 의료장비 등이, 엘살바도르는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와 유사하게 섬유·봉제업과 식음료담배가, 중미지역에서 가장 산업이 낙후된 니카라과에서는 경공업이 주요 산업이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에서 자유수출공단(Zona Franca)과 마킬라는 1970년대부터 개발되었는데, 코스타리카에는 1981년에 도입되어 1990년대에 만개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 및 EU 시장에 대한 섬유 및 의류수출 규모를 제한한 WTO 섬유의류협정과 미국의 특혜제도(807/9802)가 중미지역에 봉제기업 설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3] 마킬라에서 초기에는 봉제업이 주력 업종이었지만,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국가마다 구조적으로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다. 코스타리카 마킬라의 경우 섬유·봉제업에서 전자업종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는데, 2006년 기준으로 마킬라 총수출의 49%를 전자업종이 담당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경우에는 섬유·봉제업이 마킬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가치화를 모색 중이다. 그러나 니카라과의 마킬라는 여전히 전통적인 봉제업에 집중되어 있다.

---

3) Padilla, Ramón, M. Cordero, I. Romero y R. Hernández(2008), “Evolución reciente y retos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de exportación en Centroamerica, México y República Dominicana: Una perspectiva regional y sectorial”, *Serie Estudios y Perspectivas*, no. 95, LC/MEX/L.839/Rev. 1.

3) 광업

중미지역은 최근 구리, 금, 은, 니켈, 납 등 금속광물과 석회석 및 건축자재 관련 광산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멕시코, 남미 국가처럼 주요 자원개발 대상지로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광업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부족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개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이하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 및 수출에 대한 기여도도 매우 낮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특히 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심하고, 노천광산 개발의 경우에는 법적 장벽이 매우 높다. 게다가 대부분의 광산이 국립공원으로 보호되는 위치에 입지해 있어 개발을 위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과테말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말 정부가 광업 관련 세율을 인하하고 개발허가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광업육성정책을 시행했지만, 정부와 원주민 및 환경단체들 간의 갈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온두라스의 경우에는 과거 광산개발이 야기한 환경파괴 경험으로 인하여 정부가 개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환경보호 조치와 귀금속 노천광산 개발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하였다. 금, 은, 석재, 대리석, 모래, 소금 등 주요 광물을 보유한 니카라과의 경우에도 개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다른 중미 국가들처럼 개발수요와 환경보호주의자와의 갈등으로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4) 에너지산업

중미지역은 에너지 순수입국으로서 석유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데, 과테말라만 소규모 유전을 개발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다. 2007년에 중미 전력산업은 석유에 38.3%, 재생에너지원에 59%, 그리고 석탄 등 기타 에너지원에 2.7%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석유에 60% 이상 의존하는 반면, 엘살바도르와 파나마는 30~45%, 코스타리카는 10% 수준으로

의존하고 있다.[4)]

중미지역은 석유에 대한 의존으로 인하여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무역 및 경상수지 악화, 물가상승, 산업활동 침체 등에 시달린다. 그리고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기 및 대중교통에 보조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가상승은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로 하여금 에너지원 다변화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였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2007년부터 북부지역에 한정하여 가솔린에 바이오에탄올을 7% 혼합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중미지역 차원에서는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등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역내에너지개발통합계획(Matriz de Acciones para el Desarrollo e Integración del Sector Energético Centroamericano)을 통해 역내 전력망 연결사업, 역내 정유 플랜트 개발, 역내 석유시장 통합 등에 노력 중이다.[5)]

5) 관광 및 서비스산업

관광산업은 중미에서 가장 역동적인 서비스업종이다. 2007년 기준 지역 GDP의 5%를 차지하였고, 세계관광기구(WTO)에 따르면 세계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0.86%에서 2008년 0.91%로 제고되었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의 관광산업은 GDP의 약 10%를 담당한다.

한편 지리적 위치, 우수한 언어활용 능력(스페인어 및 영어), 저임금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중미지역은 최근 들어 사업서비스 아웃소싱(BPO)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Help Desk Now, 24/7, Atente, Digitex, ACS, Exxon Mobil 등의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기업인 Transactel 등 역내기업들이 BPO

---

4) CEPAL(2009), La crisis de los precios del petróleo y su impacto en los paises centroamericanos, LC/MEX/L.908.

5) *Ibid.*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코스타리카가 주요 투자대상국이었는데, 콜센터의 경우 2006년 30개에서 2008년 80개로 급증하였다. 최근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비롯한 비용절감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대중미 BPO 투자는 증가 추세이다.[6)]

다. 수출 경쟁력 평가

[표 2-4]는 중미 각국과 한국의 대(對)세계 무역에서의 품목별 경쟁력을 보여준다. 현시비교우위(RCA)[7)] 지수에 따르면, 중미 국가들은 주로 1차 산품과 섬유·종이·목재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코스타리카가 전기·전자제품에, 도미니카(공)가 금속 및 철강에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미니카(공)의 금속 및 철강제품 수출은 주로 고철 수출이 차지한다. 한국은 중미 국가들이 경쟁력을 갖지 못한 전기·전자와 운송장비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양 지역의 무역구조가 상호 보완적임을 알 수 있다.

[표 2-4]는 또한 한국이 중미에 투자할 경우 국가·업종 선택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대중미 주요 투자업종인 섬유·봉제업의 경우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만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확대 가능성이 있고, 화학업종은 과테말라, 전기·전자업종은 코스타리카가 유리할 것임을 나타낸다.

---

6) Fonseca, Roberto(2009), “A full, desde el Istmo para el mundo”, Estrategia y Negocios, Febrero de. http://estrategiaynegocios.net/vernoticia.aspx?option=141&task=5

7) 온두라스와 벨리즈가 2008년과 2009년의 무역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아 2007년 SITC 2단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는 세계시장에서 품목별 각국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로, RCA 값이 1보다 크면 그 품목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4. 산업별 RCA 지수(2007년 기준)

품목[8]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한국
식품 및 산동물	12.22	5.37	1.81	3.34	6.37	8.27	13.44	15.58	0.14
음료 및 담배	0.16	0.43	10.09	2.02	2.65	5.31	6.06	1.55	0.23
비식용 원재료 (연료제외)	0.16	0.86	0.53	0.47	2.19	2.71	2.35	1.41	0.32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2.15	0.05	0.01	0.23	0.40	0.43	0.07	0.05	0.53
동물성 유지 및 왁스	0.01	3.77	0.59	0.63	4.15	11.20	1.81	1.17	0.02
화학물 및 관련 제품	0.07	0.60	0.28	0.94	1.01	0.46	0.36	0.29	0.95
섬유	0.00	0.55	1.91	1.83	1.48	0.18	0.44	0.89	1.51
고무, 제지, 나무 제품	0.19	1.47	1.13	1.74	1.11	1.00	0.19	1.14	0.62
금속 및 철강	0.02	0.40	2.40	0.61	0.54	0.24	0.18	0.11	0.94
전기·전자	0.02	1.31	0.79	0.22	0.10	0.45	0.03	0.00	1.45
운송장비	0.03	0.04	0.01	0.01	0.06	0.12	0.02	0.00	1.87
기타 제조제품	0.41	1.24	2.31	4.20	2.27	0.50	0.20	0.17	0.79
기타 분류되지 않은 상품	0.51	0.76	0.20	0.09	0.02	1.02	1.30	0.28	0.05

자료: UN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8) SITC 2단위를 기준으로 분류: 식품 및 산동물(00~09), 음료 및 담배(11~12), 비식용 원재료(21~29),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32~35), 동물성 유지 및 왁스(41~43), 화학물 및 관련 제품(51~59), 섬유(61, 65), 고무, 제지, 나무 제품(62~64), 금속 및 철강(66~69), 전기·전자(71~77), 운송장비(78~79), 기타 제조제품(81~89), 기타 분류되지 않는 상품(91~97).

라.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을 바탕으로 2005년 이후 연 5~6%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중미경제도 2008년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중미경제가 글로벌 위기로부터 받은 영향은 주로 유동성 감소, 총수요 감소 및 국제 상품가격 하락에 기인하고, 결과는 성장률 하락, 교역 감소, 관광산업 침체, 재외국민 송금 감소, FDI 및 기타 해외자본 유입 감소,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증가, 외환보유고 감소 및 환율상승 압력 등으로 나타났다.

1) 경제성장률

2008년부터 성장률 저하가 나타난 중미경제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수요 감소가 본격화된 2009년에 각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및 민간 경기전망 기관들의 예측치보다 악화된 저성장을 기록했다. [표 2-5]에 나타나듯이 엘살바도르의 -3.5%에서 도미니카(공)의 3.5% 범주 이내에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일부 국가는 성장하기도 했지만, 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경우 2008년과 비교할 경우 특히 저성장을 기록했다. 글로벌 위기 요인을 제외하고 성장률에 미친 특이 요인들을 지닌 경우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다. 엘살바도르는 잦은 정권교체와 세제개혁을 비롯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미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온두라스는 쿠데타 등 정치적 불안정에 이은 세계 주요국의 국경봉쇄의 영향을 받았다. 최근 연간 7~12%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파나마의 경우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 등 국책사업의 영향을 받아 성장은 했지만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혹은 BCIE)의 2010년 1월 월간경제활동지수(MEAI) 증가율이 전년 동기 -2.2%보다 개선된 1.5%로 나타나 중미지역의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9] 그러나 국가마다 회복 수준은 상이한데, 코스타리카의 경우 6.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엘살바도르는 -3.0%로 여전히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주요 국제기구들간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완만하고 점진적인 회복세를 기록하고, 국가들간 차별을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2-5. 중미지역 최근 경제성장 실적 및 전망

(단위: %)

국가명	2009년			2010년[4]		
	중앙은행[1]	IMF[2]	CEPAL[3]	CEPAL (ECLAC)	World Bank	IMF
과테말라	0.6	0.6	-1.0	2.0	2.0	2.5
엘살바도르	-3.5	-3.5	-2.5	2.0	1.2	1.0
온두라스	-2.1	-1.9	-3.0	1.5	2.1	2.0
니카라과	-1.5	-1.0	-1.5	2.0	1.7	1.8
코스타리카	-1.3	-1.1	-1.2	3.5	3.8	3.5
파나마	2.4	2.4	2.5	4.5	4.5	5.0
도미니카(공)	3.5	3.5	2.5	3.5	4.0	3.5
벨리즈	-0.0	-1.1	-0.5	1.5	1.7	1.0

주: 1) 각국 중앙은행 실적치, 2) 3) 추정치, 4) 전망치
자료: CEPAL(2010), Estudi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09-2010;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10: Crisis, Finance, and Growth ; IMF(2010. 4), World Economic Outlook.

2) 물가

2007~08년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강세로 중미지역 물가는 지속적인 상승압력을 받았지만, 글로벌 위기 이후 총수요 감소와 주요 원자재 및 곡물가격 하락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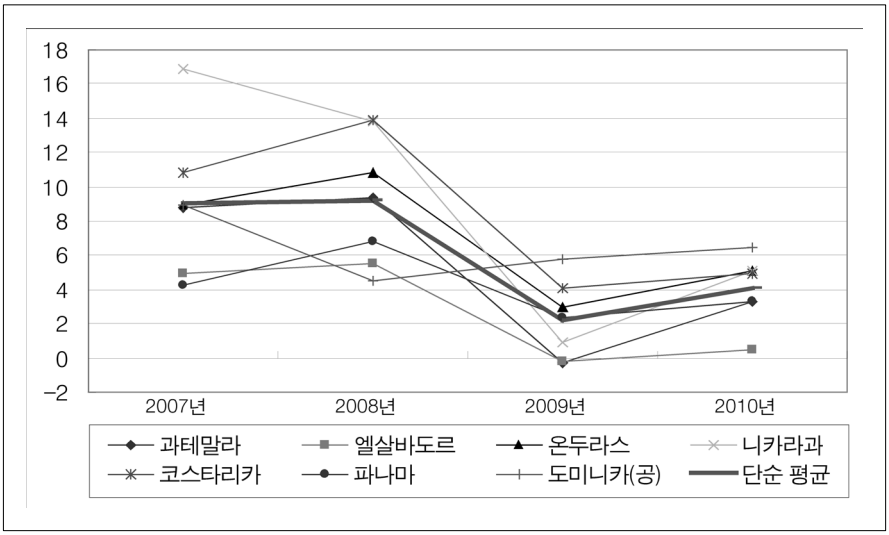
9) BCIE(2010. 4), Economic Trends & Outlook: Central America and Dominican Republic.

으로 2009년에는 급격하게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의 경우 10%대의 물가상승률에서 벗어나고,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디플레이션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미 및 세계경기 회복세와 석유, 원자재, 곡물가격의 완만한 상승세는 2010년 중미지역의 물가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BCIE(2010)에 따르면, 2010년 3월 기준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5.3%를 기록했다. 특히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코스타리카(5.8%)와 도미니카공화국(7.4%)에서 높게 나타나고, 경기침체를 지속중인 엘살바도르의 경우 가장 낮은 0.9%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를 지속할 경우 2010년 중미 물가 상승률은 예년의 절반 수준인 4%, 국가별로는 0.5~6.5%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림 2-1. 중미지역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적 및 전망

(단위: %)



주: 2010년은 IMF 전망치.
자료: 각국 중앙은행; IMF(2010. 4), World Economic Outlook.

3) 교역 및 자본이동

글로벌 총수요 감소, 특히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시장 및 중미 역내시장의 침체, 그리고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 가격 하락은 중미 교역 급감의 주된 요인이었다. 2009년에 중미의 수출은 12.3%, 수입은 23.5% 각각 감소했다. 국가마다 감소 수준도 차별적이었다. 수출의 경우 파나마와 도미니카(공)가 가장 심각하게 감소한 반면,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의 경우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수입의 경우 내수 감소와 외환 사정 악화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급감한 가운데 온두라스와 도미니카(공)가 특히 30% 이상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수출입 감소로 인하여 만성적인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는 개선되었다. 2010년 중미 교역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제회복 및 중미 경제회복과 더불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표 2-6. 중미지역 교역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명	수출			수입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과테말라	14.7	12.2	-6.5	13.9	7.2	-20.8
엘살바도르	9.2	6.6	-16.5	13.7	12.0	-25.6
온두라스	21.0	13.7	-20.1	20.2	29.6	-30.6
니카라과	14.7	8.3	-6.6	17.6	15.8	-21.9
코스타리카	13.9	1.8	-7.5	12.2	18.7	-25.9
파나마	10.1	10.4	-28.3	22.9	14.8	-13.4
도미니카(공)	8.3	-3.0	-27.0	11.7	18.4	-30.3
벨리즈	4.9	22.7	-20.4	10.9	-7.3	-21.2
지역	12.1	6.2	-12.3	14.9	15.4	-23.5

자료: CEPAL(2010), Estudi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09-2010.

표 2-7. 중미지역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대비 %)

국가명	무역수지(상품)			경상수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과테말라	13.1	1.6	-40.8	17.2	-0.7	-87.8
엘살바도르	16.2	7.0	-77.8	55.9	37.8	-77.8
온두라스	53.1	30.5	-39.0	176.2	61.3	-75.1
니카라과	21.2	25.7	-30.3	41.0	51.1	-47.4
코스타리카	9.5	68.0	-59.6	60.9	67.3	-77.0
파나마	86.0	42.5	-55.4	214.1	90.3	-99.9
도미니카(공)	15.7	43.6	-26.2	68.2	109.0	-48.6
벨리즈	16.8	42.6	-22.4	108.0	153.8	-29.5

자료: CEPAL(2010), Estudi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09-2010.

한편 세계금융시장의 유동성 압력과 중미 재외국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스페인) 및 일본의 노동시장 악화는 대중미 FDI, 송금 등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쳤다. UNCTAD(2010)에 따르면, 2009년 대(對)중남미 FDI는 유입기준으로 2008년 대비 36.4% 감소한 1,166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중미 FDI의 경우에는 대중남미 FDI보다 악화된 31.6% 감소한 7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엘살바도르는 45.0%, 정치적 혼란기를 겪은 온두라스는 44.4%, 코스타리카는 34.5%, 니카라과는 30.7%, 도미니카(공)는 27.4%, 파나마는 26.2%, 과테말라는 24.9% 각각 감소했다.[10] 재외국민 송금을 통한 자본이전도 미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건설 및 서비스업의 고용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2008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09년에는 전년대비 7.6% 줄어들었다. 송금은 중미 국가들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파나마 2%~온두라스 20%)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비의 주요 원천이

10) UNCTAD(2010. 7),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Investing in a Low-Carbon Economy.

다. 향후 대중미 FDI는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지속되고 지역 국가들의 신인도가 제고되지 않는 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러나 송금은 미국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동반한 중남미계 고용시장 안정으로 조기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8. 중미지역 FDI 및 재외국민 송금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FDI(유입기준)			송금(유입기준)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과테말라	745	754	566	4,236	4,460	4,044
엘살바도르	1,509	784	431	3,712	3,804	3,480
온두라스	928	900	500	2,625	2,869	2,553
니카라과	382	626	434	740	818	768
코스타리카	1,896	2,021	1,323	618	605	574
파나마	1,777	2,402	1,773	180	196	172
도미니카(공)	1,563	2,971	2,158	3,427	3,556	3,477
벨리즈	143	191	95	75	78	80
지역	8,942	10,648	7,280	15,613	16,386	15,148

자료: UNCTAD(2010. 7),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Investing in a Low-Carbon Economy; World Bank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ROSPECTS/Resources/334934-1110315015165/RemittancesData_Inflows_Apr10(Public).xls.

4) 재정

중미지역의 경기침체는 세수부족과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지출 증가를 야기하여 2009년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부문 임금 인상, 사회지출 및 보조금 증가, 공공부채 이자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테말라의 경우 낮은 외채상환 부담, 정부의 지속적인 긴축정책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이 1%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2006년 들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허리케인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의 1.9%까지 확대되었고, 이후 2008년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2009년에는 경기둔화 및 '1996년 평화협정 지원을 위한 특별세(IETAAP)' 종료 등으로 조세수입이 5.9% 감소하고, 공무원 임금인상, 경기부양책 실시 등으로 재정지출이 전년대비 6.5% 확대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인 -3.2%를 기록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를 예측한 정부가 2009년 5월 예산집행을 재조정한 동시에 GDP 대비 1% 규모의 세입을 확대하는 세제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2011년 9월 예정된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여소야대인 의회와 2010년 상반기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2010년 재정운영에 대한 압력은 높아질 전망인데, 과테말라 정부는 2009년 말에 세출예산을 재조정하고 2010년 4월에 재정채권을 대규모 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연재해 복구비용이 늘어나면서 World Bank를 비롯한 해외자본시장으로부터의 차입이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엘살바도르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정책 시행, 경제성장 및 세수개혁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 등으로 2004~07년 동안 재정적자 규모를 2% 수준으로 억제하는데 성공했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주요 세수가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은 오히려 소폭 증가함에 따라 2008~09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각각 GDP의 3.1%와 5.6%로 증가했다. 2009년 세입은 8.9% 감소한 반면, 세출은 4.3% 증가했다. 특히 2009년 6월 푸네스(Carlos Mauricio Funes Cartagena) 정부가 일반예산 15% 축소, 공공부문 고용 제한, 공공투자 집행 연기 등의 조치로 이전 정부가 시행했던 긴축조치를 확대했는데도 세출증가를 축소하지 못한 것이 두드러진다. 2010년 들어서는 1월부터 이자소득, 주류, 신차 등

에 대한 세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 시행으로 연간 GDP의 0.7%에 이르는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경기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기금 및 신탁기금 등의 공공부문 적자 축소를 통해 2010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4.7%로 억제할 계획이었는데, 이는 2010년 3월 IMF의 8억 달러 지원 조건에도 부합하는 수준이다.

온두라스는 최빈국 채무경감 프로그램(HIPC)과 다자 채무경감 프로그램(MDRI)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 감소, 세원확대를 위한 조세개혁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개선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젤라야(Manuel Zelaya) 전임 정부의 공무원 임금 인상 및 이자율 급등으로 인한 정부의 지출 증가(8.5%) 결과로 2009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6.2%로 급증했다. 정부는 정치위기 속에 해외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자 대부분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기대어 재정적자를 보전했다. 이와 같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두라스는 2010년 들어 세제개혁법(세입강화 및 세출합리화법)을 마련하여 2010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4.4%로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니카라과는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긴축정책과 재정개혁, IDB, WB 등 국제기구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2007년에는 1.3%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에는 지방선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축소, 조세개혁 지연 등으로 재차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공공기관의 전기료 등의 비용감축 노력을 통해 당초 목표인 -1.8%보다 양호한 -0.8%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0.7%)와 세수 감소(-3.9%) 그리고 선진국 원조 감소(-16.9%)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폭은 -1.5%로 확대되었다. 2009년 11월 법인세 인상, 자산세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향후 GDP의 0.7%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수입 증대가 기대되고, 2010년 4월 말 오르테가(Daniel Ortga) 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1~3월 세출증가율은 8.8%, 세입증가율은 경기회복으로 11.5%를 기록하여 재정에 대한 압력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코스타리카는 최근 재정수지에서 균형 또는 소폭 흑자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 대응으로 2009년에 대규모 경기부양책(Plan Escudo)[11]을 실시하면서 재정지출은 증가(10.7%)한 반면,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은 감소(-12%)하여 GDP 대비 -3.9%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 5월 출범한 친치야(Laura Chichilla)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전임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그대로 승계하여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공공부문 임금을 인상할 예정이어서 2010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2009년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이미 1~5월간 재정수지는 1.9%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파나마의 재정수지는 토리호스(Martín Erasto Torrijos Espino, 2004~08년)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정책을 바탕으로 대규모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마르티넬리(Ricardo Alberto Martinelli Berrocal) 정부가 출범한 2009년에 경제성장세 둔화와 함께 다시 적자로 반전되었다. 재정적자 원인은 공공채무 이자비용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사회 프로그램(Red Oportunidades) 실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었다. 2010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부가가치세(ITBMS) 인상(5%→7%) 및 면세 예정품목 과세 연장 등을 담은 세제개혁으로 예상되는 세수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사회지출, 공공부채 이자 등의 세출증가로 인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도미니카(공)의 재정수지는 2008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선심성 지출 확대, 전력 및 교통 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해 GDP 대비 -3.5%로 크게

11) 도로, 항만 등 인프라 투자확대와 사회보장지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은 대부분 국제금융기구의 신규 차입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확대되었고, 2009년에도 경기침체에 대응한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11월 IMF로부터 17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을 도입한 이후 재정지출을 늘림에 따라 2008년 수준으로 마감하였다. 2010년에는 경기회복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하반기부터 보조금 합리화, 조세행정 강화, 세출증가 제한 등의 재정정책이 강화되면서 재정수지는 2009년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벨리즈는 1999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재정정책 시행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하였고, 그 결과 국가채무도 누증되어왔다. 이로 인해 2007년 2월 민간

표 2-9. 중미지역 재정 및 외채 추이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비금융 공공부채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과테말라[1)]	12.8	12.0	11.2	14.3	13.6	14.3	-1.4	-1.6	-3.2	21.3	20.1	23.3
엘살바도르[2)]	18.0	18.2	17.0	19.9	22.5	7.5	-1.9	-3.1	-5.6	36.5	35.8	44.2
온두라스[1)]	19.1	19.7	17.4	22.2	22.2	23.5	-3.1	-2.5	-6.2	17.3	19.9	24.3
니카라과[2)]	33.4	32.4	32.7	32.1	33.1	34.1	1.3	-0.8	-1.5	44.0	40.1	45.3
코스타리카[2)]	26.6	26.8	26.0	24.8	26.9	30.1	1.8	-0.2	-3.9	31.8	29.9	34.1
파나마[1)]	19.2	19.7	18.3	18.0	19.4	19.8	1.2	0.3	-1.5	52.3	44.4	44.5
도미니카(공)[1)]	17.7	15.9	13.7	17.6	19.5	16.9	0.1	-3.5	-3.4	18.4	24.4	28.0
벨리즈[1)]	30.0	29.5	26.3	31.2	27.9	29.1	-1.2	1.5	-2.9	-	83.1	87.2

주: 1) 중앙정부 기준, 2) 비금융 공공부문 및 중앙기준 포함 기준.
자료: CEPAL(2010), Estudi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09-2010.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여 약 1.5억 달러의 채무를 삭감받았으나, 채무삭감 이후에도 국가채무 규모가 GDP의 87%(2009년)에 이르는 등 국가 채무부담이 큰 상황이다. 2008년에는 정부의 투자지출이 계획보다 적게 이루어져 재정수지

가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6.4% 감소하고 공무원 임금인상(9.3%) 등에 따른 세출이 2%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2.9%로 급증했다. 세수감소에는 주요 수출품인 석유관련 세입과 수입관세 감소가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2010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의 -2.1%로 예상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세 지연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09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2. 경제발전전략

가. 중미 공동개발정책

메소아메리카 통합개발 프로젝트(Mesoamerica Integration and Development Project 혹은 Mesoamerica Project, MP)는 중미지역 공동개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MP는 2001년 멕시코 폭스 대통령에 의하여 제안된 푸에블라-파나마계획(PPP)을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PPP가 에너지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연결 사업 수행으로 역내의 빈곤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수립된 반면, MP는 중미지역 통합이란 정치적 틀에서 특정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수행에 책임을 지는 운영수단, 지역 인프라, 연결, 사회개발 프로젝트의 개발, 금융조달, 프로젝트 실행 촉진, 수송 및 무역비용 경감을 통한 역내시장 연결, 무역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 증대 등으로 발전했다. PPP는 멕시코의 9개 남부지역과 중미 7개국으로 출발했으며 콜롬비아가 2006년에 정식 참여했다.

PPP 사업의 영속성 속에서 MP는 인적개발, 경쟁력 향상,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통신, 무역원활화, 자연재해예방, 교통 등 분야에서 약 100개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메소아메리카 고속도로 국제네트워크사업(RIC

AM),[12] 중미전력 통합체제(SIEPAC),[13] 메소아메리카 정보고속도로(AMI)[14] 등이 대표적인 인프라 사업이다. 인프라 이외에도 관광,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공동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SICA/SIECA 홈페이지에 각종 프로젝트들이 게재되고 있다.

한편 중미지역 관광산업 통합은 제도와 조직적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중미관광산업 통합사무국(SITCA: Central American Tourism Integration Secretariat)은 지역의 전반적인 관광정책에 책임을 지는 최고기구로서, 다른 부문들과의 조화를 위하여 중미통합기구 및 중미개발경쟁력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7개국 관광부 장관으로 구성된 중미관광산업위원회(Central American Tourism Council(CCT), Comprising an Executive Committee)는 집행기구로서 회원국 전략산업인 관광산업 통합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원활화 및 진흥에 노력 중이다.

나. 국별 경제발전전략

1) 코스타리카

다른 중남미 국가들처럼 코스타리카는 역사적으로 1차 산품 수출을 통해 발전해 왔다. 1600년대 초 남미지역에 대한 코코아 수출, 1700년대 말 니카라과, 파나마, 멕시코에 대한 담배 수출, 1830년 이후 국제시장에 대한 커피 수출, 그리고 19세기 말 이후 약 60년간 국제시장에 대한 커피 및 바나나 수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시대별로 주요 1차 산품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를 운용한 것 이외에 국가경제발전

12) 태평양 및 대서양의 양대 도로 13,000km 개보수, 2010년 완공 계획.

13) 2,000km 고압송전선을 2009년 완공, 이후 역내 소외지역까지 확대 추진 중. 이를 통해 15~20% 전력비용 절감과 지역의 경쟁력 개선 전망.

14) 광섬유 네트워크로 고품질 브로드밴드 접속.

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않았다. 정부가 인프라 개발(철도)과 천연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FDI를 유치한 사례는 1890년 United Fruit Co.의 바나나 대농장 개발에 불과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코스타리카의 개발 역사와 20세기 세계경제로의 편입 과정은 △1940~50년대 군대 해산 및 사회민주주의 체제 정비 △CACM하의 수입대체산업화정책(ISI) △1985년 이후 구조조정 정책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군대 해산으로 확보되는 재정을 사회정책에 투자함으로써 사회 인프라를 정비하고 정치·사회적 안정을 이룩했다. 이와 같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는 차별적인 정책은 ISI 시대에 코스타리카 경제의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외채위기로 인해 ISI가 한계를 보이자 개발전략도 변화되었다. 코스타리카는 1985년 World Bank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이후 생산부문에 대한 국가개입 축소, 국가주도적 정책개발 포기, 점진적인 시장자유화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 특히 자유화 전략은 대외무역 확대와 양질의 FDI 유치에 목표가 두어졌는데, 주요 수단은 지역경제통합 심화와 다수의 FTA 체결, 그리고 첨단 제조업 및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였다. 이와 같이 중남미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되는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안정, 민주주의 제도 구축, 확고한 대외지향적 성장 모델, 낮은 빈곤율 및 탄탄한 중산층으로 구성된 사회구조 등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코스타리카 경제는 성장률 둔화와 취약성을 보였다. 이에 코스타리카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2006년 출범한 아리아스(Oscar Arias, 2006~10년) 정부는 “Toward a Developed Costa Rica for the Bicentennial”라는 어젠다를 통해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정책들을 마련했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점진적인 물가안정 및 재정수지 적자 해소를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 △인프라 및 교육투자 확대 △생산부

문 R&D 강화에 기초한 국가경쟁력 강화 △성장전략과 연계된 사회안전망 강화 △역내 및 역외 경제통합을 통한 글로벌 포지션 및 FDI 유치 강화 등에 두어졌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의 목표는 아리아스 정부의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06-2010)에 통합되었다.[15)]

PND는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제시한 우선정책들과 새천년 개발목표(MDG)가 지향하는 정책들을 혼합한 전략적 실행방안인 사회정책, 생산정책, 환경·에너지·통신정책, 제도개혁, 대외정책의 5대 축과 16대 부문[16)]으로 구성되었다. PND의 목표는 국가적 목표,[17)] 5대 축별 비전, 16대 부문별 목표, 다수의 구체적인 전략적 정책별 목표로 제시되었다.

코스타리카 경제발전 전략은 PND 전체에 녹아 있지만, 2대 축인 생산정책에서 가장 선명하게 가늠할 수 있다. 생산정책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공공투자 억제를 회피한 재정균형 달성 △물가상승 억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실업 및 빈곤 감소 △R&D 능력 제고 △국제경제로의 편입 심화의 8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006~10년 아리아스 정부 기간 동안 달성할 10대 비전[18)]과 재정, 생산, 대외교역, 관광, 인프라 및 교통, 과학 및 기술, 노동 및

15) MIDEPLAN(2007), 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06-2010.

16) 환경, 과학 및 기술, 대외무역, 부처간 협력, 문화, 교육, 재정, 인프라 및 교통, 대외정책, 생산, 보건, 치안, 사회, 금융감독, 노동, 관광.

17) PND의 국가적 목표(Metas Nacionales)는 △공공부문 부패 척결 △빈곤 및 불평등 감소 △경제성장 및 고용촉진 △교육체계의 질적 향상 및 교육대상 확대 △범죄 증가율과 마약거래 및 사용 증가율 억제, 치안 개선 △공공제도 강화 및 지방분권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확대 △대외정책 품격 제고 및 국제역할 회복이다.

18) PND 생산정책의 비전은 △한 자릿 수 달성 및 지속가능한 재정수지 적자 축소 △PND 목표 이행 수준에 부합하는 공공투자 유지 △농축산업(유기농 포함), 수산업, 제조업,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 △수출 중소기업 2배 확대 △관광지로서 이미지 강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자연자원·환경적 지속가능성·지속적인 관광상품 혁신에 기초한 관광개발 모델 공고화 △도로망 여건 및 안전 개선, 전략적 도로건설사업을 통한 교통망 확대 △태평양 및 카리브 해 입지 항만의 생산성 및 능력 제고 △공식부문 고용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및 노동권 보장 △생산부문 혁신 및 R&D 강화이다.

사회보장, 통화정책 및 금융감독 8대 부문에 걸쳐 35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19]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8대 부문에서 58개 정책과 16개 제도개혁,[20] 그리고 '코스타리카 향후 200년'을 위한 2개의 국민과의 대화 과제(재정정책, 국가경쟁력 및 중소기업 개발정책)를 제시하였다. 새 정부가 출범한 2010년 현재 전임 정부의 PND에 대한 평가는 발표된 바 없지만, 작성 중인 새로운 국가개발전략(PND 2011-2014)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2) 엘살바도르

12년간의 엘살바도르 내전을 종식시킨 1992년의 평화협정은 사회 및 정치 부문에서 정치권력의 구조와 기능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특히 군부개혁의 일환으로 인권존중이 우선시되는 민간중심의 경찰제도를 완비했다. 특히 과거사 화해과정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시민의 참여 여지도 확대되었다. 경제부문에서도 성장을 위한 기초로서 단계별 개혁이 이루어진바, 우선 경제안정화를 위한 개혁에 이어 국가개입 감소, 민간중심의 시장경제 규칙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엘살바도르 경제개혁은 거시경제적 안정 속에 고성장을 달성하고, 자유화 및 개방화, 민간부문 생산성 증대 등에서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는 농촌사회의 만연한 빈곤, 환경문제, 경제적 취약성 등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다른 중미 국가들처럼 1998년 발생한 허리케인 미치(Mitch)와 최근의 글로벌 위기는 엘살바도르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

19) 생산정책의 부문별 구체적인 목표는 "PND 2006-2010"의 pp. 61~63 참고.

20)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각종 법 및 제도의 개정 및 제정에는 부가가치세법, 법인소득세법, 주택프로그램강화연대세법, 일반소득세법, 세법개정법, 조세투명성법, 납세자권리의무법, 생산부처(ministry) 설립, 개발은행법, 중소기업강화법 수정안, 바이오연료사용확대법, 경쟁력지원생산프로그램법, CAFTA-DR 비준 및 발효, Zonas Francas법 개정안, 관광산업 촉진 및 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가용재원증대법, 노동법 개정안 등이 있다.

평화협정 이후 제도정치권으로 유입된 파라분도민족해방전선(FMLN)의 정권창출은 엘살바도르의 정치적 안정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지표였다. 2009년 FMLN의 푸네스(Mauricio Funes)의 대통령 당선은 새로운 엘살바도르 건설의 지표이기도 했다. 그러나 푸네스 정부는 보수적인 야당의 의회 장악, 글로벌 경제위기와 미국경제 침체에 따른 경제난, 빈곤, 치안불안 등 다수의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이에 푸네스 정부는 2010년에 더욱 공정하고 연대적인 사회건설에 기여하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개발모델 건설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주요 수단들 가운데 하나로서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2010-2014)을 발표했다.[21] 이 계획은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부를 수용한 측면이 있다.[22] 비전, 우선정책, 목적 및 목표 등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은 정부정책의 응집력과 조정력을 확보하고, 국정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을 대통령에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2024년 장기목표로 민주주의의 공고화, 생산적·효율적·포괄적·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개발모델 건설도 이 계획의 주요 목표다.

경제적 차원에서 5개년 개발계획은 저임금 및 제도적 인센티브에 기초한 경쟁력, 저부가가치 소수 상품 및 특정 시장중심 수출구조, 거시경제적 및 재정적 취약성 등 엘살바도르 경제가 처한 상황이 최근 글로벌 위기로 역동성을 상실한 가운데

21) Gobierno de El Salvador, Plan Quinquenal de Desarrollo 2010-2014(2010).

22) 사카(Antonio Saca) 전임 정부의 국가계획(Plan País Seguro 2004-2009, Safe Country Plan)은 △국가기구 강화 및 현대화 △거시경제 안정 및 경제성과에 대한 공정한 참여 △국가경제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인적자원 개발 지원 및 인간 존엄성 제고 △환경 회복 및 보호 촉진 등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Plan País Seguro의 주된 목표는 거시경제의 건전한 운영,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 유지, 민간부문 개발, MDG 개발목표 달성 등으로서 포괄적이고 친빈곤층 중심의 성장정책(inclusive and pro-poor growth policie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카 정부는 가장 빈곤한 지자체 100개를 중심으로 미소 금융정책, 의료서비스 제고(FOSALUD), 교육의 IT화(CONÉCTATE), 청년 고용창출 프로그램, 사회서비스 품질 및 제공범위 확대(Redes Solidarias) 등을 포함한 Plan de Oportunidades(Opportunities Plan)를 실시함.

더 이상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좌파성향의 푸네스 정부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는 경제 및 사회개발 모델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경제로의 효율적인 편입,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및 고용창출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및 개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불평등, 사회적 소외, 빈곤을 완화하는 새로운 사회통합 모델 구축 필요성을 주창하였다.

5개년 계획의 경제부문 우선정책은 △농축산, 공업 부문의 재편 및 현대화를 포함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종합성장개발모델 기초 수립, 기업부문 기초 확대 및 강화, 생산조직 재편성 △장기적인 환경위험 효율적 관리, 자연재해 등에 노출된 인프라 재건, 생산 및 사회조직 재편성 △중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통합 촉진 등으로 압축되었다.

경제부문 우선정책은 △내수용 및 수출용 국내생산의 지속가능한 증대, 수입의 효율적 대체, 식량 및 농식품 수입 의존성 완화 △실업률 상승 추세 반전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 △조세수입 증대, 재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 및 외채 축소 △경제 인프라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2010~14년에 달성할 거시경제적 목표로 △빈곤율 12~15%포인트 감축 △연평균 성장률 4.0% △공공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통한 일자리 25만 개 창출 △상품 및 서비스 수출 20% 증대 △물가상승률 2.5%로 억제 △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2.0% 이하 축소 △공공외채 GDP 대비 46% 이하 축소 △전국 100대 빈곤 지자체 농촌지역 전력 공급률 95% 달성 △농촌 도로망 250km 확충 △전국 100대 빈곤 지자체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률 80% 달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거시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는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정책 △개발진흥금융제도 △생산개발전략 △거시경제적 공공정책 및 산업부문별 정책 △민주주의·치안·대외정책 △공공투자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였다.[23)]

3)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36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고, 1996년 평화협정(Peace Accords) 수립 이후에도 국내정치 및 사회적 안정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여 경제개발계획은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24] 이는 UN 등 국제기구의 감시와 지원 아래 내전의 원인으로 작용한 실업 및 빈곤 등의 사회적 소외와 토지제도 개혁 등을 통한 평화구축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즉 평화협정 이행 약속기간(1997~2000년)이 지난 이후 부족한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UN과 새로운 평화이행 일정(2000~04년)에 합의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은 과테말라 개발의 전환점이었고, 정치 및 사회적 안정을 위한 새 시대를 열었으며, 적절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놓았다. 2000년대 들어 과테말라 정부는 국가경제를 현대화하고 빈곤한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 따라서 경제개발정책의 우선목표는 빈곤경감, 원주민 및 여성권리 강화, 그리고 농촌지역 사회 및 경제개발에 두어졌다. 평화협정 아래에서 정부는 농촌지역에서 토지재분배 프로

---

23) Gobierno de El Salvador, Plan Quinquenal de Desarrollo 2010-2014(2010)의 Tercera Parte 참고.

24) 13개 하부협정과 300여 개의 이행약속으로 구성된 평화협정은 내전의 뿌리가 되었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실상의 국가재건 혹은 국가개발계획이었고, 경제, 사회, 인간개발, 공공부문 개혁, 사법 및 인권, 치안, 화해 등 다수의 정책실행안과 목표를 포괄한 광범위한 어젠다였다. 2005년 8월에는 평화협정에서 설정된 목표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절차 및 장치들을 규정한 기본법(Ley Marco de los Acuerdos de Paz)이 제정되었다. 과테말라의 평화협정과 새천년개발계획(MDG)은 원주민 정체성 및 권리협정(Accord on the Identity and Rights of the Indigenous Peoples), 사회·경제·토지소유권 협정(Accord on Social and Economic Aspects and Situation of Land Tenure), 내전으로 추방된 인구재정착 협정(Accord on the Resettlement of Displaced Population due to the Armed Conflict), 항구적 평화구축 협정(Firm and Lasting Peace Accord) 등의 이슈에서 유사성이 있다. 과테말라는 최빈개도국(HIPC)이 아니기 때문에 HIPC 국가들을 위한 PRSP와 유사한 빈곤경감전략을 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 11월에는 평화정책을 위한 빈곤경감전략(Strategy for the reduction of poverty, the way to peace)이 마련되었는데, 이 전략은 이후 몇몇 지방 및 시정부 전략으로 변모하기도 했지만 결국 시행이 중단되었다.

그램, 분권화 및 시민사회 참여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성 투자를 확대했다.

포르티요(Alfonso Portillo, 2000~04) 정부는 과테말라에서 처음으로 국가개발계획에 버금가는 프로그램(Government Plan for 2000-04)을 마련했었다. 이 계획은 경제위기 대응, 지방분권화로 강화된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그리고 법치강화를 통한 빈곤퇴치를 주된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사회정책,[25] 경제정책,[26] 치안[27] 등 부문별 공공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외에 정부는 빈곤을 80%까지 줄이고 교육, 보건, 주택, 고용, 농업, 여성문제, 교통, 환경 등에 집중한 사회정책(Social policy matrix 2000-2004)과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를 통한 여성참여정책(Equal Opportunity Plan 2001-2006)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평화협정 이행과 국가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그리고 재정적자 감축, GDP 대비 12%로의 세입 증대, 효율적이고 투명한 세정 확보, 부패퇴치 등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사상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부문별 131개 기구들과 세제협정(tax agreement)을 체결했다.

베르세(Oscar Berger, 2004~2008) 정부도 전임 정부와 유사하게 지속가능하면서 참여적인 사회경제적 개발에 초점을 둔 계획(Government Plan for the period 2004-2008)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세제협약, 재건프로그램(Vamos Guatemala), 빈곤퇴치 및 거버넌스·법치향상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정부는 경제활동 촉진과 사회적 조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Vamos Guatemala에 심려를 기울였다. Vamos Guatemala는 사회적 연대,[28] 경쟁력,[29] 성장[30] 3대 축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

25) 기초 사회서비스 및 주택 접근, 생산적 고용 촉진, 동등 기회.

26) 효율적인 세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중소기업 지원, 최저임금 심의, 안정적인 통화 및 환율정책, 은행 및 금융체제 개혁, 정부부채 감축, 생산성 개선 및 인프라 현대화.

27) 경찰 및 민간 보안회사 현대화 및 조정, 사법행정 개선 및 접근 향상.

28) *Guate Solidaria*(Solidarity Guatemala)의 과제: △취약 지방의 아동 영양불량 △고질적인 빈곤에서 고통받는 가정 △고용 및 취약성의 기초가 되는 교육 낙오 △효율적인 사회정책 개발을 위한

한편 콜롬(Álvaro Colom Caballeros, 2008~12) 현 정부는 출범 직후 단기계획(100일 계획, Actions of the first 100 days of Government)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032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인 희망계획(Plan of Hope 2008-2012)을 수립한바, 전임 정부 계획과 유사하게 연대, 거버넌스, 생산성, 지역주의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생산성과 관련한 비전과 실행안은 국가경제개발 정책으로 간주되는데, 공공재정, 경제정책, 자연재해 위험관리·예방·대응정책은 물론 거시경제적 안정 유지와 마킬라, 관광산업, 임업 등의 강화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창출 및 빈곤경감을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수립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친비즈니스적 환경 개발과 민간-공동파트너십을 통한 인프라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대외부문에서는 CAFTA-DR의 기회 활용, 신시장 개척(EU, 캐나다, CARICOM), 그리고 중미통합을 강조하였다.

4) 온두라스

온두라스는 중미지역 빈곤국 중 하나로, 약 780만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빈곤율이 매우 높고, 인구의 약 18%가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한다. 2007~08년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위기의 영향으로 온두라스의 수출주도 경제는 침체를 겪었다. 특히 경제난과 더불어 대통령이 축출되는 정치적 위기는 최근의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온두라스 정부가 직면한 최대 난제는 재정악화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보건, 교육 등 기초적인 사회서비스

문화적 다양성 및 특수성 보호

29) *Guate Compite*(Guatemala Competes)의 목표: △기술혁신 △수출촉진 △인프라 개선 △행정절차 장애물 제거 및 원활화를 통해 국내 및 국제 투자를 촉진시키는 비즈니스 성향의 사고방식 구축 등을 지원하는 체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30) *Guate Crece*(Guatemala Grows)의 목표: △공공 및 민간투자 강화 △교통 인프라(도로, 항만, 항공), 관광산업, 금융, 임업 등 국내경제 부문에서의 공공-민간 동맹 모색 촉진

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데,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25세 이하 청년층이 이와 같은 기초 사회서비스의 수요자라는 점에서 향후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촌인구의 증가도 자연자원에 기초하고 있는 온두라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과잉활용, 산림벌채, 근대식 농업방식 등으로 인한 토지 황폐화는 기후변화는 물론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농업생산 증대에 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낮은 생산성과 수입에 대한 의존성은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식품가격이 18% 상승하자 빈곤율이 4%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국가적 난제에 더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 수립 및 기획에 대한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2010년 들어 임시정부에서 로보(Porfirio Lobo Sosa) 정부로의 평화적 권력 이양과 지난 20여 년간 국제적인 지원에 힘입어 준비해온 국가 장기비전과 실전계획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2010년 1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국가발전계획(Visión de País 2010-2038 y Plan de Nación 2010-2022)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빈곤 없는 국가 건설 △민주적이고 안전한 폭력 없는 국가 건설 △고용과 건강한 환경에 기초한 생산적 국가 건설 △현대적인, 투명한, 효율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 건설이라는 4대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31] 또한 4대 목적에 22개 우선 목표를 설정했는데, 경제부문과 관련해서는 △공개실업률 2% 및 보이지 않는 불완전 고용율 5% 축소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GDP 대비 75%로 증대 △발전용 재생에너지 비중 80%로 증대 △100% 식량자급을 위한 관개농 40만 헥타르 확보 △수자원 이용률 5%에서 25%로 제고 △150만 헥타

31) República de Honduras, Visión de País 2010–2038 y Plan de Nación 2010-2022, Presentados para consideración del Soberano Congreso Nacional, Enero 2010 참고.

르 산림 생태복원 및 50만 헥타르 세계탄소시장 접근 △세계기후위험지수(GCRI) 50 이상 제고의 7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장기비전과 우선목표는 국가계획(Plan de Nación 2010-2022 및 2022-2034)에 설정된 11개 전략의 점진적인 집행으로 구체화되고,[32] 이행은 2010년부터 수립될 7개 정부별 책임 아래 11개 전략 하위에 설정된 58개 부문별 지표로 감시될 계획이다.

5) 니카라과

2000년에 최빈국 외채경감방안(HIPC)에 포함된 니카라과는 2001년 빈곤완화 전략페이퍼(SGPRS: Strengthened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를 채택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2004년 1월 HIPC 프로그램을 종결했다. 사회정책을 강조하는 SGPRS는 △경제성장 및 구조개혁 △인적자본 투자 △취약계층 보호 강화 △Good Governance 및 제도개혁을 축으로 경제성장, 형평성, 빈곤경감을 추구했다.

SGPRS 실행에 따른 일부 성과[33]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둔화와 빈곤퇴치의 실

---

32) 국가계획(Plan de Nación 2010-2022 및 2022-2034)의 11개 전략은 △인구의 지속가능한 개발 △민주주의, 시민권, 통치능력 △빈곤경감, 자산창출, 기회균등 △사회적 해방 수단으로서의 교육 및 문화 △생활조건 개선 기초로서의 보건 △개발요건으로서의 치안 △지역개발, 환경 및 자원 △경제활동 동력으로서의 생산 인프라 △국내저축 기초로서의 거시경제적 안정화 △경쟁력, 국가 이미지 및 생산부문 개발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을 말한다.

33) 2001~04년 SGPRS의 실행으로 경제적 안정, 생산부문 활성화, 외환보유고 증가, 수출증가, 저인플레이션, 환율안정, 금리하락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니카라과의 FDI는 중남미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무역은 가장 역동적이었다. 그러나 2000~03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커피가격 하락, 국제유가 상승, 은행부문 위기 등의 영향으로 2%에 그쳤다.(단, 2004년 GDP는 5.1%, 1인당 GDP는 7% 성장). 또한 교역조건 악화에 기인한 무역수지 적자로 2000~04년 GDP의 20%에 달하는 외환손실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최빈개도국 외채경감 프로그램(HIPC)은 채무상환 자금을 빈곤퇴치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예측치 못한 재정지출이 빈곤완화 정책에 투입되어야 할 자금으로 대체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사회부문에 대한 지출증가는 SGPRS가 기대한 목표를 일부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으나,

효성에 대한 반성이 일면서 국가개발계획(NDP: National Development Plan)을 2003~04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IMF와 협의된 거시경제정책을 포함한 실행계획(NDPo)이 2006년 1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SGPRS에서 NDP로의 이행의 핵심에는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의 기초가 되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쟁적인 환경구축과 지속가능한 사회개발이라는 이중적 과제가 있었다. 따라서 NDP는 장기 비전으로서 경제의 고성장 및 고용창출 달성을 위한 사회정책과 생산정책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NDPo는 부의 재분배 수단인 세제개혁 배제, 국민적 참여 및 논의 부족, 사회적 측면 및 빈곤보다 개발 잠재력이 있는 산업 및 경제성장 강조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국가개발을 위한 조치로서 높게 평가되었다. 즉 2006년 집권한 오르테가(Daniel Ortega, 2006~11) 좌파정부의 경우 NDPo 유지를 약속하고 정부 개발정책의 기초로 삼았다.

오르테가 정부의 국가인간개발계획(PNDH: National Human Development Plan)도 사회경제 프로그램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빈곤완화에 초점을 두고 매년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있다.[34] 경제적 측면에서는 거시경제적 안정 아래 국가 생산능력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 달성을 모색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MDGs에 부합하는 교육 확대, 문맹률 축소, 산모 및 아동사망률 감소, 상수도 및 위생 확충, 주택 보급 등을 강조하였다. 니카라과가 직면한 국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PNDH의 주요 비전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의 리더십 및 참여 확대 △빈민층을 위한

경제성장 둔화와 자연재해 및 금융위기 등 예측치 못한 환경은 완전한 SGPRS 목적 달성에 한계로 작용했다. 즉 이는 빈곤경감은 사회정책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담보되어야 가능함을 의미한다. Republic of Nicaragua, National Development Plan(2005. 11) 참고.

34) 2006년 시행 이후 매년 수정되어 온 NDPo에 대한 최근 자료는 Gobierno de Reconciliación y Unidad Nacional de Nicaragua, Plan Nacional de Desarrollo Humano Actualizado 2009-2011: Resumen Técnico(2009. 9) 참고.

공공정책 확대 △경제성장 강화 및 대외의존 축소 △시민참여(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전략 도입 △중소기업 잠재력에 기초한 생산전략, 식량주권 및 빈민층 자본개발 모색 등이었다. 이러한 비전 아래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실행정책으로 △인프라 개선 및 인적자본 개발을 통한 국가생산능력 촉진 △공공 및 민간투자의 발전부문 유인으로 에너지부문 기존 설비능력 및 효율성 제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및 석유 의존성 감소) △금융 및 기술 지원, 소규모 생산자를 위한 유통구조 개발 등을 통한 농업지원(식량안보 및 주권 강조) △상수도 및 위생 투자, 수자원관리 국가정책 개발 △새로운 무역협정(ALBA, MERCOSUR, EU, 아시아시장) 및 CAFTA-DR를 통한 대외시장 접근 개선 △해외시장 개발과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환경관리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빈곤완화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주요 접근방법으로는 △잠재생산자로서 빈민층 자본개발 △보건, 교육, 및 취약부문 기초서비스를 위한 직접 보조금 등 공공정책 실행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금융지원 촉진 △MDG 달성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빈민층의 적극 참여 △지방정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6) 파나마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 2009~14년) 정부는 전임 토리호스(Martín Torrijos, 2004~09) 정부의 개발계획[35]과 유사한 계획[36]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파나마 정부

35) '경제개발고용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Employment to 2009)'에서는 △지속가능한 인간개발 △인간중심의 경제개발 △기초서비스 및 인프라 △국가개혁이라는 4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원주민, 여성, 청소년, 장애인 중심의 빈곤퇴치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담았고, '기초서비스 및 인프라'에는 공공서비스 접근 강화, 파나마 만 등 오염지역 정화, 도로 및 주택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국가개혁'에는 세제개혁, 공공서비스 현대화 및 분권화, 사법기구 개혁, 부패 척결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한편 '인간중심의 경제개발'은 파나마 경제의 주요 부문인 무역, 항만, 금융 등의 활동 강화와 관광, 수산업,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창출을 강조했다.

36) "Panama, Plan Estratégico de Gobierno 2010-2014"는 경제 및 사회 전략, 재정 프로그램,

가 2008년 제정된 관련법(Ley 34, Responsabilidad Social Fiscal)에 따라 마련한 첫 사례인데, 집권기간 동안 경제, 사회, 재정, 투자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파나마를 2020년까지 "미주의 허브"로 변모시킨다는 목표 아래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비교우위 분야에의 우선 투자 △부의 재분배 개선 및 빈곤 경감을 위한 저개발 지역 및 사회계층에의 기회 제공 △지식화, 효율성 최대화, 사회적 포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제도 및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공정한 세정 및 부문별 경쟁력 유지 보장 △생산자 및 투자자 신뢰 증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안전하고 투명한 내수시장 강화 등의 경제 및 사회개발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 계획에 포함된 경제성장전략(Estrategia para el Crecimiento Económico 2010~14)의 목적은 지난 10년간의 고성장 이후 노출된 과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다.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가장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으로 선정된 물류, 관광, 농업,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가 집중될 전망인데, 정부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이들 업종의 미개발된 잠재력을 활용할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6~9%의 경제성장률과 86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성과달성을 위한 기초로 장기 인프라투자가 요구되는데, 마르티넬리 정부는 집권기간 계획한 총투자 136억 달러의 70%인 96억 달러를 인프라 부문에 투자할 예정이다.[37)]

7) 도미니카공화국

지난 40년간 도미니카공화국의 개발정책들은 제한적이나마 성공적이어서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 있지만, 그 한계도 보였다. 특히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한 저부가가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37) 96억 달러 가운데 58억 달러는 경제 분야(관개시설, 도로, 공항, 관광)에, 나머지는 사회 분야(학교, 병원, 주택, 상하수도, 지하철)에 투자할 예정이다.

치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수출이 지배한 최근 20년간의 경제발전 모델은 생산성 증대와 기술혁신에 그 한계를 보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출능력이 더디게 성장함으로써 외환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로 소비에 활용되는 해외동포 송금에 의존하게 되었다. 생산구조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았고, 생산체제는 내수부문과 수출부문으로 양분되는 특징을 지녔다. 즉 주요 수출부문도 전후방 산업연계 효과가 부족하고 인센티브 제도에 의존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환경과 공공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교육대상 확대와 인적자본 구축을 위한 투자부족이 경쟁력을 갖추고서 세계시장으로 진입을 가능케 하는 고기술 분야 투자유치를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한계는 교육·보건 등 사회정책에서도 나타난바, 공공투자에 기초한 양적 팽창에 비하여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각종 개발정책들의 한계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능력과 민간부문이 부를 창출하여 균형적으로 분배하는 능력을 제약하는 제도적·정치적 및 문화적 과제들에서 비롯되고 있다.[38]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페르난데스(Leonel Antonio Fernández Reyna) 정부는 2009년 1월 공표한 개헌안에 새로운 '국가개발전략(END) 2010-2030'을 제시하고, 2010년 현재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39] END가 제시하는

38) 2004년 이후 연임 중인 페르난데스 정부는 일반전략정책(General guidelines for a development strategy and international financing), 새천년 개발목표인 빈곤완화정책(Investing in Sustainable Development), 공공부문 개혁(Action Plan for Ethics, Preventing and Punishing Corruption), 다수의 부문별 정책(교육-Decennial Plan for Education, 보건-Zero Tolerance Strategy for Public Health, 경쟁력-Competitiveness Strategy) 등을 수립, 시행한 바 있다.

39) MINISTERIO DE ECONOMÍA, PLANIFICACIÓN Y DESARROLLO / CONSEJO NACIONAL DE REFORMA DEL ESTADO, DOCUMENTO BASE DE LA PROPUESTA DE ESTRATEGIA NACIONAL DE DESARROLLO 2010-2030: UN VIAJE DE

개발모델은 다음 내용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 인간개발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제시하였다. 효율성과 생산성 모색, 제도 강화, 공공정책 최적화 등은 복지서비스의 수단일 뿐이다. 둘째, 시장은 생산성과 개인의 노력을 촉진시키는 적절한 기제이지만, 스스로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정을 창출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의 역할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의 균형자인 국가의 효율적인 역할과 조화되어야 한다. 셋째, 정교하게 수립된 생산개발정책 활용을 통해 민간활동을 규제하고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는 강화된 국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로서 수출능력 촉진 및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능력 제고는 숙련노동력, 기술, 혁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생산능력 증대로 보완되어야 한다. 넷째, 이와 같은 생산개발정책은 기존의 경쟁력을 갖춘 생산활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화로의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수출촉진의 다음 단계는 농축산 생산과 국내산업을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재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거시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여 국가와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저축과 투자 능력을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최우선 과제인 FDI의 유치는 기술집약적인 생산구조로의 재편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여섯째, 국내저축을 확대하여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고, 경제정책과 생산개발정책은 현재와 같은 이중적인 생산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부문간의 연계 촉진과 고용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은 새로운 개발전략에서 수용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주된 지표가 될 것이다. 특히 고용창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중요함을 강조한다.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비용절감, 혁신, 위험분산 등의 기제로써 생산적 클러스트 전략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

TRANSFORMACIÓN HACIA UN PAÍS MEJOR.

국가는 세제와 고용정책 등의 수단을 통해 재분배정책을 수행하는바, 단기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보건, 직업훈련 등 공식적인 방안을 통해 단순한 지원보다 능력개발에 주안점을 둔 사회정책을 시행한다.

END는 정치,[40] 경제,[41] 사회,[42] 환경[43]의 4대 전략적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전략적 축은 다양한 총괄 목적을, 각각의 총괄 목적은 다양한 세부 목적을, 그리고 각각의 세무 목적은 다양한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이외에 각각의 전략적 축은 일련의 질적 목표와 수량적인 지표 및 목표를 동반 구성하고 있다.

3. 지역경제통합의 현주소와 과제

가. 역내 경제통합 현황

1) 중미통합의 역사

중미지역 통합은 식민시대 공동의 행정관할하에서 독립을 쟁취하고, 이후 중미연방을 형성하는 등의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한다. 근대적 의미의 중미통합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고, 2010년 현재에는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에서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미통합의 역사는 출범 및 확장기(1958~80년), 중단 및 후퇴기(1980~90년), 그리고 재활성화 및 세계화 시기(1990년~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

40) 책임 있고 참여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이면서 투명한 제도를 지닌, 안전을 보장하고 발전과 평화적 공존을 촉진하는 국가.

41) 적정의 고용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고성장을 창출하는 생산구조를 지닌,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경제로의 편입.

42) 균등기회, 낮은 빈곤율 및 불평등에 기초한 응집된 사회.

43)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기후변화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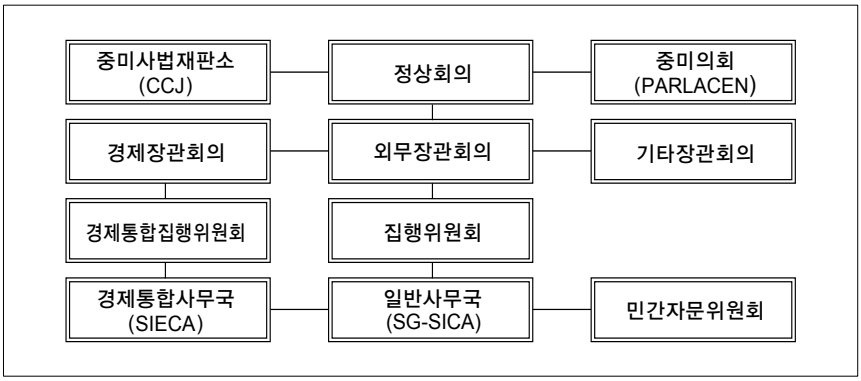
중미통합의 제도적 시발점은 1951년의 제1차 중미기구헌장(산살바도르 헌장) 조인 및 중미기구(ODECA: Organización de Estados Centroamericanos) 창설, 그리고 1962년 제2차 중미기구헌장 조인이다. 경제통합은 1958년의 중미자유무역경제통합협정(테구시갈파 협정)과 이를 개정한 1960년 중미경제통합일반협정(마나과 협정)을 바탕으로 중미공동시장(CACM),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중미경제통합은행(BCIE), 중미결제은행(Central American Clearing House), 중미통화안정기금(Central American Monetary Stabilization Fund) 등 설립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ODECA와 CACM 기능은 중미지역의 정정 불안, 역내국간 비대칭성 극복 한계, 외채위기 등으로 1980년대부터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1991년 중미 6개국(기존 5개국 및 파나마) 정상회의에서 조인된 제2차 중미기구헌장을 수정한 테구시갈파의정서를 바탕으로 ODECA는 SICA로 대체되고, 경제통합도 다시 활성화되었다.

SICA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통합을 통한 중미지역의 자유, 평화, 민주주의 및 경제발전 달성 △민주주의 강화 및 지역안보의 새로운 모델 구체화 △경제통합의 달성과 경제블록으로서의 지역 역할 강화 △회원국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조화 및 발전의 4대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SICA에서 중미 통합추진 실무는 일반사무국(SG-SICA)이 담당하고, 경제부문 통합추진 실무는 산하기구로 재편된 기존의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이 담당하고 있다. 테구시갈파의정서 6개 조인국 이외에 벨리즈(2000년)가 정회원국이고, 도미니카공화국(2003년)이 준회원국이며, 대만(2002년 4월), 스페인(2004년 11월), 멕시코(2004년 12월) 등이 옵서버로 참여 중이다.[44)]

44) 한국은 2010년 6월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외 옵서버 가입을 추진 중이다.

그림 2-2. SICA 조직도



자료: SICA 일반사무국(SG-SICA).

2) 역내 경제통합과정

중미 5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은 1951년 제4차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회의에서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형성 의지를 표명한 직후 채택한 '산살바도르 선언문'을 바탕으로 실무작업반인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합계획을 추진하였다. 1958년 6월 「중미자유무역 및 경제통합 다자조약」, 「통합산업협약」, 그리고 1959년 9월 「관세균등화협약」을 기초로 통합이 추진되었으나 회원국들이 비준하지 않아 무산되었고, 1960년 미국의 지원 아래 '3자간 조약(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제외)'이 체결되면서 경제통합 추진방향이 재정립되었다.[45)]

이어서 1960년 12월 니카라과의 마나과에서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중미 국가들이 3자간 조약에 역내 자유무역 규범을 포함한 「중미경제통합 일반협정(마나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1963년에 출범한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n Com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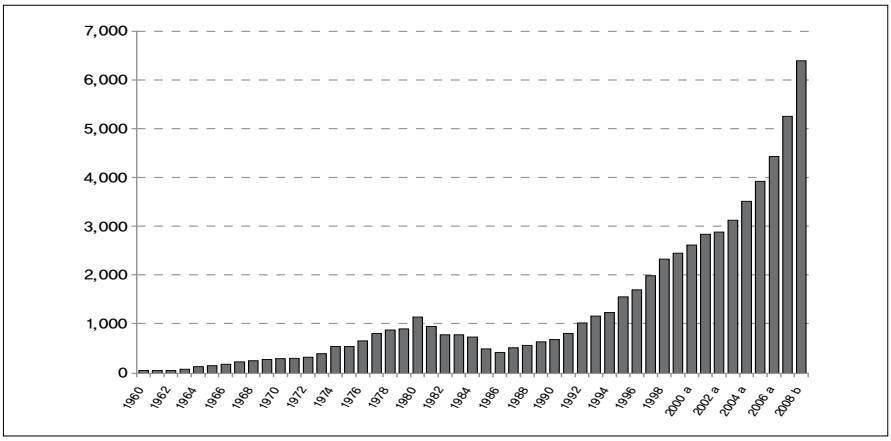
45) ECLAC의 설립 자체를 반대했던 미국은 중미의 경제통합 노력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자유무역 및 중미경제통합에 관한 다자조약」이 체결되면서 중미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Market)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협정은 역내 자유무역 실현, 대외공동관세(CET) 등 높은 수준의 통합목표를 설정하고 약 95% 품목의 관세철폐를 포함하여 1966년 7월까지 완전 무관세화를 명시했다.

그러나 공동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포함되지 않아 관세동맹 수준에 그쳤다. 중미경제통합의 출범 및 확장기(1958~80년)에 거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1960~70년 사이에 중미 역내교역은 3,100만 달러에서 2억 7,000만 달러로 연 20% 이상 증가하고, 1981년에는 11억 3,500만 달러(총수출의 18%)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역내교역도 20년간 총교역의 7.5%에서 25%로 증가하였다. 교역증가는 특히 중미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시기 중미는 연평균 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46)]

그림 2-3. 중미 역내교역 추이(1960~08년)

(단위: 백만 달러)



주: a는 잠정치, b는 추정치.
자료: SIECA.

46) CEPAL(2009. 12), La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 y sus Perspectivas frente a la Crisis Internacional, LC/MEX/L.954.

1960년대 말까지 95%에 달하는 무관세 교역을 달성함으로써 성공적인 통합 사례로 분류되었던 CACM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통합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회원국간에 해소하지 못함은 물론, 정정불안, 외채위기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중단되었다. 통합의 비대칭성에 따른 불균형은 출범 당시에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즉 중미 공동시장 출범 당시 ECLAC는 지역경제통합을 통해 역내시장 규모 확대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회원국이 특정 산업에 특화하는 지역단위의 수입대체산업화(ISI) 정책 추진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가 산업 유치와 무역수지 흑자로 경제통합에 따른 이익을 얻은 반면, 나머지 회원국들은 무역수지 악화 등의 비용을 지불하는 불균형이 초래되었던 것이다.[47] 이 시기에 중미 국가들은 역내교역보다는 역외교역에 더욱 집중하였다. 즉 1985년 역내교역은 총수출의 15%에 불과한 5억 4,400만 달러까지 감소하였다.

내전, 경제·사회적 혼란, 미국의 내정간섭 등으로 점철된 1980년대의 역사적 경험, 평화와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 그리고 세계화와 지역주의로 표현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개방과 역외시장 진출 모색 등이 중미 국가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와 1990년대에 지역통합을 재활성화시키는 기초가 되었다. 즉 1987년 결성된 국제중미부흥발전위원회 및 중미정상회의,[48] 1991년 중미통합체제(SICA) 출

47) CACM의 기능 중단 및 후퇴 원인으로는 △회원국간 무역 혜택의 불균형 △1단계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의 한계 △전통산업 통합을 통한 자원활용 합리화 방안 수용 거부 △새로운 협력분야 촉진 이니시어티브 부족 △중미경제체제 유동성 문제 등이었다. CEPAL(2009. 12), La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 y sus Perspectivas frente a la Crisis Internacional, LC/MEX/L.954.

48) 1990년 6월 개최된 8차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에서의 중미 위상 제고, 경제통합 추진과정 재구성·강화·재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미경제공동체' 설립에 합의하고, 중미경제실천계획(PAECA)을 채택하였다. PAECA의 목적은 새로운 경제통합 법적 기반 및 관세구조 마련과 공동대외정책 분석 등이었다. 1991년 7월 정상회의(온두라스 제외)에서는 다자간 자유무역 잠정협정이 체결되고, 지역통합 차원에서 중미농업실천계획(PAC)과 신CET가 채택되었다.

범을 통한 정치적 노력에 이은 1993년 역내무역 자유화와 최고 20%의 대외공동관세를 설정한 「중미경제통합 일반의정서(과테말라 의정서)」 채택은 CACM을 실질적인 공동시장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과테말라의정서는 자유무역지대에서 경제동맹에 이르는 각각의 통합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CACM은 역내무역 자유화와 대외공동관세 부과에 이어 점진적으로 완전한 관세동맹 결성, 공동관세 행정기구 설립,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단일통화 도입을 통한 통화동맹(monetary union) 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역내 경제통합의 최근 성과

가) 제도적 통합

SICA 체제하의 통합은 교역을 넘어서서 역내관계 긴밀화와 개방적 지역주의 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참여를 강조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SICA 체제 내에서 협상 중인 모든 협정에 참여할 의무가 없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 사례로서 파나마는 무역협정에만 참여하지 않았고, 코스타리카는 중미의회와 사법재판소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즉 새로운 통합방식은 국가개발정책에 우선순위로 인정되는 분야에 가입하여 통합을 심화시키는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회원국간 통합의 속도와 심도가 차별적이어서 통합 진척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합의 속도 차별성으로 인하여 CACM 내에서 소그룹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통합 가속화를 목적으로 각종 협정을 체결하여 1992년 북중미 3국 동맹(Triángulo Norte)을 결성하였고, 1993년에 니카라과가 참여하여 G-4(Grupo de los Cuatro)로 발전하였다. 또한 2009년 1월에는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가 인력 및 상품의 국경이동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동맹 협약을 체결하여 통합과정을 가속화했고, 온두라스

가 2009년 5월 28일 이에 가입한 데 이어 니카라과가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파나마, 벨리즈, 도미니카(공)는 관세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특히 파나마의 경우에는 1991년의 테구시갈파 의정서 비준으로 SICA에는 가입했으나 중미통합일반협정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CACM에서는 벗어나 있다.

나) 공동관세행정 및 부과

2010년 7월 SIECA에 따르면 공동관세행정은 중미통합각료회의(COMIECO) 결의안 223-2008 및 224-2008을 통하여 개정한 중미단일관세코드(CAUCA) 의정서 및 그 세칙들을 따르고 있다. 의정서와 규정은 의회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전체 회원국에 적용된다. 개정된 국제관세 이행체제에 관한 세칙(Reglamento sobre el Régimen de tránsito aduanero Internacional)은 관세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각료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2004년 승인된 관세절차 통합메뉴얼(Manual Unico de Procedimientos Aduaneros)은 CAUCA의 새 규정 및 세칙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2006년 3월 9일 중미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관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한설정을 통하여 관세를 조화시키는 일정을 개시했다. 중미는 대외공동관세제도(SAC)에 따라 0~15%의 대외공동관세율(자본재 0%, 원자재 5%, 중간재 10%, 소비재 15%)을 부과하고 있는데, 2010년 7월 현재 자동차를 제외한 총 6,389개 품목에 적용되어 대외공동관세율 부과율이 95.7%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4.3%에는 의약품, 금속제품, 석유제품, 농축산물 등이 포함된다.

다) 관세철폐

중미 5개국간에는 커피, 설탕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는 2006년 3월 개최된 중미정상회의에서 중미경제통합 일반협정 부속서

A에 포함된 품목들을 2006년 7월 31일까지 자유화하자는 합의에 따른 결과였다. 즉 전술한 합의에 따라 경제통합집행위원회는 2006년 6월 18일자 결의안 No.05-2006(CEIE)을 통하여 △증류된 알코올음료(온두라스-코스타리카, 온두라스-과테말라) △석유 부산물(온두라스-코스타리카, 온두라스-과테말라, 온두라스-니카라과)[49] △에틸알코올(코스타리카-과테말라, 코스타리카-온두라스, 코스타리카-니카라과) 등의 품목들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자유무역에서 제외된 중미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부속서 A 포함)은 설탕(5개국간), 볶지 않은 커피원두(5개국간), 석유 부산물(온두라스-엘살바도르), 에틸알코올(온두라스-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 간), 증류된 알코올음료(온두라스-엘살바도르), 볶은 커피원두(코스타리카-4개국 간)에 불과하다.

라) 조세 조화 및 조세수입 환급 장치

2006년 4월 25일 중미 각국의 국세청 및 관세청 간 상호지원 및 기술협력협약이 체결되었는데, 2010년 현재 과테말라만이 의회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2006년 6월 30일에는 중미관세동맹 회원국간 무역에 적용되는 내국세양립협약이 체결되었고,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만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SICA에 기탁한 상태이다.

마)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조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적용 기준 및 절차의 승인과 회원국간 동물 및 식물위생 검역당국간 협력장치 마련에 합의한 이후, COMIECO는 수입허가서 및 (식물)수출 위생증명서 구비가 필요 없는 상품 리스트와 관세동맹 영토 내 동물이동 위생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한 매뉴얼 등을 승인하였다.

---

49)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간 석유부산물 자유화를 위한 결의안은 계류 중이다.

바) 역내무역

경제통합체제(SIECA)에서 중미지역의 경제통합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중심의 자유무역지대에서 대외공동관세, 노동 및 자본 이동 자유화 등 관세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회원국 확대 등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파나마, 벨리즈, 도미니카(공) 등 회원국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통합의 성과는 기존 CACM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유무역지대를 평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로는 역내무역이 있다. 1960년부터 2008년까지 중미 역내무역은 [그림 2-10]에서 알 수 있듯이 1981~85년을 제외할 경우 역동적이었다. 2004~08년 사이에 역내무역 증가율은 연평균 16.5%, 2008년에는 전년대비 22.8% 증가한 65억 달러를 기록했다.[50] 2008년의 증가율은 주요 수출품인 농축산물, 가죽제품, 목제품, 신발 등 기타 제조품의 가격상승률(18%)이 수출량 증가율(4.8%)보다 높은 결과였지만, 2004년 이후 매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요 역내수출은 과테말라이고,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가 뒤를 따르고 있다. 반면 온두라스는 주요 수입국이고,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역내교역에서 수출과 수입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경우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불균형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코스타리카의 경우 최근에 주요 역내 수출국으로 변모했으나 수입에서는 규모가 가장 작은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역내교역 구조는 경제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회원국별 무역의 불균형, 즉 경제적 격차확대(divergence)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50) CAFTA-DR 회원국 가입 이후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과 CACM 가입을 준비 중인 파나마를 중미에 포함시킬 경우 역내무역 비중은 약 10%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표 2-10. 중미(CACM 기준) 역내교역 추이(2004~08년)

(단위: 백만 달러,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7/08
총수출(a)		20,716.7	22,707.8	25,172.3	28,262.3	30,934.8	9.5
역내수출(b)	금액	3,504	3,912	4,429	5,261	6,461	22.8
	b/a 비중	16.9	17.2	17.6	18.6	20.9	-
과테말라		1,248	1,404	1,578	1,876	2,221	18.4
엘살바도르		822	914	1,027	1,205	1,427	18.5
온두라스		311	345	411	562	873	55.5
니카라과		248	290	351	432	497	14.8
코스타리카		875	958	1,062	1,178	1,443	21.6

주: 마킬라 교역 제외, fob 기준.
자료: SIECA/DGTI, Sistema de Estadísticas de Comercio de Centroamerica(SEC).

표 2-11. 중미(CACM 기준) 국가별 역내 수출입 추이(2008년)

국가	수출(fob)		수입(cif)	
	금액(백만 달러)	비중(%)	금액(백만 달러)	비중(%)
총수출입	6,461	100.0	6,152	100.0
과테말라	2,221	34.4	1,451	23.6
엘살바도르	1,427	22.1	1,479	24.0
온두라스	873	13.5	1,693	27.5
니카라과	497	7.7	909	14.8
코스타리카	1,443	22.3	619	10.1

자료: SIECA/DGTI, Sistema de Estadísticas de Comercio de Centroamerica(SEC).

나. 역외 경제통합 현황 및 성과

중미 경제통합은 1980년대까지는 수입대체 산업화에 입각했다면, 1990년대부터

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기초하였다. 이에 역내통합을 재개 및 심화하는 동시에 대외적인 무역개방을 향한 전략들이 실행되었다. 이들 전략에는 관세인하 프로그램을 통한 일방적인 개방, UR 다자협상 참여 및 GATT 가입, 다양한 FTA 체결이 있었다.

1990년부터 중미 5개국은 멕시코(코스타리카 1995년, 니카라과 1998년,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 2001년),[51] 도미니카공화국(2001~02년), 파나마(엘살바도르 2003년, 코스타리카 2008년,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2009년, 과테말라 협상 중), 칠레(코스타리카 2002년, 과테말라 2010년, 니카라과 2010년 5월 협상 완료), 캐나다(코스타리카 2001년, 과테말라 및 니카라과 협상 중), 미국(CAFTA-DR, 2004~06년), CARICOM(코스타리카 2005년), 대만(과테말라 2006년,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2008년), 유럽연합(AACUE),[52] 싱가포르(코스타리카 2010년 4월 6일), 중국(코스타리카 2010년 4월)과 각각 FTA를 체결 혹은 협상을 완료하였고, 콜롬비아(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및 쿠바(온두라스)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FTA의 활성화는 중미 관세동맹 가속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AACUE 협상 사례의 경우 대외공동관세 설정, 상품 수출입 절차 기준 단일화, 세관 통일 및 원활화 등의 역내통합 협상에 기여했다.[53] 즉 CAFTA-DR 및 AACUE 협상 시 역내 수렴을 강조함으로써 역내통합에 진척을 보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FTA-DR, AACUE 및 기타 FTA에 중미 국가들과 협정 회원국들 간의 상이한 관세인하 및 철폐 절차의 존재는 중미의 대외공동관세 발전 및 관세동맹 심화에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중미지역의 역외 경제통합 효과는 교역 및 투자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CACM

51) Tuxtla 협정 회원국인 파나마도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논의 중이다.
52) 중미 6개국(CACM 5개국과 파나마)은 2010년 5월 EU와 연합협정(AACUE) 협상을 완료했다.
53) EU는 코스타리카 의회에 관세법 및 투자협정 승인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기준으로 수출은 1995년 93억 달러에서 2008년 309억 달러로 연평균 9.7%, 수입은 125억 달러에서 513억 달러로 연평균 11.6% 증가했다. 주요 교역상대국은 미국, 역내 회원국, 유럽으로서 2008년에 수출 기준으로는 30.3%, 20.9%, 9.8%, 수입 기준으로는 32%, 12%, 7%를 각각 차지했다. EU, 멕시코, 파나마, 도미니카(공), 베네수엘라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비중은 줄어드는 가운데 최근 중국과의 교역은 급증하고 있다. 즉 중미의 대(對)중국 수출은 1995년 역외 수출액의 1%에서 2006년 4.2%로, 수입은 0.3%에서 4.7%로 각각 증가한바, 최근 중국의 중미시장 진출 강화를 감안할 경우 2006년 이후 수출입 비중은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에 있어서 시장전환 효과가 두드러지는데, 중미의 미국 및 EU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1995년 44%와 11%에서 2008년 32%와 7%로 각각 하락했다.

한편 중미는 역내 투자재원의 부족을 FDI를 통하여 보완하였는데, 특히 수출부문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적극 노력해왔다. 특히 지역경제통합 및 FTA 등을 통한 시장개방정책은 FDI 유치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였다. FDI 유치를 위한 중미지역의 보세가공 수출공단 육성, 역외수출 진흥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그리고 저렴한 노동비용 및 대규모 소비시장 인접이라는 지리적 위치 등을 바탕으로 대중미 FDI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는 코스타리카의 경우(전자, 관광, 부동산)를 제외하고는 저부가가치 산업인 섬유·봉제 수출산업(마킬라)에 집중되어 왔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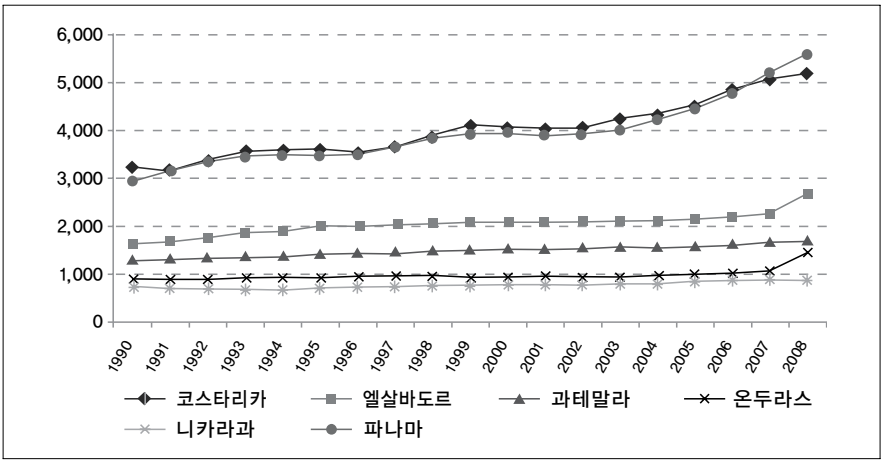
다. 경제통합의 문제점 및 과제

중미 경제통합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은 회원국간 격차 확대(divergence)이다. 예를 들면, 1인당 GDP 추이를 분석해 보면 3대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코스타리카 및 CACM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파나마와 도미니카(공), 엘살

바도르 및 과테말라, 그리고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간에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 중미 국별 1인당 GDP* 추이(1990~2008년)

(단위: 달러)



주: *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CEPAL.

이와 같은 경제적 격차 확대는 경제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에는 관세동맹에 적극 참여하는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코스타리카에게는 역내 이민정책(노동의 국경개방)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며,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에는 구조적인 역내교역 적자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미 경제통합 수준에서는 회원국간 격차 확대 추세를 전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EU의 사례처럼 중미에서도 수렴(convergence)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경제통합의 경험에서 볼 때 회원국간 수렴을 위한 공공정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자유화, 생산요소(저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등 시장에 기초한 공동

의 공공정책을 마련하여 역내 국민소득을 균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EU의 구조기금 혹은 결속기금처럼 자원의 이전에 의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중미지역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한계가 있고, EU와는 달리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이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을 역내에서 수렴정책으로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합의 수준을 전격적으로 촉진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글로벌 위기 영향과 각국의 대응정책에서의 한계는 경제통합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미국 일변도의 수출과 소규모 역내시장, 그리고 제한적인 수출상품으로는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데 정책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미는 역내·외 시장은 물론 수출품의 다변화 및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째, 미국과 EU 이외에 부상하는 신흥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변화를 위한 통상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역내의 저부가가치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내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국가 중심의 부가가치 사슬보다는 역내 중심의 부가가치 사슬을 구축하고, 산업 내 협력구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우위를 지닌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고 역내시장 개발을 위해 관광, 보험, 연안운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역내자유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분쟁 해결장치, 공동관세 서비스제도(aduanas yuxtapuestas) 강화, 각종 통상분쟁의 정치적 해결 관행 철폐 등의 역내 제도화 강화에도 한층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역내시장 확대 및 역내 경제성장 촉진의 한 방안으로서 협상 중인 파나마의 CACM 가입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 파나마는 CACM 회원국들과 쌍무 FTA를 체결한 데 이어 CACM 가입을 위한 준비로서 금융협력을 비롯해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왔다.[54] 그러나 장기간에 구축된 CACM의 모든 제도를 파나마가 전격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양측은 파나마

가입에 대해 점진적이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즉 CACM의 통합 정도로 볼 때 파나마가 일시에 모든 제도와 의무들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55]

마지막으로 중미 국가들은 다양한 역외 지역 혹은 국가들과 체결한 FTA에서 비롯되는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를 극복해야 하는데, 역내 원산지 누적 협정 모색, FDI 인센티브 제도 조정(규제 조화 및 공동유치) 등 기존의 무역협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일치 혹은 수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54) 특히 파나마의 대(對)코스타리카 교역은 대CACM 교역의 60%가 집중되어 있고,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사례처럼 인접국으로써 무역원활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 노동 다방면에서 협력을 제고시킬 여지가 매우 높다. 파나마와 CACM 관계에 대해서는 CEPAL(2009), Panamá y el Proceso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LC/MEX/L.946 참고.

55) 2009년 1월 15일 니카라과-파나마가 CACM-파나마 FTA를 위한 쌍무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제3장
주요국의 대중미 협력 전략 및 시사점

1. 미국
2. EU
3. 중국 및 대만
4. 일본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미국

가. 미국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1) 무역

중미 8개국이 미국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출과 수입은 아시아나 유럽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0년 미국의 대(對)중미 교역은 59억 달러에서 2009년 414억 달러로 약 7배 증가했다.

표 3-1. 미국의 대중미 교역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교역	478,310	910,126	2,010,570	2,636,971	2,956,360	3,180,120	3,466,210	2,660,630
중미	5,905 (1.2)	9,750 (1.1)	30,914 (1.5)	36,969 (1.4)	40,429 (1.4)	43,766 (1.4)	47,933 (1.4)	41,418 (1.6)
벨리즈	122 (2.1)	155 (1.6)	292 (0.9)	321 (0.9)	395 (1.0)	348 (0.8)	517 (1.1)	361 (0.9)
코스타리카	903 (15.3)	2,097 (21.5)	6,145 (19.9)	7,197 (19.5)	8,216 (20.3)	8,789 (20.1)	9,871 (20.6)	10,508 (25.4)
도미니카 공화국	1,623 (27.5)	3,485 (35.7)	8,897 (28.8)	9,430 (25.5)	9,997 (24.7)	10,419 (23.8)	10,686 (22.3)	8,691 (21.0)
엘살바도르	717 (12.1)	811 (8.3)	3,716 (12.0)	3,899 (10.5)	4,076 (10.1)	4,432 (10.1)	4,773 (10.0)	3,901 (9.4)
과테말라	1,018 (17.2)	1,632 (16.7)	4,624 (15.0)	6,155 (16.6)	6,845 (16.9)	7,345 (16.8)	8,443 (17.6)	7,280 (17.6)
온두라스	854 (14.5)	1,124 (11.5)	5,772 (18.7)	7,164 (19.4)	7,587 (18.8)	8,564 (19.6)	9,079 (18.9)	6,874 (16.6)
니카라과	476 (8.1)	83 (0.9)	975 (3.2)	1,847 (5.0)	2,336 (5.8)	2,553 (5.8)	2,862 (6.0)	2,388 (5.8)
파나마	193 (3.3)	363 (3.7)	494 (1.6)	957 (2.6)	979 (2.4)	1,317 (3.0)	1,703 (3.6)	1,416 (3.4)

주: 중미의 ( ) 안은 미국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개별국가의 ( ) 안은 중미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IMF(2010. 7), *DOTS*.

우선 2009년 미국의 대중미(8개국)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에 비해 -21.1% 감소한 216억 달러를 기록했다.[56] 이에 따라 중미 교역이 미국의 대(對)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같은 기간 중 중미 8개국을 개별적으로 보면, 미국의 수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코스타리카로 47억 달러(중미 전체 24.4%)며, 그 다음으로 과테말라 39억 달러(18.1%), 온두라스 34억 달러(1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미국의 대중미 상품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수출	221,073	393,106	772,280	904,431	1,037,100	1,162,710	1,300,190	1,057,050
중미	2,913 (1.3)	5,008 (1.3)	14,118 (1.8)	17,939 (2.0)	20,753 (2.0)	23,884 (2.1)	27,368 (2.1)	21,599 (2.0)
벨리즈	58 (2.0)	106 (2.1)	199 (1.4)	217 (1.2)	239 (1.2)	234 (1.0)	353 (1.3)	253 (1.2)
코스타리카	498 (17.1)	992 (19.8)	2,428 (17.2)	3,596 (20.0)	4,132 (19.9)	4,581 (19.2)	5,682 (20.8)	4,705 (21.8)
도미니카 공화국	795 (27.3)	1,658 (33.1)	4,423 (31.3)	4,708 (26.2)	5,348 (25.8)	6,091 (25.5)	6,599 (24.1)	5,270 (24.4)
엘살바도르	273 (9.4)	556 (11.1)	1,763 (12.5)	1,846 (10.3)	2,157 (10.4)	2,313 (9.7)	2,464 (9.0)	2,020 (9.3)
과테말라	553 (19.0)	759 (15.2)	1,880 (13.3)	2,813 (15.7)	3,518 (17.0)	4,076 (17.1)	4,721 (17.3)	3,901 (18.1)
온두라스	379 (13.0)	563 (11.2)	2,598 (18.4)	3,244 (18.1)	3,693 (17.8)	4,462 (18.7)	4,846 (17.7)	3,384 (15.7)
니카라과	250 (8.6)	68 (1.4)	378 (2.7)	620 (3.5)	755 (3.6)	890 (3.7)	1,093 (4.0)	715 (3.3)
파나마	109 (3.7)	307 (6.1)	450 (3.2)	896 (5.0)	911 (4.4)	1,237 (5.2)	1,610 (5.9)	1,353 (6.3)

주: 중미의 ( ) 안은 미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개별국가의 ( ) 안은 중미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IMF(2010. 7), *DOTS*.

56) 2009년 미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전년대비 -18.7% 감소하였다.

2009년 대중미 수입의 경우도 전년대비 -3.6% 감소한 198억 달러를 기록했다.[57] 따라서 중미 8개국이 대(對)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미 8개국을 개별적으로 보면, 8개국 중 미국의 수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코스타리카로 58억 달러(중미 전체 29.3%)며, 그 다음으로 온두라스 35억 달러(17.6%), 도미니카(공) 34억 달러(1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미국의 대중미 상품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수입	257,237	517,020	1,238,290	1,732,540	1,919,260	2,017,410	2,166,020	1,603,580
중미	2,992 (1.2)	4,742 (0.9)	16,796 (1.4)	19,030 (1.1)	19,676 (1.0)	19,882 (1.0)	20,566 (0.9)	19,819 (1.2)
벨리즈	63 (2.1)	49 (1.0)	93 (0.6)	104 (0.5)	156 (0.8)	113 (0.6)	163 (0.8)	108 (0.5)
코스타리카	405 (13.5)	1,105 (23.3)	3,717 (22.1)	3,602 (18.9)	4,084 (20.8)	4,209 (21.2)	4,189 (20.4)	5,803 (29.3)
도미니카 공화국	828 (27.7)	1,827 (38.5)	4,474 (26.6)	4,721 (24.8)	4,649 (23.6)	4,328 (21.8)	4,087 (19.9)	3,421 (17.3)
엘살바도르	444 (14.8)	255 (5.4)	1,953 (11.6)	2,053 (10.8)	1,919 (9.8)	2,118 (10.7)	2,309 (11.2)	1,881 (9.5)
과테말라	465 (15.6)	873 (18.4)	2,744 (16.3)	3,342 (17.6)	3,326 (16.9)	3,269 (16.4)	3,722 (18.1)	3,379 (17.1)
온두라스	475 (15.9)	561 (11.8)	3,174 (18.9)	3,920 (20.6)	3,893 (19.8)	4,101 (20.6)	4,234 (20.6)	3,490 (17.6)
니카라과	227 (7.6)	15 (0.3)	597 (3.6)	1,227 (6.4)	1,580 (8.0)	1,663 (8.4)	1,769 (8.6)	1,673 (8.4)
파나마	85 (2.8)	56 (1.2)	44 (0.3)	62 (0.3)	68 (0.3)	80 (0.4)	93 (0.5)	64 (0.3)

주: 중미의 ( ) 안은 미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개별국가의 ( ) 안은 중미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IMF(2010. 7), *DOTS*.

57) 2009년 미국의 대(對)세계 수입은 전년대비 -26.0% 감소하였다.

2) 투자

2009년 기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3조 5,081억 달러로, 중남미지역에 6,790억 달러(전체 19.4%)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 벨리즈 등 중미 8개국에는 전체 2.5%인 169억 달러가 투자되어 다소 미미한 수준이다.

표 3-4. 미국의 대(對)중남미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2,241,656	2,477,268	2,993,980	3,219,725	3,508,142
중남미	379,582 (16.9)	418,429 (16.9)	556,160 (18.6)	591,363 (18.4)	678,956 (19.4)
멕시코	73,687 (19.4)	82,965 (19.8)	91,046 (16.4)	89,610 (15.2)	97,897 (14.4)
아르헨티나	10,103 (2.7)	13,174 (3.1)	13,692 (2.5)	12,518 (2.1)	14,108 (2.1)
브라질	30,882 (8.1)	33,504 (8.0)	48,807 (8.8)	44,532 (7.5)	56,692 (8.3)
칠레	11,127 (2.9)	10,927 (2.6)	16,337 (2.9)	16,412 (2.8)	22,608 (3.3)
콜롬비아	4,292 (1.1)	3,799 (0.9)	4,552 (0.8)	5,553 (0.9)	6,728 (1.0)
에콰도르	941 (0.2)	904 (0.2)	1,007 (0.2)	1,092 (0.2)	1,269 (0.2)
페루	5,542 (1.5)	5,561 (1.3)	5,964 (1.1)	4,772 (0.8)	6,232 (0.9)
베네수엘라	8,934 (2.4)	10,922 (2.6)	12,871 (2.3)	13,473 (2.3)	14,506 (2.1)
중미(8개국)	9,623 (2.5)	9,456 (2.3)	12,138 (2.2)	15,232 (2.6)	16,902 (2.5)
코스타리카	1,598 (0.4)	2,105 (0.5)	2,267 (0.4)	2,596 (0.4)	2,419 (0.4)

표 3-4. 계속

국가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온두라스	821 (0.2)	864 (0.2)	626 (0.1)	787 (0.1)	844 (0.1)
파나마	4,826 (1.3)	4,636 (1.1)	6,171 (1.1)	6,236 (1.1)	7,845 (1.2)
벨리즈	80 (0.0)	- (0.0)	38 (0.0)	46 (0.0)	48 (0.0)
엘살바도르	934 (0.2)	626 (0.1)	1,490 (0.3)	3,329 (0.6)	3,478 (0.5)
과테말라	386 (0.1)	436 (0.1)	614 (0.1)	1,258 (0.2)	961 (0.1)
니카라과	163 (0.0)	- (0.0)	220 (0.0)	266 (0.0)	301 (0.0)
도미니카공화국	815 (0.2)	789 (0.2)	712 (0.1)	714 (0.1)	1,006 (0.1)
바베이도스	3,881 (1.0)	4,831 (1.2)	2,136 (0.4)	2,873 (0.5)	3,650 (0.5)
버뮤다	113,222 (29.8)	133,480 (31.9)	211,708 (38.1)	213,863 (36.2)	245,671 (36.2)
U. K. Islands, Caribbean	83,164 (21.9)	84,817 (20.3)	105,829 (19.0)	129,243 (21.9)	141,527 (20.8)

주: ( ) 안은 미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중남미 개별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2010. 9).

전술한 바와 같이 2009년 기준 미국의 대중미 8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69억 달러다. 국가별로 보면, 중미 8개국 중 가장 많은 직접투자가 이루어진 나라는 파나마로 78억 달러(중미 전체 46.4%)며, 엘살바도르 35억 달러(20.6%), 코스타리카 24억 달러(1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미국의 대중미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2,241,656	2,477,268	2,993,980	3,219,725	3,508,142
중미(8개국)	9,623 (100.0)	9,456 (100.0)	12,138 (100.0)	15,232 (100.0)	16,902 (100.0)
코스타리카	1,598 (16.6)	2,105 (22.3)	2,267 (18.7)	2,596 (17.0)	2,419 (14.3)
온두라스	821 (8.5)	864 (9.1)	626 (5.2)	787 (5.2)	844 (5.0)
파나마	4,826 (50.2)	4,636 (49.0)	6,171 (50.8)	6,236 (40.9)	7,845 (46.4)
벨리즈	80 (0.8)	- (0.0)	38 (0.3)	46 (0.3)	48 (0.3)
엘살바도르	934 (9.7)	626 (6.6)	1,490 (12.3)	3,329 (21.9)	3,478 (20.6)
과테말라	386 (4.0)	436 (4.6)	614 (5.1)	1,258 (8.3)	961 (5.7)
니카라과	163 (1.7)	- (0.0)	220 (1.8)	266 (1.7)	301 (1.8)
도미니카공화국	815 (8.5)	789 (8.3)	712 (5.9)	714 (4.7)	1,006 (6.0)

주: ( ) 안은 미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개별국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2010. 9).

나. 미국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150년 동안 먼로주의(Monroe doctrine)[58]는 미국의 대중남미 외교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과거 20년 동안 이러한 원칙은 점진적으로 구시대적인 정책이 되었다.

58)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불간섭주의를 표방한 미국 외교정책을 말한다.

1980년대 후반 들어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 대중남미 정책 우선순위는 ‘시장개방(open markets)’, ‘민주주의 강화(strengthening democracy)’, ‘마약과의 전쟁(stemming the flow of illegal drugs)’이었다. 이와 같은 3대 원칙은 과거 20년 동안 미국 대중남미 정책의 근간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대중미 협력에서도 동일한 기조이며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국의 대중남미 협력과 중미지역과의 협력전략을 병행하여 설명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미국은 중(남)미의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주력하였는데, 카리브유역 특혜관세(Caribbean Basin Initiative; 1983), 안데안 무역특혜법(Andean Trade Preference Act, 1991),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993), 미주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1994), 중미-도미니카공화국-미국자유무역협정(CAFTA-DR FTA: Central American-Dominican Republican-United States-Free Trade Agreement, 2007) 등과 같은 무역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중남미 지역 내 민주주의 강화는 조지 부시(George Bush, 1989~93) 대통령의 미주기구(OAS) Resolution 1080 채택에서 시작되었다.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 또한 중남미지역에서의 정치참여 확대와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한 정책을 지원해왔다. 예를 들면 1994년 UN의 후원 아래 민주적으로 치러진 아이티 대통령을 위해 2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장기간에 걸쳐 과테말라(1993년), 파라과이(1996년), 에콰도르(2000년) 등에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

마지막으로 마약과의 전쟁은 레이건(Ronald Reagon, 1981~89) 정부에서 확대되었다. 1988년 신설된 백악관의 국가마약통제정책실(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은 부시 및 클린턴 정부에서 지속되었는데, 부시 1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파나마, 콜롬비아까지 군사적으로 침공하여 마약 관련 주동자를 체

포하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코카인 생산 방지와 마약과 관련된 게릴라 소탕을 위해 2000년에는 콜롬비아에 13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대중(남)미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칠레(2004), CAFTA-DR(2007), 페루(2007)와의 FTA를 발효시킨 데 이어, 콜롬비아와 파나마와의 FTA를 체결하여 의회비준을 앞두고 있다. 한편 'Plan Colombia' 프로젝트에 4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로부터의 마약유입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3-6. 미국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2010년 9월 현재)

서명 완료 및 발효	협상 진행
- 이스라엘(발효 1985년 8월) - 북미자유무역협정(발효 1994년 1월) - 요르단(발효 2001년 12월) - 싱가포르(발효 2004년 1월) - 칠레(발효 2004년 1월) - 호주(발효 2005년 1월) - 모로코(발효 2006년 1월) - 바레인(발효 2006년 8월) - CAFTA-DR(발효 2007년 3월) - 오만(발효 2009년 1월) - 페루(발효 2009년 1월) - 콜롬비아(서명 2006년 11월) - 파나마(서명 2007년 6월) - 한국(서명 2007년 6월)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2010년 3월 1차 협상 시작)

주: CAFTA-DR은 발효일이 국가마다 상이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발효된 날짜로 표시(발효는 엘살바도르 2006년 3월, 온두라스·니카라과 2006년 4월, 과테말라 2006년 7월, 도미니카공화국 2007년 3월).

자료: 무역대표부(USTR)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한편 미국은 중미협력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이들 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였다.

우선 2005년 미국은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과 CAFTA-DR를 체결한 바 있다. CAFTA-DR는 미국 의회 비준을 둘러싸고 설탕 및 섬유업자들의 반발 속에서 진통을 겪었으나,[59] 2005년 6월 30일 미국 상원 통과(찬성 54 대 반대 45)에 이어 7월 28일 하원을 통과(217 대 215)하여 비준이 완료되었다. 이후 부시 대통령이 8월 2일 협정에 서명하고, 중미 각국의 의회비준을 거쳐 발효되었다.

표 3-7. 미 의회의 CAFTA 비준 표결 결과

상원			하원	
찬성	반대		찬성	반대
43	12	공화당	202	27
10	33	민주당	15	188
1	-	무소속	-	-
54	45	총투표수	217	215

자료: The Library of Congress(2005. 7).

CAFTA-DRA의 체결목적은 전술한 미국의 대중미 협력전략의 일환으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중미지역에서 경쟁적 자유화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요한 경제동맹 구축을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의도 아래 CAFTA-DR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중미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긴밀한 정치·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역거래와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미국가들이 국제 테러조직에 의해 이용되는 것

59) CAFTA 체결에서 비준까지 논란이 되었던 주요 이슈는△ 설탕, 옥수수, 콩 등 농산물 관련 이슈(특히 미국 설탕 생산농가 강력 반대) △ 섬유관련 이슈(미국 섬유생산업자들은 CAFTA 국가의 미국산 직물 사용 섬유제품의 무관세 대미수출에 강력 반대) △ CAFTA 체결 중미국가의 노동조건 악화, 환경파괴, 이로 인한 불공정 무역행위 등이었다(이준규 외 2005).

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중미국가들과의 CAFTA-DR는 중미의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통해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되었다. 더구나 민주주의 개선효과는 대부분의 중미국가들에서 경쟁정책, 관세, 부패 등을 축소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파악하였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중미국가들과 FTA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들 지역의 빈곤과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2. EU

가. EU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1) 교역

지난 10년간 EU(27개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중미의 비중은 약 0.4~0.5%로 매우 제한적이었고, 중미 교역에서 차지하는 EU의 비중은 10% 수준으로 안정적이었다. 역사적으로 중미 교역의 대부분은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차지했는데, 중미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EU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04~09년에 EU의 대중미 수출과 수입은 연평균 2.0%와 1.1% 증가에 그쳤지만, 글로벌 위기로 영향을 받은 2009년을 제외할 경우에는 연평균 7.4%와 5.8%를 기록해왔다. 중미는 1990년 이래 EU의 일방적인 특혜관세제도(GSP)를 바탕으로 수출에 혜택을 받았는데,[60] 이 결과 EU는 전통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EU의 대중미 수출

60) 2005년부터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GSP+ 제도를 적용받았는데, GSP+는 기존의 GSP와는 달리 지속가능한 개발과 Good Governance 촉진을 약속한 국가에 대한 시장접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은 파나마에, 수입은 코스타리카에 집중되어 있다. EU의 대중미 수입은 커피, 바나나, 설탕, 기타 과일 등 농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출 품목은 대부분 기계류, 화학제품, 선박 및 보트, 자동차, 연료 등이었다.

표 3-8. EU(27개국)의 대SICA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유로, %)

국가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가율 (09/04)
코스타리카	수출	750	814	1,092	943	823	587	-4.8
	수입	3,080	3,052	3,018	3,000	3,181	2,782	-2.0
엘살바도르	수출	407	391	714	557	561	311	-5.2
	수입	182	228	180	196	235	199	1.8
과테말라	수출	542	538	685	667	558	492	-2.0
	수입	260	318	357	337	389	358	6.6
온두라스	수출	396	361	290	351	341	229	-10.4
	수입	336	382	449	436	483	518	9.0
니카라과	수출	108	115	104	129	126	105	-0.6
	수입	87	102	120	143	187	166	13.8
파나마	수출	1,706	1,492	1,975	2,613	2,669	2,484	7.8
	수입	488	748	1,005	618	837	549	2.4
도미니카(공)	수출	706	803	883	1,022	1,048	858	4.0
	수입	447	476	665	807	797	595	5.9
벨리즈	수출	41	101	58	77	64	71	11.6
	수입	81	106	88	90	102	94	3.0
SICA	수출	4,656	4,615	5,801	6,359	6,190	5,137	2.0
	수입	4,961	5,412	5,882	5,627	6,211	5,261	1.2
비중*	수출	0.5	0.4	0.5	0.5	0.5	0.5	
	수입	0.5	0.5	0.4	0.4	0.4	0.4	

주: * EU의 총수출 및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대SICA 수출입.
자료: EUROSTAT.

표 3-9. EU(27개국)의 대SICA 품목별 수출입 추이

(단위: 천 유로, %)

SITC(0~9)	수출				수입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식품, 동물	275,953	4.5	239,272	4.7	2,672,543	43.3	2,493,208	47.3
음료, 담배	174,822	2.9	140,323	2.8	163,223	2.6	171,689	3.3
원자재(연료 제외)	45,404	0.7	42,485	0.8	211,826	3.4	181,292	3.4
연료, 윤활유	251,361	4.1	126,649	2.5	41,307	0.7	3,176	0.1
동식물성 유지	15,087	0.2	14,197	0.3	41,622	0.7	58,055	1.1
화학제품	874,441	14.3	840,570	16.6	88,311	1.4	145,184	2.8
제조품	555,183	9.1	443,411	8.8	286,535	4.6	40,229	0.8
기계, 수송장비	3,348,970	54.6	2,725,430	53.9	2,363,364	38.3	1,832,965	34.8
기타 제조	507,839	8.3	410,373	8.1	261,955	4.2	309,158	5.9
기타	83,373	1.4	74,837	1.5	36,185	0.6	32,824	0.6
총계 *	6,132,433	100.0	5,057,547	100.0	6,166,871	100.0	5,267,780	100.0

주: * EU의 대파나마 자유무역지대 수출입 제외로 규모의 차이가 발생함.
자료: EUROSTAT.

표 3-10. EU(27개국)의 대SICA 세부 품목별 수출 추이(2009년)*

(단위: 백만 유로, %)

SITC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총계
1000-1차상품	59.3	172.8	34.8	79.5	27.6	12.7	190.3	576.9
1100-농산물	44.1	152.1	18.6	42.6	23.4	11.0	122.3	414.0
1110-식품	32.6	149.3	18.0	31.7	17.5	10.3	119.7	379.0
1111-수산물	2.2	1.6	2.1	0.1	0.2	0.0	2.6	8.7
1112-기타 식품 및 생동물	30.4	147.7	15.9	31.5	17.3	10.3	117.2	370.3
1120-원재료	11.5	2.8	0.6	10.9	5.9	0.7	2.5	35.0
1200-연료 및 광물	15.3	20.7	16.2	36.9	4.2	1.8	68.0	162.9
1210-원석, 기타 광물	1.2	2.0	0.2	0.3	1.3	0.1	1.6	6.7
1220-연료	11.5	13.6	1.9	32.2	2.4	1.2	63.5	126.3
1221-석유, 석유 부산물	11.2	13.6	1.8	32.1	2.1	1.2	63.4	125.4

표 3-10. 계속

SITC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총계
1222-기타 연료	0.3	0.0	0.1	0.1	0.2	0.0	0.1	0.9
1230-비철금속	2.6	5.1	14.1	4.4	0.5	0.4	2.9	30.0
2000-제조품	492.9	643.3	262.9	378.1	184.2	80.6	2,237.8	4,279.8
2100-철강	19.8	19.0	7.5	5.8	3.6	1.7	13.6	70.9
2200-화학제품	122.0	95.4	60.6	124.7	50.4	18.2	332.8	804.0
2210-의약품	54.7	27.4	20.4	35.9	15.6	6.1	170.2	330.4
2220-플라스틱제품	13.0	20.6	5.9	12.8	5.5	3.0	8.0	68.8
2230-기타 화학제품	54.3	47.4	34.3	75.9	29.3	9.0	154.6	404.8
2300-기타 반제조품	50.5	113.0	18.5	33.5	16.0	6.9	52.3	290.7
2400-기계, 운송장비	230.5	302.6	152.6	171.3	99.1	41.8	1,682.9	2,681.0
2410-사무, 통신장비	48.1	37.9	18.8	28.1	27.9	9.0	24.1	194.0
2411-전자데이터처리 장치, 사무장비	16.0	6.8	2.6	5.3	2.1	0.8	2.6	36.3
2412-통신장비	14.2	30.4	15.8	22.6	25.7	8.1	20.5	137.3
2413-반도체, 전자부품	18.0	0.7	0.3	0.2	0.0	0.1	1.0	20.3
2420-운송장비	24.6	64.9	58.1	50.2	17.2	5.7	1,502.0	1,722.8
2421-자동차	18.0	32.3	3.7	29.1	9.2	3.1	37.8	133.2
2422-기타 운송장비	6.6	32.6	54.4	21.1	8.0	2.6	1,464.2	1,589.6
2430-기타 기계류	157.7	190.6	75.7	93.0	54.0	27.1	156.8	755.0
2431-발전기계	30.9	23.6	5.0	11.2	4.8	5.2	13.9	94.6
2432-비 전기기계	83.0	137.6	52.0	67.1	42.2	17.7	118.1	517.6
2433-전기기계	43.8	29.4	18.7	14.7	7.0	4.2	24.9	142.7
2500-섬유	3.4	17.3	4.7	4.5	1.0	0.2	5.2	36.5
2600-의류	3.6	6.1	1.4	3.3	1.8	0.3	17.3	33.9
2700-기타 제조품	63.0	89.9	17.5	35.0	12.1	11.5	133.6	362.7
2710-개인, 가정용 상품	6.2	14.9	0.8	3.2	0.6	1.1	20.8	47.6
2720-과학, 제어기기	19.5	20.6	6.0	7.2	2.8	3.7	15.0	74.9
2730-기타 제조품	37.2	54.3	10.7	24.6	8.7	6.7	97.8	240.2
3000-기타	8.4	18.2	3.0	9.4	7.4	8.7	20.6	75.9

주: * 벨리즈 제외.
자료: EUROSTAT(Comext, Statistical regime 4).

표 3-11. EU(27개국)의 대SICA 세부 품목별 수입 추이(2009년)*

(단위: 백만 유로, %)

SITC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총계
1000-1차상품	1,178.6	375.6	165.1	266.5	465.1	133.9	203.9	2,788.6
1100-농산물	1,177.0	369.3	164.5	264.4	462.3	133.9	200.0	2,771.4
1110-식품	1,094.0	367.2	160.0	222.8	446.8	132.0	199.8	2,622.7
1111-수산물	6.1	0.2	59.3	39.5	47.3	34.6	33.7	220.8
1112-기타 식품 및 생동물	1,087.9	367.1	100.6	183.3	399.5	97.3	166.1	2,401.9
1120-원재료	83.0	2.1	4.5	41.6	15.4	1.9	0.2	148.7
1200-연료 및 광물	1.6	6.2	0.6	2.1	2.8	0.0	3.8	17.3
1210-원석, 기타 광물	1.3	5.6	0.6	1.7	2.8	0.0	1.4	13.5
1220-연료	0.0	0.6	0.0	0.0	0.0	0.0	2.3	2.9
1221-석유, 석유 부산물	0.0	0.5	0.0	0.0	0.0	0.0	1.7	2.2
1222-기타 연료	0.0	0.0	0.0	0.0	0.0	0.0	0.7	0.7
1230-비철금속	0.3	0.1	0.0	0.4	0.0	0.0	0.1	0.8
2000-제조품	1,589.5	209.4	32.9	72.1	46.1	31.4	339.6	2,321.0
2100-철강제품	0.0	0.0	0.0	0.0	0.0	0.0	0.8	0.9
2200-화학제품	24.4	32.8	6.0	54.5	0.9	23.9	2.3	144.8
2210-의약품	1.6	25.1	0.0	0.0	0.0	0.0	0.1	26.8
2220-플라스틱제품	0.0	1.8	0.0	0.1	0.1	0.0	0.0	2.0
2230-기타 화학제품	22.8	5.9	6.0	54.3	0.8	23.9	2.2	115.9
2300-기타 반제조품	10.8	1.6	4.0	4.5	1.9	0.6	5.0	28.4
2400-기계, 운송장비	1,424.5	58.3	12.6	2.9	12.0	0.7	321.7	1,832.6
2410-사무, 통신장비	1,402.5	10.5	0.7	0.3	0.7	0.1	1.9	1,416.7
2411-전자데이터처리 장치, 사무장비	1,373.0	0.2	0.1	0.0	0.1	0.0	1.3	1,374.6
2412-통신장비	4.0	6.0	0.6	0.3	0.6	0.1	0.6	12.2
2413-반도체, 전자부품	25.6	4.3	0.0	0.0	0.0	0.0	0.0	30.0
2420-운송장비	2.7	0.5	0.1	0.3	9.7	0.2	317.6	331.1
2421-자동차	2.5	0.2	0.1	0.2	0.1	0.1	0.5	3.5
2422-기타 운송장비	0.2	0.4	0.1	0.1	9.6	0.1	317.1	327.6
243 -기타 기계류	19.3	47.3	11.7	2.3	1.7	0.4	2.1	84.8

표 3-11. 계속

SITC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총계
2431-발전기계	1.5	0.1	0.2	0.3	0.0	0.0	0.2	2.3
2432-비전기기계	1.5	2.5	0.3	2.0	0.4	0.2	1.7	8.6
2433-전기기계	16.3	44.7	11.2	0.1	1.3	0.2	0.2	73.9
2500-섬유	0.3	4.8	1.3	0.4	0.3	0.1	0.1	7.3
2600-의류	1.7	9.7	7.0	6.3	30.6	5.6	0.5	61.4
2700-기타 제조품	127.8	102.1	2.0	3.5	0.5	0.5	9.2	245.7
2710-개인, 가정용 상품	0.8	25.5	1.5	2.1	0.1	0.1	0.3	30.5
2720-과학, 제어기기	64.1	65.8	0.2	0.1	0.0	0.0	1.3	131.6
2730-기타 제조품	62.9	10.9	0.3	1.4	0.3	0.3	7.6	83.6
3000-기타	13.0	8.0	0.4	0.7	4.2	0.5	5.9	32.7

주: * 벨리즈 제외.
자료: EUROSTAT(Comext, Statistical regime 4).

2) ODA

OECD/DAC에 따르면, DAC 회원국인 EU 회원국과 EC는 중미지역에서 최대 공적개발 원조국이다. 2008년의 경우 13억 2,600만 달러로 OECD/DAC 대SICA 회원국 ODA의 56.5%를 담당했다. EU 회원국들은 중미국가들의 정치 제도화, 사회, 환경, 관광업 등 부문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EC는 정책 및 제도강화를 포함한 중미지역 통합, 지역통합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역할 강화, 그리고 지역환경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다. EC는 「2002~2006년 중미지역전략보고서(RSP)」에 7,450만 유로를 책정하여 지역통합 과정에만 4천만 유로를 투입하였다.[61]

61) RSP 2002-2006 아래 EC는 국경개발(El Salvador-Honduras Trans-border Development Programme), 관세동맹지원(Customs Union Support Programme), 중미통합지원(Programme of Support to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PAIRCA), 중미공동정책설계 및 실행지원(Programme of Support to the Design and Application of Central American Common Policies, ADAPCCA), 지역취약성 완화 및 환경관리(Regional Programme for Vulnerability Reduct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외에 중미민주주의 인권(Multi-annual Programm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Central America, PPDDHAC), 중미식량안보 및 영양(Regional Food Security and Nutrition Programme for

2008년 기준으로 과테말라가 EU의 대SICA ODA의 30%인 3억 9,630만 달러를, 니카라과가 27.4%인 3억 6,380만 달러를, 온두라스가 16.2%인 2억 1,420만 달러를, 엘살바도르가 11.6%인 1억 5,400만 달러를 각각 지원받았다.

주요 지원국을 살펴보면, 스페인이 최대 지원국으로서 공공행정 강화, 보건,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 천연자원 및 환경관리, 자연재해 예방, 생태적 취약성 완화, 관광업, 중소기업,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독일은 고용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미소금융, 자연재해 예방 및 수변지역 관리 등에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외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이 주요 ODA 공여국이다. 최근 EU 국가들의 대중미 ODA는 환경관리 및 천연자원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EC의 「중미지역전략보고서(Central America Regional Strategy Paper 2007-2013)」에 따르면, 2013년까지 7,500만 유로를 지역통합제도 강화(26.5%), 관세동맹 및 관련 정책 강화(62.5%), 지역 거버넌스 강화 및 공공치안 개선(11%)에 투입할 계획이다.

표 3-12. OECD/DAC EU 회원국 및 EC의 대SICA ODA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A		1,661.4	1,812.5	2,459.1	2,059.9	2,115.7	1,915.2	2,346.8
B	금액	724.2	925.2	1,346.7	990.5	1,003.4	1,012.0	1,326.2
	비중(B/A)	43.6	51.0	54.8	48.1	47.4	52.8	56.5

주: A는 OECD/DAC의 대SICA 회원국 ODA, B는 OECD/DAC EU 회원국 및 EC의 대SICA 회원국 ODA.
자료: OECD(2010),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DISBURSEMENTS, COMMITMENTS, COUNTRY INDICATORS 2004-2008.

Central America, PRESANCA), 자연재해 완화(Fourth DIPECHO Programme for Central America), 국경지대 개발(Central America Border Zone Development Programme, ex-FOEXCA), 중미재건(Regional Programme for the Reconstruction of Central America, PRRAC) 등 다년간에 걸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하였다.

나. EU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1) 개발협력정책

EU의 대중미 협력전략 및 정책은 EU 회원국들이 합의한 개발협력정책을 따르고 있다. EU 전신인 「유럽공동체 설립협정(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177조에 따르면, 개발협력정책의 글로벌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적·사회적 개발, 글로벌 경제로의 원활하고 점진적인 통합, 그리고 빈곤퇴치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개발과 공고화,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 존중이라는 일반적인 목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2005년 11월 유럽이사회, 회원국 정부 대표, 유럽의회, 유럽집행위원회는 개발협력에 대한 EU 회원국과 공동체 각각의 정책을 선도하는 공동비전을 처음으로 제공하는 「유럽개발 컨센서스(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를 승인하였다. 유럽개발 컨센서스 개발정책의 주된 목적은 새천년 개발목표(MDGs)의 추구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빈곤퇴치에 두어졌고, 민주주의 촉진, Good Governance, 인권존중 등이 부차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과의 동반자관계의 중요성과 더욱 공정한 글로벌화 차원에서 Good Governance, 인권 및 민주주의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개발정책의 일관성을 재확인하여 EU가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에 개발협력의 목적들을 고려하고, 이들 정책들이 개발목적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별 개발전략과 프로그램 원칙을 재확인하고, 개발협력에서 강화된 정치적 대화에 더하여 시민사회를 위한 역할 확대를 주창하고 있다.

이와 같은 EU의 글로벌 전략 및 정책은 지역별·소지역별·국별 전략 및 정책으로 발전되고 있다. 먼저 지역별 수준에서는 2004년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된 EU-중남미 정상회의에서 정책대화와 협력을 위한 우선과제로 다자주의, 지역통합, 그리고 빈곤

완화와 불평등 및 소외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우선과제들은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수준의 구상과 지역통합을 위한 지역수준의 구상을 통하여 중미지역에 특정의 실행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2005년 12월 「유럽집행위원회의 발표문(A reinforced European Union-Latin America partnership)」에서는 중남미지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재확인하고, 정책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협력, 무역 및 투자 촉진, 그리고 수혜국의 정치적 의제 및 필요와 협력의 밀접한 연계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소지역별 전략으로서 EU의 대중미 협력은 1984년 코스타리카에서 개시된 San José Dialogue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양측간 정치대화를 위한 주요 채널로 작동하고 있다.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San José Dialogue는 당초 중미지역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공고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된 대화 채널이었다. 그러나 1996년과 2002년에 정치적 협력에 더하여 경제적·사회적 개발과 같은 폭넓은 이슈들을 논의하는 장으로 확대되었다. 1993년 중미 6개국과 EC가 서명하고 1999년에 발효된 「지역개발협력 기본협정(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은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특정 분야의 협력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의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2003년 12월 양측은 San José Dialogue를 제도화하고, 이민, 대(對)테러리즘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협력확대를 목적으로 새로운 협정(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2004년 5월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된 EU-중남미 정상회의에서 설정된 양측간 공통의 전략적 목표인 FTA를 포괄하는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의 모태가 되었다. 양측은 미래의 FTA가 DDA 협상결과와 충분한 수준의 지역경제통합 실현을 바탕으로 체결되기를 희망하였다. 2006년 5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EU-중남미 정상회의에서 EU와 중미는 2005~06년 실시된 중미지역 경제통합 공동평가의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FTA를 포함하는 연합협정 협상 개시를 결정하였다. 당시 중미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관세동맹 구축을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가속화와 이후 파나마의 참여를 약속했다. 특히 비엔나 정상회의 선언은 연합협정 협상의 옵서버에 불과했던 파나마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확인하는 동시에 파나마의 중미경제통합(SIECA) 참여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유럽공동설립협정 179조에 따라 2006년 12월 EU에서는 개발협력을 위한 재정수단을 규정한 새로운 개발협력방안(DCI)이 채택되었다.[62] 이 결과 중미지역을 DCI 아래 재정지원을 받는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되었다.

2) **제휴협정**(EU-Central America Association Agreement)

EU의 대중미 협력전략은 정치, 무역, 개발 등 분야별로 발전하다가 2010년 5월 협상이 타결된 포괄적인 협력협정으로 통합되었다. 즉 기존의 정치대화, GSP, 개발협력정책들이 제휴협정으로 통합된 것이다. 제휴협정은 EU가 다른 국가 및 지역과 체결하고 있는 협정 가운데 가장 진보된 형태의 협정으로서, EU와 중미 간의 관계를 모든 측면에서 규율하는 법적 기본틀이 될 전망이며, 정치대화, 협력, 무역 등 3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대화 및 협력 분야는 2003년의 정치대화 및 협력협정(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으로 활성화된 양 지역간 관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즉 양 지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치대화, 협력, 무역이라는 3대 축을 통한 관계 공고화, 심화, 확대를 추구하였다. 제휴협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면서 법치국가, 인권, Good Governance,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과 관련한 대화, 촉진, 강화에 기초한 정치적 협력체제를 구

62)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Regulation(EC) No. 1905/2006 of 27 December 2006.

축하고자 한다. 또한 양측은 대외정책 및 안보를 포함하여 국제무대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니셔티브를 개발 및 옹호하는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사법 및 치안, 중소기업, 지속가능한 개발, 경제 및 무역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제휴협정의 FTA 분야는 포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시장접근 분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 시장접근의 경우 현재 GSP+ 적용품목뿐만 아니라 대EU 시장접근이 제한되던 중미 국가들의 주요 농산물도 상당부문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GSP에서 제외되어 있던 쇠고기, 바나나, 쌀, 설탕 등도 할당관세로 시장접근이 허용되었다.[63] 한편 EU 농산물의 경우 낙농제품이 할당관세를, 돼지고기 등이 할당관세 혹은 15년간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적용받게 되었다. 둘째 중미의 대EU 공산품 관세양허 목록을 보면, 즉시 철폐(47.9%), 5~7년 철폐(7.3%), 10년 철폐(36.4%), 13~15년 철폐(4.2%), 그리고 제외품목(3.9%)으로 구성되어 있다. EU의 대중미 관세양허 목록은 즉시 철폐(91%), 3~10년 철폐(4%), 할당관세(1%), 제외품목(4%)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EU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농산물과 할당관세 적용(낙농제품 포함) 이후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대중미 수출품목에 대한 보조금 철폐를 약속했다. 넷째, EU는 중미산 수산물, 수공예품, 유기농제품 등의 대EU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협력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63) 코스타리카의 대EU 농산물 수출의 경우 냉동새우, 유카 등이 즉시 철폐 품목으로, 쇠고기(9,500톤), 바나나(2020년 톤당 75유로가 될 때까지 점진적인 관세인하), 쌀(2만 톤), 설탕 및 설탕제품(162,000톤) 등이 할당관세 혹은 점진적인 관세인하 품목으로 타결되었다.

표 3-13. 중미의 대EU 관세인하 양허안

관세양허 목록	품목 수	비중(품목 대비)	수입액(백만 달러)*	교역 비중
즉시	3,145	47.9%	1,985.0	67.4%
3년(점진적)	1	0.0%	0.0	0.0%
5년(점진적)	482	7.3%	401.8	13.6%
7년(점진적)	2	0.0%	0.2	0.0%
10년(점진적)	2,289	34.9%	220.4	7.5%
10년 후 일시철폐	98	1.5%	144.2	4.9%
13년	213	3.2%	129.2	4.4%
15년	64	1.0%	30.8	1.0%
할당관세	11	0.2%	11.8	0.4%
제외	256	3.9%	21.6	0.7%
총계	6,561	100%	2,945.1	100%

주: * 파나마 제외.

자료: Informe de Resultados: Cierre de la Negociación con La Unión Europea en Madrid, 13~18 de Mayo de 2010. http://www.aacue.go.cr/

표 3-14. EU의 대중미 관세인하 양허안

관세양허 목록	품목 수	비중(품목 대비)	수입액(백만 달러)*	교역 비중
즉시	8,942	91%	4,340	87.3%
3년(점진적)	67	1%	7	0.1%
5년(점진적)	28	0%	0	0.0%
7년(점진적)	268	3%	0	0.0%
10년(점진적)	45	0%	0	0.0%
할당관세	94	1%	2	0.0%
Reduction	1	0%	618	12.4%
제외	383	4%	3	0.1%
총계	9,828	100%	4,970	100%

주: * 파나마 제외.

자료: Informe de Resultados: Cierre de la Negociación con La Unión Europea en Madrid, 13~18 de Mayo de 2010. http://www.aacue.go.cr/

원산지 규정에서 EU는 현재 GSP를 적용하고 있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와 중미 간의 원산지 누적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멕시코, 칠레 등 양측이 동시에 체결 중인 FTA 국가와도 행정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원산지 누적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통관 및 무역 원활화, SPS, TBT, 공공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장치 규정과 더불어 불공정한 교역과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일반 및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등의 무역구제 조치도 도입했다.

서비스 및 투자 규정에서 양측은 개방 및 미개방 서비스 부문을 교환하고, 비즈니스 인력의 임시 출입국, 규제(정보, 통신, 금융, 국제해운), 전자상거래(무관세), 문화협력 등의 규정에 포함했다. 서비스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상호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것으로서, 제휴협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의 수정이나 부차적인 법률 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규정은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 GSP+ 체제 아래 중미-EU 관계를 규제하고 있는 의무를 대체하고 있다. 제휴협정과 GSP+의 차이점은 협정이 발효되면 EU가 양측의 노동 및 환경법 위반을 이유로 특혜관세를 유예하거나 제제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각국의 노동 및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만이 주된 의무인 것이다. 또다른 특징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정부가 주관하고,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관련자들에 개방된 지역대화 포럼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합협정의 분쟁해결장치와 중재수단들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문제발생 시 자문단 설치, 전문가 패널 개입 등을 통해 해결하지만 무역제재 등은 동반되지 않는다.

협정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지역경제통합과 관련한 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측은 양 지역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지역경제통합이 매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양 지역에서 통관절차, 기술규정, 위생검역조치 등 분야에서 통합을 강화 혹은 가속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관절차 규정에서는, 중미가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EU 원산지 상품이 중미 특정국에 수입되어 다른 중미국가로 수출될 경우 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시에 최대 3년 이내에 양측은 수출입 세관신고를 위한 단일한 행정서류 혹은 전자서류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TBT와 관련하여, EU는 중미산 상품이 EU의 한 회원국에서 유통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해당 상품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부차적인 일치성 평가 필요 없이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중미가 위생등록과 등록인정 관련 규제들을 조화시킬 때, 중미산 상품에 부여하는 동일한 대우를 유럽산 상품에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 중국 및 대만

가.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1) 교역

중미의 수출입에서 중국과 대만이 갖는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다. 최근 중국이 중미의 주요 교역대상, 특히 수입국으로 부상한 것과 달리, 대만은 대부분의 중미 국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 기준으로 중미의 대중국 수출은 6억 4,500만 달러로 대만의 2억 4,400만 달러의 약 2.6배에 달했으며, 수입은 27억 9천만 달러로 6.5배에 달했다. 또한 중국의 무역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은 연평균 70%, 수입은 35% 성장하였다. 중미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9년 2.6%이며, 수입은 5.8%이다. 대중국 무역은

국별 및 수출입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수출의 경우는 코스타리카를 제외하면 중국과 대만의 무역량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나, 수입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에서 대중국 수입이 대(對)대만 수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표 3-15. 중미의 대(對)중국 및 대(對)대만 무역(2009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수출					수입				
	대만		중국		세계	대만		중국		세계
과테말라	41	0.6%	30	0.4%	7,209	66	0.6%	1,036	9.0%	11,521
니카라과	21	1.5%	4	0.3%	1,393	18	0.5%	260	7.5%	3,479
벨리즈*	2	0.7%	0	0.0%	267	6	0.9%	45	6.6%	684
엘살바도르	18	0.5%	3	0.1%	3,797	72	1.0%	333	4.6%	7,255
온두라스	13	0.5%	42	1.6%	2,628	42	0.7%	278	4.7%	5,954
코스타리카	125	1.4%	552	6.3%	8,711	69	0.6%	510	4.4%	11,458
파나마	24	3.9%	14	2.4%	610	153	2.0%	327	4.2%	7,790
전체	244	1.0%	645	2.6%	24,615	426	0.9%	2,790	5.8%	48,141

주: * 벨리즈는 2009년 무역자료가 등록되지 않아 2007년 자료를 이용하였음.
자료: UNCOMTRADE; 대만통상부(Bureau of Foreign Trade).

2) ODA

중미지역은 대만의 중요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이다. 중미 및 카리브 지역은 국제원조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공여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특징을 가졌다. 그러나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남미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은 수교국의 경제발전, 사회개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외교부 산하에 국제협력발전기금(ICD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und)을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은 차관제공, 투자, 투자기업에 대한 담보제공, 기

술훈련 및 지원, 교육지원, 기술전문가 파견, 재해복구 지원, 국제기구 협력,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군복무로 해외봉사 대체 등 다양하다.

표 3-16. 대만 ICDF 지원 분야 및 내용

분야		내용
은행, 금융	차관제공	인프라 개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농업 분야 개발,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인재 및 자연재해 복구
	투자	해외직접 또는 간접 투자
	담보	수교국에 투자하는 대만 업체에 대한 금융담보 제공
기술지원		기술 훈련 및 이전
인적자원 개발		세미나 및 워크숍 주최, 장학금 지원, 대만 초청 장학금 제공, 국제기구와의 교육분야 협력, 세미나 및 워크숍 수료자 프로그램 운영, 대만국제동맹(대학연합, TICA) 지원
전문가 파견		무역 및 투자, 농업, 어업, 화훼, 축산, 공예, 의료 서비스, 교통 인프라, 통신 분야 전문가 파견
인도적 지원		자연 및 인적 재해복구사업 지원
국제기구협력		무역, 투자, 식량, 의료분야 국제기구 및 개발은행과의 협력
해외자원봉사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해외복무		국내 군복무를 해외봉사로 대체

자료: 대만 국제협력 및 발전기금(ICDF)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특히 1998년 ICDF 산하에 중미경제개발기금(CAEDF: Central America Economic Development Fund)을 별도로 설립하여 중미와의 경제·무역·투자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설립 당시 CAEDF 대상국은 중미 7개국이었으나, 코스타리카가 2007년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면서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CAEDF 지원 프로그램 중에는 중미의 중간급 관료를 초청하여 대만에서 2년의 석사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대만은 친대만 관료를 양성하여 대만-중미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 및 지속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대만은 ICDF를 통해 투자 및 차관, 기술지원, 전문가 파견 분야를 중심으로 중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58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일부 프로젝트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표 3-17. 현재 진행 중인 ICDF 중미 지원 프로젝트

국가명	프로젝트 개수			
	투자 및 차관	기술 지원	전문가 파견	합
벨리즈	3	4	4	11
엘살바도르	7	2	-	9
과테말라	7	1	-	8
온두라스	13	1	-	14
니카라과	11	1	-	12
파나마	2	2	-	4
전체	43	11	4	58

자료: 대만 국제협력 및 발전기금(ICDF)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중국은 최근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적 원조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해외원조사업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원조의 개념도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OECD의 원조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중국의 해외원조 규모를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렵다. 또한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개도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중 많은 부분이 원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차관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차관과 원조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조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는 중국의 중미를 포함한 중남미 원조 규모가 2007년을 기준으로 약 260억 달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3-18. 중국의 지역별·연도별 해외원조(2002~07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정부 투자	8,042	24,389	7,429
양허성 차관	22,379	1,950	7,114
무상원조	1,851	421	231
채무 탕감	850	0	60
현물 원조	21	1	0
전체	33,143	26,761	14,834

주: 원조 금액은 실제 집행된 금액이 아니라 중국정부가 제공하기로 발표한 금액임.
자료: NYU Wagner School, (2008).

중국의 중미에 대한 원조는 코스타리카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코스타리카 축구장 및 정유시설 건설에 1억 3,000만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축구장은 2011년 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나.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1)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전략

중미는 전통적으로 대만의 외교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대만의 대중미 관계는 경제적 실리 추구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크다고 하겠다. 2010년 현재 전 세계에서 대만과 국교를 수교한 나라는 23개국이지만, 경제규모나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한 소국이 대부분이다. 4개의 아프리카 국가, 6개의 오세아니아 국가, 6개의 중미 국가, 5개의 카리브 해 국가, 남미의 파라과이, 그리고 유럽의 바티칸이 이에 속한다. 코스타리카가 2007년까지 대만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미지역은 대만 외교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 3-19. 대만의 수교국

<table>
<tr><th colspan="2">대륙</th><th>국가</th><th>국가 수</th><th></th></tr>
<tr><td colspan="2">아프리카</td><td>부르키나파소
감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란드</td><td>4</td><td></td></tr>
<tr><td colspan="2">오세아니아</td><td>키리바시
마셜 제도
나우루
팔라우
솔로몬 제도
투발루</td><td>6</td><td></td></tr>
<tr><td rowspan="3">중남미</td><td>중미</td><td>벨리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td><td>6</td><td rowspan="3">12</td></tr>
<tr><td>카리브</td><td>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도미니카공화국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td><td>5</td></tr>
<tr><td>남미</td><td>파라과이</td><td>1</td></tr>
<tr><td colspan="2">유럽</td><td>바티칸</td><td colspan="2">1</td></tr>
<tr><td colspan="2">전체</td><td colspan="3">23</td></tr>
</table>

자료: 대만 외교부.

그러나 중국은 ‘하나의 중국(One China)’이라는 외교정책으로 일관하며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대만이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국가며, 합법적인 중국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이데올로기다. 즉 중국은 대만을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3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상대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여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중국을 선택할 것을 강요한다. 따라서 중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대만과 수교한 국가들이 대만에서 중국으로 외교관계를 전환하도록 물질적·정치적 공세를 가하며 대만과 외교 각축을 벌이고 있다.

중미지역에서 중국과 대만의 외교 각축은 2004년을 기점으로 심화되었다. 중국이 카리브 해 도서국가인 도미니카에 1억 1,200만 달러 원조를 약속하면서 도미니

카가 대만과의 수교관계를 단절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그레나다가 대만과 단교하였다. 중국의 물질적 공세로 기타 중미국가들 또한 대만 지지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일례로 2007년 5월 치러진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가입 투표에서 일부 국가들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게 된다. 니카라과와 파나마는 투표에 불참하였으며, 아이티는 기권을, 코스타리카는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그해 6월 코스타리카는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하였다.

표 3-20.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국가(2000년 이후)

대륙		국가	단교 연도	국가 수
아프리카		채드 라이베리아 말라위 세네갈	2006 2003 2008 2005	4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2004	1
중남미	중미	코스타리카	2007	1
	카리브	도미니카 그레나다	2004 2005	2
유럽		마케도니아	2001	1
전체				9

자료: 대만 외교부.

코스타리카의 단교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코스타리카 정부의 실리적인 선택이었다. 아리아스(José Arias) 대통령은 중국과의 수교를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의무이며, 이번 수교는 코스타리카와 아시아 시장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외교정책의 일환”이라고 평가하였다. 중국과의 수교 대가로 코스타리카는 중국으로부터 3억 달러의 국채 매입과 1억 3천만 달러의 원조 및 중국 유학 프로그램 지원을 약속받았다. 또한 중국은 코스타리카의 정유시설

건설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지원의 대가로 코스타리카는 국제무대에서 중국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는데, 2008년에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중국을 의식하여 달라이 라마의 코스타리카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다.

코스타리카와 대만의 단교는 중국으로의 수교관계 전환이 중미 주변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았다. 그러나 대만의 적극적인 대중미 외교 및 중국과 대만간의 화해 분위기로 인해 현재까지는 대만과 추가로 단교를 선언한 국가는 없는 상태다.

대만과 중국은 중미지역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목표가 뚜렷하지만, 사안의 시급성에서는 두 국가간에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중미국가 포섭을 시급한 과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의 온건한 대(對)대만 정책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은 직항 항공편을 운항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2010년 6월에는 미래의 본격적인 FTA 협상 진행을 전제로 경제협력기본협정(EFCA)에 서명했다. 중국의 대중미 정책에는 현재로서는 대만과 화해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되, 미래의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대만의 영향력을 중미에서 약화시킬 것이라는 자신감이 내재된 것으로 분석된다.

2)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정책

가) 달러외교 정책

중미에서 대만과의 수교국들은 대부분 국민소득이 낮은 빈국들이기 때문에 '달러외교(dollar diplomacy)'가 주요한 외교정책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ICDF와 CAEDF를 통한 ODA 공여가 주요한 달러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되었다.

중국 역시 중미국가를 상대로 달러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 및 중미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으로 인해 중국의 달러외교는 대만에 비해 훨씬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중국 달러외교의 일례로 2004년 도미니카에 1억 1,200만 달러의 원조를 약속했고, 2007년에는 그레나다에 크리켓 월드컵 경기장 및 2,000호 주택 및 병원 건축, 농업분야 600만 달러 지원, 그리고 100만 달러의 장학기금을 제공했다. 2008년에는 3억 달러에 달하는 코스타리카 국채 매입과 1억 3,000만 달러의 원조 제공을 약속하였다.

나) 무역정책

대만은 전 세계에서 5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는데, 체결 대상국 모두가 중미 국가들이다. 즉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공)를 제외한 모든 중미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온두라스와의 FTA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은 모두 발효되었다.

표 3-21. 대만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

종류	체결일	현황	
대만-엘살바도르-온두라스 FTA	2007년 5월	서명	
대만-과테말라 FTA	2005년 9월	발효	2005년 7월
대만-니카라과 FTA	2006년 6월	발효	2008년 1월
대만-파나마 FTA	2003년 8월	발효	2004년 1월

자료: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대만 통상부(Bureau of Foreign Trade).

대만과 중미국가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크지 않다. 2009년 대만 총교역에서 대중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16%에 불과하며, 중미로부터 수입은 2억 4,400만 달러, 수출은 4억 2,400만 달러였다. 그러나 중미지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미국시장 접근을 위한 중간기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대만은 중국 본토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의 일환으로 중미와의 FTA 체결을 통

해 무역증진 및 미국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 역시 FTA를 중미와의 관계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다. 2010년 4월 중국은 코스타리카와 FTA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는 중국이 단일 국가와 맺은 여섯 번째 FTA이자 중미지역과 맺은 최초의 FTA이다. 코스타리카를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중간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함께, 중미지역에서 대만의 입지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2.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

종류	체결일	현황	
중국-ASEAN FTA	2002년 11월	발효	2005년 7월
중국-파키스탄 FTA	2006년 11월	발효	2007년 7월
중국-칠레 FTA	2005년 11월	발효	2006년 10월
중국-뉴질랜드 FTA	2008년 4월	발효	2008년 10월
중국-싱가포르 FTA	2008년 10월	서명	
중국-페루 FTA	2009년 4월	서명	
중국-홍콩 CEPA[64]	2003년 6월	발효[65]	2004년 1월
중국-마카오 CEPA	2003년 10월	발효	2004년 1월
중국-코스타리카 FTA	2010년 4월	서명	

자료: 중국 외교부.

다) 국제기구 및 NGO와의 협력 정책

대만은 다양한 국제기구 및 NGO와의 협력을 통해 대중미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64) Mainlnad and Hong Kong Closer Economic and Partnership Arrangement은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홍콩이 중국의 특별경제구역이므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인 FTA 대신 CEPA로 표현하였다.

65) 매년 보충협정을 추가 체결하여 분야별 개방도를 넓혀왔으며, 발효 날짜는 보충협정별로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는 2010년 5월 8차 보충협정 CEPA Ⅷ이 체결되었으며, 2011년 1월 발효 예정이다.

있다. 즉 대만은 SICA 옵서버이면서 CABEI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대만은 유일하게 CABEI 회원국 가운데 중미지역과 유대성이 약한 국가이다. CABEI에의 가입은 중미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만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2000년 취임한 첸수이벤 총통은 다자간 채널을 활용한 대중미 외교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다. 미주개발은행(IDB)의 옵서버 국가로 가입하기 위해 외교부 인사를 이용해 다양한 로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2008년 IDB의 4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데 반해 대만의 노력은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또한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에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성공하지 못하였다. 2005년 부총통인 아네트 루는 태평양지역의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유지,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민주태평양연합(Democratic Pacific Union)을 설립하였다. 회원국은 아시아 10개국, 오세아니아 7개국, 미국, 캐나다, 중남미 11개국이다.

또한 NGO를 활용한 외교활동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는 자제재단(Tzu Chi Foundation)으로, 전 세계 47개국 372개의 사무소를 통해 의료, 교육, 환경, 구호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4. 일본

가.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1) 무역

중미지역은 중계무역항인 파나마를 제외할 경우 일본의 무역상대국으로서 가치는 매우 미미하다. 일본의 대중미 교역 규모는 2004년 76억 8,000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189억 9,90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역 증가는 대체로 파나마와의 교역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파나마가 중미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80%에서 2008년에는 89%로 증가했다.

표 3-23. 최근 5년간(2004~08년) 일본의 대중미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2004년				2008년			
	수출	수입	교역	무역수지	수출	수입	교역	무역수지
도미니카공화국	152	60	212	92	11	3	103	8
벨리즈	21	10	31	11	6	6	17	
니카라과	59	8	67	51	77	24	128	54
온두라스	91	49	140	43	129	35	172	94
엘살바도르	105	13	118	92	145	20	237	125
과테말라	237	78	315	159	280	148	439	132
코스타리카	449	175	624	273	712	344	985	368
파나마	6,059	114	6,173	5,945	10,973	18	16,918	10,954
중미 총계	7,173	507	7,680	6,666	12,333	598	18,999	11,735

자료: IMF DOTS.

최근 5년간(2004~08년) 일본의 대중미 교역은 연평균 25.4% 증가했다. 그러나 국별로 교역 증가율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파나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에 대한 교역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데 반해, 도미니카(공), 벨리즈와의 교역은 크게 감소했다.

표 3-24. 최근 5년간(2004~08년) 일본의 대중미 수출입 증가율 추이

(단위: 연평균 %)

국가명	수출	수입	교역
도미니카공화국	-48.1	-52.7	-16.5
벨리즈	-26.9	-12.0	-13.9
니카라과	6.9	31.6	17.6
온두라스	9.1	-8.1	5.3
엘살바도르	8.4	11.4	19.0
과테말라	4.3	17.4	8.7
코스타리카	12.2	18.4	12.1
파나마	16.0	-37.0	28.7
중미 총계	14.5	4.2	25.4

자료: IMF DOTS.

2) 투자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중미의 위상도 미미하다. 최근 5년간(2005~09년) 일본의 대중미 직접투자는 2,977억 엔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기 대중남미 직접투자의 4.4%에 해당한다. 중미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주로 파나마에 집중되고 있으며, 파나마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투자는 1~3억 엔에 불과한 상황이다.

업종별로 일본의 대중미 투자는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 집중되었다. 최근 5년간 일본의 중미 직접투자 중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2%에 불과한 반면, 비제조업에 대한 비중은 98%에 달했다. 비제조업 부문에서도 운수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표 3-25. 일본의 연도별 대SICA 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엔, %)

국가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5~09년	비중*
엘살바도르	0	1.1	0.51754	0.53054	0.67038	3	0.0045
과테말라			-7.32367		1.03	-6	-0.0093
코스타리카	-1					-1	-0.0012
도미니카공화국						0	0.0000
니카라과			0.66002			1	0.0010
파나마	502	651.8	895.996	829.154	97.4544	2,977	4.4153
벨리즈				2.4475		2	0.0036
온두라스	1					1	0.0010
중미	503	652.9	889.85	832.132	99.1548	2,977	4.4149
중남미	7,032	2990.3	11157.8	29969.6	16272.1	67,422	100.0000

주: * 중남미 전체에서 중미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일본중앙은행.

표 3-26. 일본의 업종별 대SICA 투자 현황

(단위: 억 엔, %)

연도	국가명	제조업	섬유	전기 전자	수송 기기	비 제조업	광업	운수업	도소매	금융·보험	서비스	총계
2009	과테말라					1.0			0.2		-0.1	1.0
	엘살바도르	0.7										0.7
	파나마	13.3			4.8	84.1	-377.1	467.3	23.6		13.1	97.5
2008	벨리즈					2.4						2.4
	엘살바도르	0.5	0.5									0.5
	파나마	0.9				828.2	-529.9	1,299.6	38.9		14.9	829.2
2007	과테말라	2.6				-9.9						-7.3
	엘살바도르	0.5	0.5									0.5
	니카라과					0.7						0.7
	파나마	25.6				870.4	-398.3	1,326.2	53.6	-29.0	5.4	896.0
2006	엘살바도르	1.1										1.1
	파나마					651.8		866.9	-186.5		-6.7	6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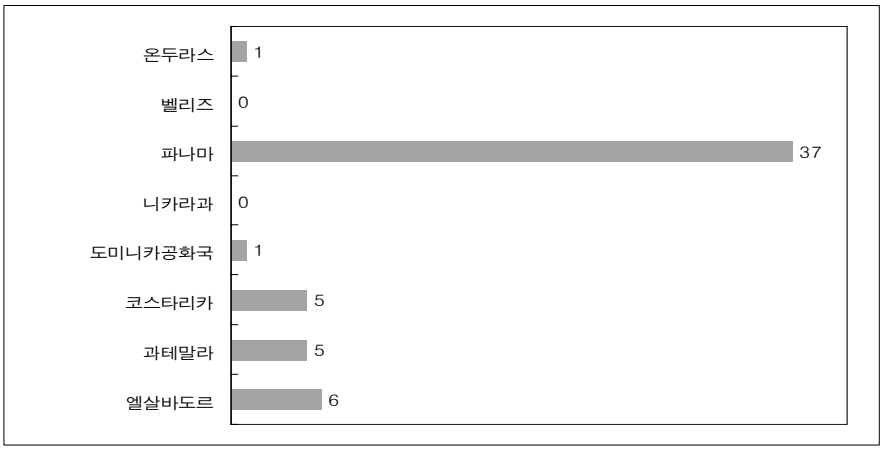
표 3-26. 계속

연도	국가	제조업	섬유	전기 전자	수송 기기	비 제조업	광업	운수업	도소매	금융·보험	서비스	총계
2005	온두라스					0.7						0.7
	엘살바도르	0.3	0.3									0.3
	코스타리카					-0.8						-0.8
	파나마	14.3		28.9		488.2		748.9	-200.5	2.1	-6.9	502.5
2009~05 합계		59.8	1.3	28.9	4.8	2,916.9	-1,305.4	4,708.8	-270.7	-26.9	-19.7	2,976.6
비중		2.0	0.0	1.0	0.2	98.0	-43.9	158.2	-9.1	-0.9	0.7	100.0

자료: 일본중앙은행.

일본 기업의 중미지역에 대한 관심 부재로 진출기업 수도 미미한 상황이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중미에 진출한 일본 업체 수는 55개에 불과하다. 이 중 파나마에 가장 많은 37개 업체가 진출해 있다.

그림 3-1. 중미 진출 일본업체 수 현황



자료: JETRO.

2008년 말 현재 중미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는 2,598명에 달한다. 이 중 도미니카(공)에 가장 많은 850명이 거주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 거주하는 중미인 수는 1,220명이다.

표 3-27. 중미 거주 일본인 수 및 일본 거주 중미인 수 현황(2008년 말 현재)

(단위: 명)

국가명	중미 거주 일본인 수	일본 거주 중미인 수
엘살바도르	180	124
과테말라	294	102
코스타리카	407	181
도미니카공화국	850	487
니카라과	209	70
파나마	334	69
벨리즈	57	11
온두라스	267	176
중미	2,598	1,220

자료: JETRO.

3) 공적개발원조(ODA)

중미지역은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 대상으로서보다는 개발협력의 대상으로서 일본에 가치가 높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의 대중미 ODA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2004~08년) 일본의 대중남미 ODA에서 중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5.4%에 달했다. 국별로는 온두라스가 일본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ODA를 받았다. 그밖에 니카라과와 과테말라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일본의 대중미 ODA를 엔차관,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으로 대별해 살펴보면 무상자금협력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중남미 엔차관 지원 중 중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 불과했다. 국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코스타리카가 가장 많은 엔차관을 지원받았다.

표 3-28. 일본의 대중미 ODA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2008	비중
엘살바도르	11	1	6	4	8	29	1.8
과테말라	25	33	39	18	11	125	7.6
코스타리카	-5	-1	6	17	-1	16	0.9
도미니카공화국	15	3	6	3	2	29	1.8
니카라과	30	49	36	31	44	190	11.5
파나마	6	2	2	2	4	17	1.0
벨리즈	1	2	2	2	1	8	0.5
온두라스	31	103	138	21	41	334	20.3
중미	115	192	234	97	109	747	45.4
중남미	309	409	431	226	269	1,644	100.0

자료: 일본 외무성.

표 3-29. 일본의 대중미 엔차관 지원 현황

(단위: 억 엔, %)

국가명	엔차관	비중
엘살바도르	449	2.8
과테말라	268	1.7
코스타리카	662	4.1
도미니카공화국	316	2.0
니카라과	323	2.0
온두라스	348	2.2
중미	2,365	14.7
중남미	16,102	100.0

자료: 일본 외무성.

ODA 중에서도 중미는 일본의 대표적인 무상협력 대상국이다. 일본의 대중남미 무상자금지원 중 중미의 비중은 43.2%에 달하는데, 중미국가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가 주요 지원대상국이다. 그에 반해 중미에서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코스타리카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다.

표 3-30. 일본의 대중미 무상자금협력 지원 현황

(단위: 억 엔, %)

국가명	무상자금협력	비중
엘살바도르	321	5.7
과테말라	405	7.2
코스타리카	34	0.6
도미니카공화국	249	4.4
니카라과	679	12.1
파나마	34	0.6
벨리즈	2	0.0
온두라스	706	12.5
중미	2,430	43.2
중남미	5,629	100.0

자료: 일본 외무성.

일본의 대중남미 기술협력 중 중미의 비중은 24%에 달했다. 국별로는 온두라스, 도미니카(공), 파나마, 과테말라 순으로 많은 기술지원을 받았다.

표 3-31. 일본의 대중미 기술협력 지원 현황

(단위: 억 엔, %)

국가명	기술협력	비중
엘살바도르	170	2.4
과테말라	249	3.5

표 3-31. 계속

국가명	기술협력	비중
엘살바도르	170	2.4
과테말라	249	3.5
코스타리카	192	2.7
도미니카공화국	278	3.9
니카라과	178	2.5
파나마	264	3.7
벨리즈	13	0.2
온두라스	371	5.2
중미	1,715	24.0
중남미	7,137	100.0

자료: 일본 외무성.

나.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전략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입장에서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중미의 가치는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중미 8개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노리는 일본에 무시할 수 없는 외교자원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중미 정책은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기보다는 개발협력 등 원조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일본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같은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중미, 특히 SICA와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중미 대화협력포럼」을 들 수 있다. 1995년 9월 일본과 중미국가들은 외교정책 분야에서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양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포럼을 설립했다. 양자간 포럼은 중미와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하며 원칙적으로 연 1회 개최를 목표로 한다. 2010년까지 총 13회의 포럼이 개최되었다. 참가국은 일본과 SICA 8개국이며, 주요 의제는

지역 정세, 일·중미 관계(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경제협력) 등이다.

또한 일본은 SICA와 비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SICA와 두 번의 정상회의(1996년, 2005년)를 개최했다. 특히 그 중에서 2005년 개최된 일-SICA 정상회의는 양 지역간 관계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도쿄선언문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일-중미 중장기협력을 골자로 한 도쿄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대화와 협력', '평화와 민주주의 정착', '경제·개발·관광 및 방재 분야에서 협력', '교육·문화 교류·스포츠 교류·청소년 교류', '국제무대에서 협력' 등이다. 선언문과 아울러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발표했다.

표 3-32. 도쿄선언문의 주요 실천계획

1. 대화와 협력
 - 정상급·외무장관급 대화협의체, 일·중미 포럼,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등을 통해 일·중미 간의 대화와 협력의 심화 도모

2. 평화와 민주주의의 정착
 - 민주주의의 정착 지원: 민주주의 제도 강화 및 평화 정착에 대한 지속적 지원 약속
 - 치안의 개선·강화: 중미고등경찰연구소와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해 지원
 - 지뢰 제거: 중미지역의 지뢰 제거 지원

3. 경제, 개발, 관광 및 방재(防災) 분야 협력
 - 경제사회 개발 협력: 인프라 정비, 빈곤 해소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 지속
 - 인재육성: 기술협력을 통한 인재육성 및 능력개발 지속 지원
 - 광역 협력: SICA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광역 협력 모델 실시
  ·중미 역내 협력망 구상: 중미국가들의 주요 개발 과제마다 거점국가를 지정해 지원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다른 국가들로 확산
  ·중미 특설 지역 연수: 중미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의료, 방재 분야 연수 촉진
 - 중미 통합 촉진: 인프라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푸에블라파나마 계획 등 중미 통합의 대한 자금 협력, 전문가 파견 등의 지원 실시. SICA 회원국은 푸에블라파나마 계획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
 - 경제교류 활성화: 중미 엑스포, 일·중미 비즈니스 포럼 등 기업간 교류 및 비즈니스의 촉진으로 연결되는 활동 실시
 - 영세·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 관광 진흥: 관광분야에서 일본의 협력 검토

표 3-32. 계속

- 방재 분야 지원: 방재 분야에서 인도적·기술적 지원 지속 4. 교육,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 청소년 교류 - 교육 분야의 협력 : 초중학교 건설 지속 지원, 온두라스에서 실시한 산수(算數) 프로젝트를 다른 중미국가로 확산 - 청소년 교류 : 향후 5년간 유학생, 연수생 등 약 1,000명의 청소년 초빙 - 문화 교류 : 희곡 「米百俵」의 상연 촉진, 문화 분야에서 무상협력 확대, 일본문화 소개사업 지속, 문화인 세미나 개최 - 스포츠 교류 : 청년 해외협력단, 국제교류기금을 통한 스포츠의 보급·진흥 지원 5. 국제무대에서 협력 - 유엔 개혁 : SICA 회원국들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며,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결의에 따라 신(新)상임이사국 선거가 실시될 경우 일본 지지 - 인류의 안전 보장 : '인류의 안전 보장 기금'을 통한 사회분야 프로젝트 실시 - 환경보호 및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CDM 프로젝트 지원,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관해 협력 - WTO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협력

자료: 일본 외무성.

한편 일본은 2010년 1월 SICA에 공식 옵서버로 가입했다. 또한 2010년 들어 양 지역간 경제교류 및 무역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일본-중미 경제교류촉진 Working Team'을 설립하였다.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면 국가 혹은 지역마다 차별성을 보여준다. 경제적 실익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면서 정치,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중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을 강조하는 또다른 측면이 있었다.

미국의 대중미 협력전략은 '시장개방', '민주주의 강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며, 중남미 전 지역에 대한 대외정책에 경제관계가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즉 경제적 실익보다는 미주지역의 안보를 주도하는 차원에서 중미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장개방과 관련해 중미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CAFTA-DR)도 표면적으로는 중미지역의 경제발전 등을 위한 목적이 있지만, 부분적인 경제적 실익 확보와 함께 중미지역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과거 중미지역에 대한 무역특혜처럼 CAFTA-DR 추진의 이유를 중미지역에서의 경쟁적 자유화와 민주주의 확립 등 자국의 국가안보에 필요한 경쟁동맹 구축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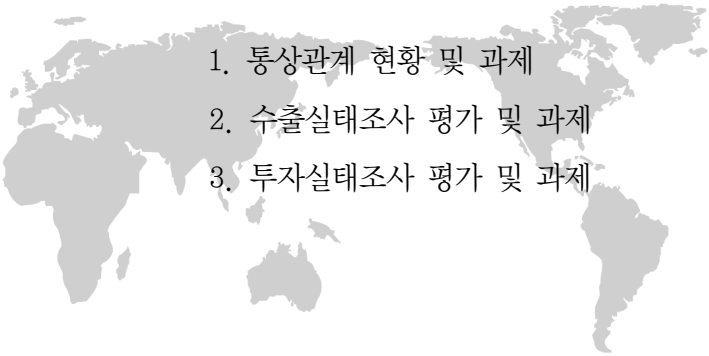
EU의 교역 및 투자 등에서 중미의 중요성은 역시 크지 않다. 그러나 스페인을 위주로 하는 역사적 관계에 기초하여 대중미 개발협력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EU 개별국가는 물론이고 EU 차원에서 제공하는 중미에 대한 개발협력은 다른 국가들이 모방해도 좋을 사례로 평가된다. 중미지역 차원의 접근법은 물론 수원국별 전략을 중기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 후 재수립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ODA 전략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EU의 대중미 경제협력정책은 기존의 정치, 무역, 개발 등 분야별로 발전해오던 정책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포괄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EU-중미 제휴협정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바탕에는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상호 경쟁적으로 중미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국-대만 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중미 진출 노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제한적이다. 즉 대규모 금융지원, 무상설비 건축 및 제공 등은 우리가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대만이 중미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추진했던 방안들에서는 한국이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 첫째는 CABEI와의 협력사업 운영이다. 한국과 중미 간의 관계 심화를 위해 한국의 CABEI 가입의 중

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으며, 중미국가들도 한국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둘째, 민간부문의 활발한 협력이다. 대만의 불교재단인 자제재단(Tzu Chi Foundation)은 중미 각국에서 의료, 교육, 환경, 구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NGO 등의 민간부분은 정부의 공적원조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미지역에서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즈와 같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한국의 공적원조가 축소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민간부문의 협력사업이 더욱 필요하다.

일본의 무역, 투자 등에서 중미의 중요성도 역시 크지 않다. 그러나 외교적 목적에 의하여 중미에 개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중미 협력관계가 시사하는 바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대중미 포괄적 경제협력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중미국가들과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일-중미 비즈니스 포럼을 설립해 양 지역 기업인간 인적 및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보다 최근에는 일-중미 경제교류촉진 실무팀을 설립해 양 지역 경제교류 및 무역·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중미 엑스포를 개최해 중미산 제품의 일본 내 수입을 장려하는 등 무역을 통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미국가들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중미국가들과 검토 중인 FTA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되, 우리의 일방적 이익 추구가 아닌 중미국가들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는 개발협력형 FTA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미국가별 맞춤형 개발협력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중미 역내 협력망 구상」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개발 과제마다 거점국가를 지정해 지원하고 그 성과를 다른 중미국가로 확산하는 개발협력의 거점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온두라스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교육 분야 협력 프로젝트인 산수 프로젝트를 중남미 역내로 확산시키고 있다.

제4장
한·중미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1.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2. 수출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3. 투자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1.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가. 무역

한국의 전 세계 무역에서 대(對)중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약 1%인 65억 7,300만 달러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교역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2009년 양 지역 간 교역량은 2008년 85억 7,600만 달러에 비해 약 23% 감소한 것이다. 한국의 대중미 무역은 수출위주의 교역구조를 보인다. 2009년 한국의 대중미 수출은 52억 900만 달러인 데 반해 수입은 그 1/4 수준인 13억 6,40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중미가 한국의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대중미 무역흑자는 한국 전체 무역흑자의 약 9.5%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중미 교역은 파나마에 집중되고 있다. 2009년 파나마와의 교역은 전체 대중미 교역의 약 85%를 차지한다. 2위는 과테말라로 전체 교역의 6.5%를, 3위인 코스타리카는 3.9%를 기록했다.

표 4-1. 한국의 대중미 무역(2009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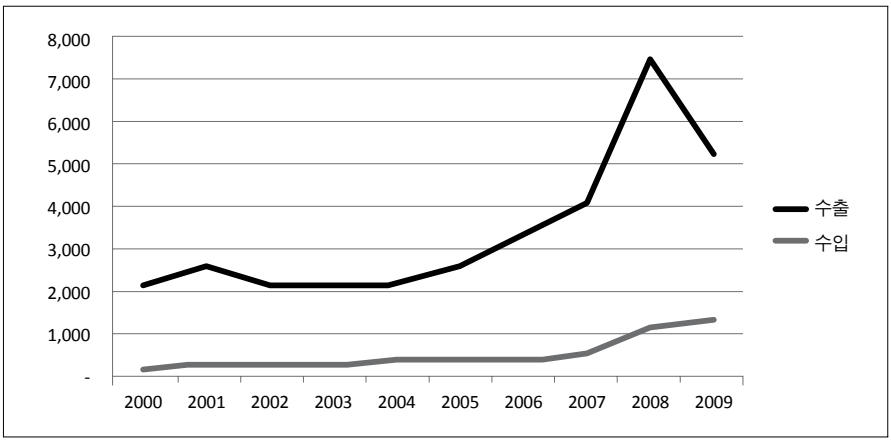
국가명	수출	수입	무역수지	무역비중(전체 중미 대비)
코스타리카	121	138	-17	3.9
엘살바도르	41	4	37	0.7
과테말라	327	99	228	6.5
온두라스	81	31	50	1.7
니카라과	163	1	162	2.5
파나마	4,477	1,091	3,386	84.7
중미	5,209 (1.4)	1,364 (0.4)	3,845 (9.51)	100

주: ( ) 안은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입에서 중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COMTRADE.

한국의 대중미 무역, 특히 수출은 2005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부터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08년까지 한국의 대중미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6.8%였고, 수입은 32.4%였다. 특히 전체 중미 교역의 약 85%를 차지하는 파나마와의 교역 증가가 전체 수출입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그간의 플러스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하여 수출이 30% 이상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입은 증가율이 전년보다는 작은 23.8%이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그림 4-1. 한국의 대중미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OMTRADE.

[표 4-2]는 한국의 대중미 무역을 1차산품, 경공업 제품, 중화학 제품, IT 제품으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대중미 수출은 중화학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2009년 대중미 중화학 제품 수출은 47억 5,600만 달러로 전체 대중미 수출의 91.3%를 차지하였다. 주요 수입품목 역시 중화학 제품으로 2009년 수입액은 10억 5,700만 달러로 대중미 수입의 77.5%를 차지하였다. 대중미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

화학 제품 수출입은 주로 한국과 파나마 사이의 선박 수출입을 의미한다. 한국은 선박 수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국가다. 특히 파나마로의 선박 수출이 많은 것은 실제 파나마가 선박을 수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외국의 선박회사들이 세금감면 등의 편의를 목적으로 선박의 국적을 파나마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파나마를 제외하면 대중미 수출에서 경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7.8%, 중화학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5.2%이다. 대중미 수입은 파나마를 제외할 경우 1차 산품과 IT 제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보이는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6.0%와 44.6%였다. 대중미 IT 제품의 수입은 대부분 코스타리카로부터의 수입되는 반도체이다. 1차산품은 주로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에서 수입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교역구조는 파나마를 제외할 경우 경공업 및 중화학 제품 수출, 1차산품 및 IT 제품 수입 위주의 산업간 무역 특성이 강하다.

표 4-2. 한국의 대중미 산업별 무역(2009년 기준)

(단위: 천 달러)

무역	국가	1차산품	경공업	중화학	IT	총
수출	과테말라	1,723	177,571	144,641	3,080	327,015
	니카라과	354	122,880	39,082	718	163,034
	온두라스	23	18,884	61,119	590	80,616
	엘살바도르	3,312	15,144	21,144	1,165	40,765
	코스타리카	149	15,614	65,131	39,636	120,530
	파나마	1,205	26,259	4,425,226	23,926	4,476,616
	중미 전체	6,766 (0.1)	376,352 (7.2)	4,756,343 (91.3)	69,115 (1.3)	5,208,576 (100)
	중미(파나마 제외)	5,561 (0.8)	350,093 (47.8)	331,117 (45.2)	45,189 (6.2)	731,960 (100)
수입	과테말라	91,659	1,481	5,507	110	98,757
	니카라과	238	131	979	9	1,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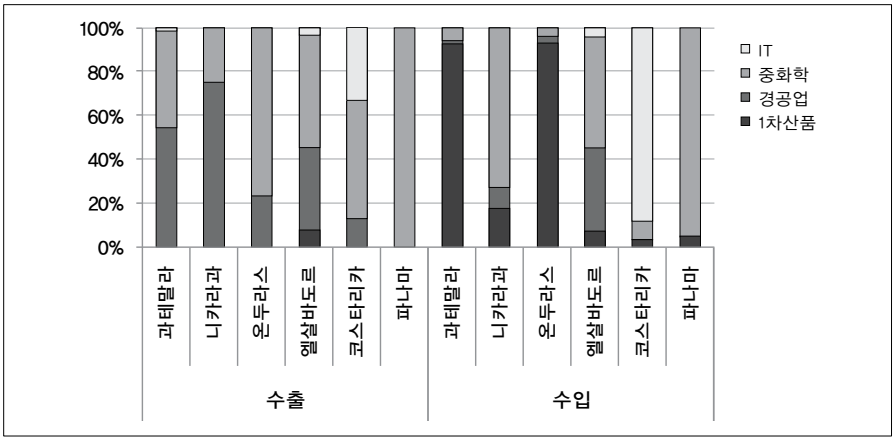
표 4-2. 계속

무역	국가	1차산품	경공업	중화학	IT	총
	온두라스	28,980	1,035	1,096	1	31,112
	엘살바도르	311	1,608	2,132	173	4,224
	코스타리카	4,546	218	11,385	121,577	137,726
	파나마	54,097	47	1,036,118	281	1,090,543
	중미 전체	179,831 (13.2)	4,520 (0.3)	1,057,217 (77.5)	122,151 (9.0)	1,363,719 (100)
	중미(파나마 제외)	125,734 (46.0)	4,473 (1.6)	21,099 (7.7)	121,870 (44.6)	273,176 (100)

주: ( ) 안은 해당 지역의 각 상품별 무역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4-2. 한국의 대중미 산업별 무역(2009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9년 한국의 대중미 주요 수출품은 선박, 섬유 및 원사, 자동차 및 부속품, 정유제품, 철강제품, 전자제품 및 부품 등으로 섬유류와 중화학 제품의 비중이 크다. 특히 HS4 단위 기준으로 1위 수출 품목인 선박(HS 8901)의 수출액은 36억 2,400만 달러였다.

표 4-3. 한국의 대중미 상위 20위 수출품(2009년 기준, HS4 단위)

(단위: 백만 달러)

품목 번호	품목명	금액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	3,624.8
8905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 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	512.9
6006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171.4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 차량	135.0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 및 웨이스트오일	109.9
6004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54.7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폭 600mm 이상)	38.0
8708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38.0
8534	인쇄회로	37.6
4011	고무제의 공기 타이어	28.5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 이동식 양하대,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 트럭	28.5
8544	절연 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	26.2
8471	자동 자료처리 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19.9
8428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19.4
5807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7.5
8704	화물자동차	16.3
8528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15.4
5205	면사	10.5
4012	고무제의 공기 타이어(재생품 및 중고품),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 타이어트래드 및 타이어플랩	9.3
8702	10인 이상 수송용의 자동차	9.2

자료: UNCOMTRADE.

2009년 한국의 대중미 주요 수입품은 선박, 사탕수수, 전자부품, 원유, 커피, 금속 스크랩, 의료기기, 어류, 버섯, 담배 등으로 1차산품과 전자부품의 비중이 컸다.

표 4-4. 한국의 대중미 상위 20위 수입품(2009년 기준, HS4 단위)

(단위: 백만 달러)

품목 번호	품목명	금액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	1,013.5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87.4
8542	전자집적회로	70.4
2709	석유 및 역청유(원유)	53.1
8473	사무용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	38.5
0901	커피, 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36.1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 및 웨이스트오일	19.0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 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10.9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8.3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6.3
7404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2.6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	1.5
6109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	1.5
9021	정형외과용 기기,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 기기	1.1
8548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	1.0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후드	0.8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의 분, 조분 및 펠리트	0.7
8534	인쇄회로	0.7
0602	기타의 산 식물·삽수·접수 및 버섯의 종균	0.6
2401	담배 또는 담배 대용물	0.5

자료: UNCOMTRADE.

중미와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품목에 기초하여 무역을 하고 있는지, 즉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품목이 상대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

해 각국의 품목별 세계시장에서의 비교우위(RCA)와[66] 상대방 시장에서의 비교우위(MCA)[67]를 비교하였다. [표 4-5]의 한국의 RCA 값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섬유, 전기·전자, 운송장비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상품이 중미 국가로의 수출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섬유와 운송장비는 중미의 많은 국가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섬유산업의 경우 파나마 시장에서, 운송장비의 경우 벨리즈, 과테말라, 니카라과에서 한국의 경쟁력에 비해 수출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전자의 경우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중미 모든 국가에서 수출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상품 중 정유제품은 과테말라에서, 화학제품은 온두라스에서, 고무·제지·목재제품은 파나마를 제외한 모든 중미 국가에서, 금속 및 철강은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공)에서 수출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5. 한국상품의 중미국가에서의 경쟁력(MCA, 2007년 기준)

품목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한국의 RCA
식품 및 산동물	0.02	0.00	0.49	0.01	0.40	0.04	0.03	0.01	0.14
음료 및 담배	0.00	0.00	0.00	0.00	0.22	0.01	0.00	0.00	0.23
비식용 원재료(연료 제외)	0.02	0.53	0.32	0.04	0.51	0.05	0.06	0.00	0.32
광물성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0.00	0.01	0.00	0.00	1.46	0.00	0.00	0.00	0.53
동물성 유지 및 왁스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2

66) 제2장 1절의 수출 경쟁력 평가 참고.

67)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는 상대 국가로의 특정 품목의 수출이 한국과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시장 수출과 비교하는 개념으로, 특정 품목의 수출에서 세계시장 대비 교역상대국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표 4-5. 계속

품목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한국의 RCA
화학물 및 관련 제품	0.41	0.39	0.71	0.72	0.66	1.12	0.23	0.02	0.95
섬유	1.20	1.31	1.53	1.76	15.27	8.03	19.46	0.04	1.51
고무·제지·목재제품	18.60	1.67	2.63	5.13	2.26	3.74	1.38	0.27	0.62
금속 및 철강	0.79	1.24	1.07	0.83	0.62	0.35	0.09	0.28	0.94
전기·전자	0.60	0.95	0.57	0.46	0.19	0.74	0.51	0.10	1.45
운송장비	0.71	1.93	2.28	2.57	0.67	1.09	0.69	4.49	1.87
기타 제조제품	2.25	0.18	0.56	0.19	0.74	0.56	0.28	0.05	0.79
기타 분류되지 않은 상품	0.00	0.02	0.01	0.05	0.05	0.00	0.02	0.00	0.05

주: 음영은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 밑줄은 중미에서 경쟁력을 갖는 상품임.
자료: UN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표 4-6. 한국상품의 중미시장에서의 경쟁력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섬유	O	O	O	O	O	O	O	X
전기·전자	X	X	X	X	X	X	X	X
운송장비	X	O	O	O	X	O	X	O

자료: 저자 정리.

중미 국가는 1차산품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미 상품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과 한국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양자가 일치하는 품목은 일부 국가에서의 석유제품과 과테말라의 농축산물, 코스타리카의 전자회로에 불과했다. 섬유의 경우는 벨리즈와 니카라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수출과 비교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으로 다시 수출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중미 국가들이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한국 수출시장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이한 것은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모든 국가가 한국으로 고철을 높은 비중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국내 공급 부족을 고철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중미 지역은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7. 중미상품의 한국에서의 경쟁력(MCA, 2007년 기준)

품목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식품 및 산동물	0.00	0.02	0.00	0.33	2.61	0.37	0.00	0.25
음료 및 담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비식용 원재료 (연료 제외)	12.55	1.46	34.72	48.72	0.29	8.67	7.51	15.91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동물성 유지 및 왁스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물 및 관련 제품	0.00	0.00	0.00	0.00	0.13	0.01	1.19	0.00
섬유	1136.07	0.00	0.00	0.11	0.36	0.00	36.48	0.00
고무·제지·목재 제품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00
금속 및 철강	12.70	0.01	0.00	0.00	0.34	0.00	0.00	0.00
전기·전자	0.18	2.73	1.60	0.17	0.47	0.01	0.01	0.00
운송장비	241.73	0.01	0.00	6.95	0.17	0.00	0.00	0.00
기타 제조제품	0.45	0.02	0.07	0.24	0.24	0.00	0.12	0.00
기타 분류되지 않은 상품	0.00	0.35	0.00	1.03	0.00	0.00	0.00	0.00

주: 음영은 중미 각국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 밑줄은 한국에서 경쟁력을 갖는 상품임.
자료: UN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나.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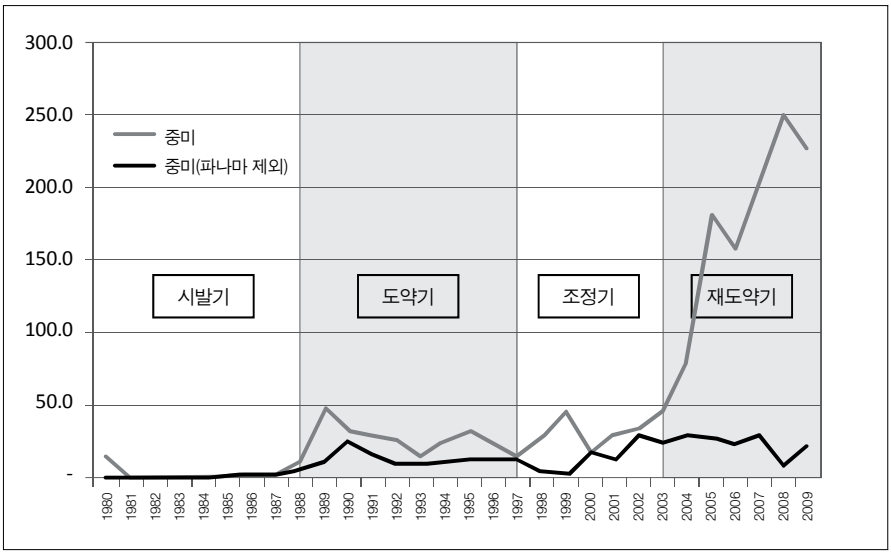
한국의 대중미 투자진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양적 성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파나마에 대한 투자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31%에 달했다. 그러나 대중미 투자가 성장세로 일관해온 것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성장세에 진입하던 투자는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외환위기와 함께 감소하다가 2000년대 중반 들어 다시 재도약의 시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한국의 대중미 투자·변화는 시기별 특징에 따라 시발기, 도약기, 조정기, 재도약기의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시발기는 1980~88년 기간으로 한국의 대중미 투자가 본격화되기 전의 시기이며, 전체 투자액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투자액은 약 30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주로 코스타리카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 미국은 중미와 카리브 지역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1984년부터 미국산 직물을 사용한 의류에 대해 무제한적인 쿼터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에 한국 기업은 무역특혜법을 이용한 미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중미 지역에 소규모 봉제업 투자를 개시했다.

도약기는 1989~97년의 기간으로 대미시장 우회진출을 목적으로 봉제업에 대한 투자진출이 급증한 시기다. 이 시기 연평균 투자는 약 2,600만 달러로 증가한다. 국내적으로는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경제력 확대, 원화절상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이, 국외적으로는 중미지역의 무역특혜를 이용해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이 시기 투자진출을 견인하였다. 시발기의 투자가 제조업에 집중된 데 반해, 이 시기의 투자는 농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특히 온두라스와 과테말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결과 전체 대중미 투자의 19%와 16.2%를 차지했다.

그림 4-3. 단계별 대중미 투자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조정기는 1998~2003년의 기간에 해당한다. 파나마에 대한 투자는 1999년을 기점으로, 나머지 중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1997년과 1998년을 기점으로 급락한다. 이는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 기업의 투자여력이 상실되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경제위기가 투자심리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 전체 중미지역의 투자액은 1,500만 달러로 급락했다. 중미 대부분 국가로의 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엘살바도르로의 투자가 증가세를 시현했다. 그러나 여전히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가 주요한 투자처로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산업별로는 전 단계에서 다양화되었던 투자가 다시 제조업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시기 제조업 투자의 비중은 전체 투자의 70.3%로 급증했다.

마지막 재도약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다. 한국경제가 위기로부터 회복되고 중미도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파나마에 대

한 투자가 급증하여 전 단계에 비해 연평균 투자액이 8.7배나 증가했다. 또한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가 중미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였으며, 온두라스의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증가세에 있지만, 투자처가 다양화되어 운수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분야로의 투자가 급증했다.

표 4-8. 단계별·국별 대중미 투자

(단위: 천 달러)

국가명	시발기	도약기	조정기	재도약기
니카라과	- (0.0)	4,300 (1.8)	3,996 (2.1)	26,598 (2.4)
온두라스	450 (1.6)	44,753 (19.0)	38,254 (19.9)	29,672 (2.7)
코스타리카	7,425 (27.1)	12,990 (4.2)	521 (0.3)	12,428 (1.1)
엘살바도르	410 (1.5)	9,852 (4.2)	10,632 (5.5)	17,643 (1.6)
파나마	18,883 (69.0)	125,548 (53.3)	110,123 (57.3)	960,942 (88.2)
과테말라	200 (0.7)	38,281 (16.2)	28,750 (15.0)	42,518 (3.9)
중미 전체	27,368 (100.0)	235,724 (100.0)	192,276 (100.0)	1,089,802 (100.0)

주: ( ) 안은 각 단계별 전체 중미 투자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 4-9. 단계별·업종별 대중미 투자

(단위: 천 달러)

업종	시발기	도약기	조정기	재도약기
제조업	12,761 (46.6)	138,798 (58.9)	135,164 (70.3)	213,095 (19.6)
농업, 임업 및 어업	1,179 (4.3)	59,653 (25.3)	3,000 (1.6)	2,000 (0.2)

표 4-9.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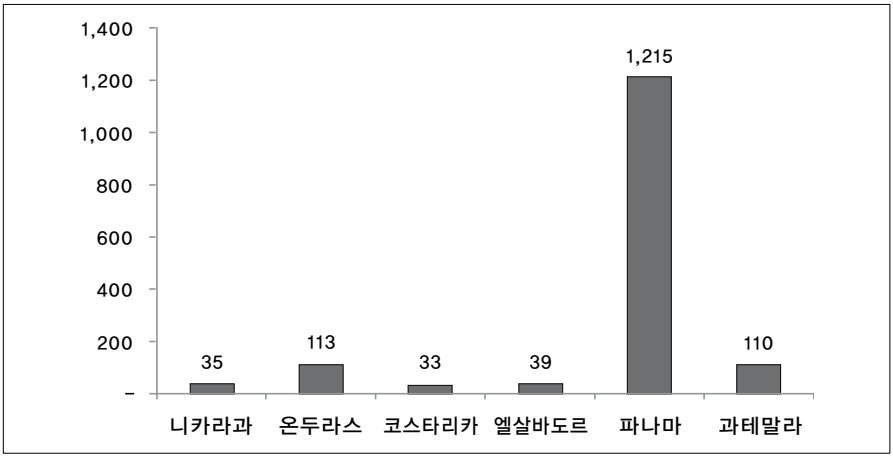
업종	시발기	도약기	조정기	재도약기
제조업	12,761 (46.6)	138,798 (58.9)	135,164 (70.3)	213,095 (19.6)
농업, 임업 및 어업	1,179 (4.3)	59,653 (25.3)	3,000 (1.6)	2,000 (0.2)
도매 및 소매업	3,050 (11.1)	27,683 (11.7)	53,821 (28.0)	29,427 (2.7)
운수업	200 (0.7)	8,790 (3.7)	25 (0.0)	327,075 (30.0)
건설업	0 (0.0)	500 (0.2)	215 (0.1)	19,107 (1.8)
숙박 및 음식점업	0 (0.0)	0 (0.0)	51 (0.0)	0 (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5 (0.6)	300 (0.1)	0 (0.0)	0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 (0.0)	0 (0.0)	0 (0.0)	7,200 (0.7)
금융 및 보험업	10,000 (36.5)	0 (0.0)	0 (0.0)	132,333 (12.1)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0.0)	0 (0.0)	0 (0.0)	359,565 (33.0)
전체 산업	27,368 (100.0)	235,724 (100.0)	192,276 (100.0)	1,089,802 (100.0)

주: ( ) 안은 각 단계별 전체 중미 투자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대중미 투자는 파나마에 집중되어 있다. 1980~2009년 누적액 기준으로 대파나마 투자는 12억 1,500만 달러였으며, 전체 중미 투자의 78.7%를 차지한다. 파나마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경우 시기별로 중점 투자 대상국에 차이가 있다. 시발기에는 코스타리카가, 도약기와 조정기에는 온두라스와 과테말라가, 재도약기에는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가 주요 투자 대상국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집중된 반면, 파나마 투자는 부동산업, 운수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으로 다양하다.

그림 4-4. 한국의 국별 대중미 투자(1980~2009년 누적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 4-10. 한국의 지역별·업종별 투자 비중(1980~2009년 누적액 기준)

(단위: 천만 달러)

업종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제조업	90,595	32,803	102,049	38,538	27,780	208,055
농업, 임업 및 어업		2,000	9,978		4,498	49,356
도매 및 소매업		92	588		586	112,715
운수업			300			335,790
건설업	19,103		215		500	4
숙박 및 음식점업	51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9,568
금융 및 보험업						142,3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00
전체	109,749	34,895	113,129	38,538	33,364	1,215,49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다. 제도협력

1) 협정

한국과 중미 국가 간에 기 체결된 주요 통상협정은 투자보장협정이다. 이 협정은 양 지역간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투자기업의 재산보호와 투자 상대국의 투자기업 수용 및 국유화 시 보상기준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벨리즈를 제외한 중미 7개국 모두와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 상태다.

투자보장협정에서 나아가 보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활동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한국 기업이 중미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중미)와 출신국가(한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협정이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기업의 경우 두 나라에서의 세금 부과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현재 중미 국가들 가운데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파나마가 유일하다. 2010년 10월 파나마 대통령의 한국 순방을 계기로 협정이 체결되었다.

표 4-11. 한·중미 통상협정 현황

국가명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과테말라	2002.8	-
니카라과	2001.6	-
도미니카공화국	2008.6	-
벨리즈	-	-
엘살바도르	2002.5	-
온두라스	2001.7	-
코스타리카	2000.8	-
파나마	2001.7	2010.10

자료: 외교통상부.

2) 정례회의

현재 한국과 중미 국가 간에 개최되는 정례 회의로는 한-SICA(중미통합체제) 대화협의체가 있다. 한-SICA 대화협의체는 양 지역간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6년 9월에 설치되었다. 이 회의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벨리즈, 도미니카(공) SICA 8개국과 한국의 대표가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약 2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4월 9차 회의가 파나마의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중미국의 외교차관 및 고위급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중미 및 아시아 통합 추세, 한반도 정세, 경제·통상 및 투자협력,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협력, 개발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라. 통상관계 평가 및 과제

한국과 중미 간의 무역은 200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한-중미간 교역에서는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품목이 다수다. 한국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섬유와 운송장비 등은 중미로의 수출이 활발하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경쟁력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저조한 수준이다. 중미국가들은 농산물, 가공식품, 원자재, 동물성 유지 및 왁스, 섬유, 고무·제지·목재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 중 한국에 활발하게 수출되는 상품은 커피, 반도체, 일부 원자재 등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양 지역은 높은 교역 증가의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투자는 국별·분야별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 국별로는 파나마에 전체 투자의 약 79%가 집중되어 있다. 투자업종의 경우 파나마에서는 부동산, 운

수업, 도소매업, 금융 등 서비스 업종에, 나머지 국가에서는 제조업, 특히 섬유봉제업에 국한되어 있다. 섬유봉제업의 경우에도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더 낮은 임금을 찾아 생산지를 이동하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는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소득 국가에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각국 정부들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투자환경 변화로 인해 중미의 외국인투자는 전통적인 저임금 기반 제조업에서 현재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관광, IT, 인프라 개발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 한국의 대중미 투자 역시 섬유봉제업에 치중된 것에서 탈피하여 업종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투자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다.

한국과 중미 간의 통상 인프라는 아직 구축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벨리즈를 제외한 7개국과는 2000년대 초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유일하게 파나마와만 체결한 상태다. 이 협정도 2010년 10월에야 체결되었다. 따라서 양국간도 실질적인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양국간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및 정례회의 활성화 등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수출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중 중미 지역에 수출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한 달 동안 이메일·팩스·전화 등을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총 56개 기업에서 회신을 받아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7개 분야로, ①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 ② 수출 동기 및 계기, ③ 수출 성과, ④ 수출 애로사항, ⑤ 비관세장벽, ⑥ 한·중미 FTA 관련, ⑦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가.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

설문조사에서 수출대상국과 관련해 중미 8개국, 즉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즈, 도미니카(공)로 한정하였으며, 이들 국가에 수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품목을 조사하였다. 설문대상 기업이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한 수출품목 분류 결과, 전기·전자 제품(25.4%)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철강·금속(14.1%), 플라스틱·고무·가죽(12.7%)과 잡제품(12.7%) 순이었다.

표 4-12. 한국의 대중미 수출품목

(단위: 비중, %)

화학공업	플라스틱·고무·가죽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	기계류	전기·전자	잡제품
9.9	12.7	1.4	8.5	14.1	15.5	25.4	12.7

나. 수출 동기 및 계기

우리나라 기업의 중미지역 수출 동기를 조사하기 위해 본 설문에서는 현지 생산공장 보유, 시장개척단 참여, 자체시장 개발, 현지 바이어 요청, 제3국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 활용, 기타의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미 수출 주요 동기는 자체시장 개발(52.3%)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현지 바이어 요청(32.3%)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13. 한국 기업의 대중미 수출 동기

(단위: 비중, %)

현지생산 공장보유	시장개척단 참여	자체시장 개발	현지 바이어 요청	제3국 진출 물류거점 활용	기타
0.0	1.5	52.3	32.3	0.0	13.8

다. 수출 성과

중미시장 수출 후 해당 기업의 수출실적에 대해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61.8%에 달해 대체적으로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재 수출실적이 좋다”가 12.7%며, “아직 미흡하나 성장가능성이 크다”가 49.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불만족스럽다”는 전체 21.8%를 차지하였는데, “현재 수출실적이 저조하다(20.0%)”, “향후 수출전망이 어둡다(1.8%)”라고 불만족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표 4-14. 수출실적 평가

(단위: 비중, %)

만족스럽다(61.8%)		불만족스럽다(21.8%)		판단할 수 없다(16.4%)	
현재 수출실적이 좋다	아직 미흡하나 성장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출실적이 저조하다	향후 수출전망이 어둡다	수출 초기라 판단할 수 없다	수출전망을 하기 어렵다
12.7	49.1	20.0	1.8	7.3	9.1

중미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요 경쟁상대국을 묻는 설문조사에 현재 중국과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전체 응답기업의 35.1%)되었다. 이 밖에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12.3%, 유럽 기업 10.5% 순으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한국 수출기업의 주요 경쟁대상국

(단위: 비중, %)

한국	현지국	일본	중국	기타 아시아	미국	유럽	인근 중남미	기타
12.3	6.1	8.8	35.1	4.4	12.3	10.5	8.8	1.8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중미시장의 경쟁대상국와 비교해 품질,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등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현지시장 마케팅 우위와 A/S 측면에서는 경쟁대상국의 기업과 비교해 다소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경쟁대상국에 대한 경쟁우위 요인

(단위: 비중, %)

요인	1	2	3	4	5
가격	13.3	16.7	33.3	30.0	6.7
품질	0.0	4.3	30.4	45.7	19.6
디자인	0.0	3.7	44.4	40.7	11.1
신속한 납기	3.8	15.4	34.6	30.8	15.4
브랜드 이미지	0.0	7.7	30.8	46.2	15.4
현지시장 마케팅 우위	18.8	25.0	31.3	18.8	6.3
A/S 등	20.0	5.0	30.0	25.0	20.0

주: 척도는 1부터 5까지며, 높을수록 경쟁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라. 수출 애로사항

현지 수출시장 진출에서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마케팅 능력 부족(21.3%)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이어 중국 등과 같은 경쟁국의 부상(20.6%), 환율변동(14.2%), 높은 관세(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7. 수출시장 진출 애로사항

(단위: 비중, %)

마케팅 능력 부족	환율 변동	경쟁국의 부상	까다로운 기술규정	관세	환경 기준	통관 절차	수입쿼터 및 라이선스	한국제품 인식 부족	복잡한 유통구조
21.3	14.2	20.6	4.3	12.1	0.7	10.6	1.4	10.6	4.3

또한 중미지역 수출 시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방법으로는 자체적으로 해결(72.6%)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KOTRA에 문의(19.4%)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표 4-18. 중미 수출 시 애로사항 해결방법

(단위: 비중, %)

코트라에 문의	무역협회에 문의	중소기업청에 문의	자체적으로 해결	해결방법이 없음	기타
19.4	3.2	0.0	72.6	0.0	4.8

마. 비관세장벽

중미 수출에서 경험하는 비관세장벽 중 가장 심각한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입을 위한 복잡한 사전허가 및 승인필요(23.0%)”가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과 부담이 과도(20.7%)”, “외환거래 및 송금 규제로 인한 어려움(14.9%)”, “전시품 및 샘플 통관의 특혜가 없고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및 허가 절차 필요(10.3%)”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9. 중미 수출 시 비관세장벽 애로사항

(단위: 비중, %)

비관세장벽 사례	비중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과 부담이 과도	20.7
외환거래 및 송금규제로 인한 어려움	14.9
세관의 자의적인 관세평가로 인한 과도한 관세부과	5.7
통관검사 시 전수검사로 인한 통관지연	6.9
세관원의 뇌물요구 및 고의적인 행정지연	2.3
수입을 위한 복잡한 사전허가 및 승인필요	23.0
전시품 및 샘플 통관의 특혜가 없고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및 허가 절차 필요	10.3
안전규격 라벨링 등 제품 표시에 따른 애로사항	2.3
현지 공인기술 인증 취득상의 어려움	2.3
인증취득 시 불필하게 과도한 기술요건 요구	0.0
특정 품목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어 수출 원천봉쇄	0.0
기존 검사결과의 불인정으로 인한 중복검사	0.0
선전적 사전검사로 인한 불편	4.6
수입쿼터를 통한 수량규제로 자유로운 수출이 어려움	0.0
기타	6.9

바. 한·중미 FTA 관련

한·중미 국가간 FTA 협상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많음(37.5%), 많음(23.2%), 보통(28.6%) 등 전체 89.3%가 FTA 협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표 4-20. 한·중미 국가간 FTA 협상에 대한 관심도

(단위: 비중, %)

매우 많음	많음	보통	보통 이하	관심 없음
37.5	23.2	28.6	10.7	0.0

또한 중미 8개 국가 중 우선적으로 FTA가 체결되어야 할 국가로 과테말라와 파나마가 28.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으며, 코스타리카(16.4%), 도미니카 공화국(11.9%)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21. FTA 우선 체결대상국

(단위: 비중, %)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즈	도미니카 공화국
28.4	7.5	4.5	3.0	16.4	28.4	0.0	11.9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중미 현지국과의 FTA 체결 시 관세 인하 및 철폐(53.5%)를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지국과 FTA를 통해 통관절차 간소화(26.8%), 정부조달시장 참여(7.0%)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22. 한·중미 FTA 관심 협상분야

(단위: 비중, %)

관세 인하 및 철폐	기술도입관련 규제	통관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정부조달 시장 참여	원산지 규정	지적 재산권	무역피해 규제	기타
53.5	2.8	26.8	0.0	7.0	4.2	2.8	1.4	1.4

사.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대중미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 및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수출 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먼저 우리 기업들이 정부에 대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지국에 한국 경제, 문화 등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14.5%)”과 “현지국과의 신속한 FTA 체결(14.5%)”이었다. 그 다음 요청사항으로는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13.8%)”였다. 중미 국가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수출자금 지원

표 4-23. 한국 정부·기관 요청사항

(단위: 비중, %)

한국 정부 및 기관에 요청 내용	비중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	13.8
입지 지원(한국기업전용공단 건설 등)	1.4
현지국에 한국 경제, 문화 등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14.5
현지 비자 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간 협상 필요	6.5
현지 인력의 한국 연수를 통한 한국문화 홍보 등 교육기회 제공	0.0
중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교육기관 또는 과정 마련 확대	7.2
국내에 현지(중남미) 전문가 데스크 또는 연구소 설립	2.9
현지국과의 신속한 FTA 체결	14.5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 제공(홈페이지, 안내서, 설명회 등)	7.2
수출 컨설팅 서비스(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1
상무관, 무역관 등 정부관련 기관 설치 확대를 통한 현지 수출애로 해소지원	7.2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13.0
현지국 정부와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5.1
기타	1.4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13.0%)”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교육기관 또는 과정 마련 확대(7.2%)”, “홈페이지, 안내서, 설명회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 제공(7.2%)”, “상무관, 무역관 등 정부관련 기관 설치 확대를 통한 현지 수출애로 해소 지원(7.2%)”, “현지 비자 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 간 협상 필요(6.5%)”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컨설팅 서비스(5.1%)”, “현지국 정부와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5.1%)”도 제시되었다.

3. 투자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투자설문조사 방법 및 한계

본 연구에서는 중미 진출 한국 기업 총 229개사를 대상으로 2009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메일·팩스·전화·현지방문조사 등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시시하였다. 총 67개 기업에서 회신을 받아 설문조사 응답률은 29.3%를 기록하였다.[68] 표본 수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마다 진출 기업 수에서 편차가 심하여 각국의 특성이 설문 전체 결과에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코스타리카의 경우 진출한 기업이 1개 기업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기업이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에 집중되어 있어 양국의 특징이 중미 전체 설문 결과에 다소 반영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68) 이 자료는 권기수·김진오·고희채(2009)의 『한국기업의 대중남미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수행 시 수집한 설문자료 중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7개국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벨리즈는 설문자료가 없어서 제외하였다.

표 4-24. 중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개요

국가	총 연락처 수	연결된 곳 수	회신 수
과테말라	94	25	30
니카라과	24	12	10
도미니카공화국	25	17	8
엘살바도르	22	15	9
온두라스	52	12	5
코스타리카	1	1	1
파나마	11	10	4
총계	229	92	67

나. 개요

1) 기업형태

설문조사에서 기업형태와 관련해 해당 기업체는 다음과 같이 개인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설문대상 기업이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한 기업형태 분류 결과, 중소기업이 가장 큰 비중(64.2%)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개인업자(28.4%), 대기업(7.5%)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미 지역에서는 대기업 비중이 낮은 반면, 봉제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자, 물산, 타이어 등의 판매법인을 중심으로 물류의 중심지인 파나마에 집중되어 있다.

표 4-25. 기업형태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개인업자	36.7	20.0	37.5	22.2	20.0	0.0	0.0	28.4
중소기업	63.3	70.0	62.5	77.8	80.0	100.0	0.0	64.2
대기업	0.0	10.0	0.0	0.0	0.0	0.0	100.0	7.5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중미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7개국이며, 전체는 조사대상국 총계를 의미함. 이하 동일.

2) 진출형태

기업의 진출형태는 생산법인, 판매법인, 서비스법인, 지점, 연락사무소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미 진출 기업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절대적으로 생산법인(88.1%)으로 나타났으며, 지점(6.0%), 판매법인(4.5%)이 그 뒤를 이었다.

표 4-26. 진출형태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생산법인	96.7	100.0	62.5	100.0	100.0	100.0	0.0	88.1
판매법인	3.3	0.0	25.0	0.0	0.0	0.0	0.0	4.5
서비스법인	0.0	0.0	12.5	0.0	0.0	0.0	0.0	1.5
지점	0.0	0.0	0.0	0.0	0.0	0.0	100.0	6.0
연락사무소	0.0	0.0	0.0	0.0	0.0	0.0	0.0	0.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투자형태

투자형태는 단독, 합작, 합자, M&A로 분류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단독 투자가 전체의 98.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즉 중미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단독 투자

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합작이나 M&A 투자를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투자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중미에 대한 주요 투자부문이 전자 및 부품 산업, 화학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섬유 및 봉제업 등 단독 투자 경향이 강한 업종이어서 실질적인 투자형태도 단독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27. 투자형태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단독	9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8.5
합작	3.3	0.0	0.0	0.0	0.0	0.0	0.0	1.5
합자	0.0	0.0	0.0	0.0	0.0	0.0	0.0	0.0
M&A	0.0	0.0	0.0	0.0	0.0	0.0	0.0	0.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업종별 형태

분석에 사용된 업종별 형태는 농업, 어업, 광업, 임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기타의 10개 산업분야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제조업 진출이 전체 89.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소매업과 사업서비스업이 각각 4.5%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4-28. 분석대상 업종별 형태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농업	0.0	0.0	0.0	0.0	0.0	0.0	0.0	0.0
어업	0.0	0.0	0.0	0.0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표 4-28. 계속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임업	3.3	0.0	0.0	0.0	0.0	0.0	0.0	1.5
제조업	90.0	100.0	62.5	100.0	100.0	100.0	75.0	89.6
건설업	0.0	0.0	0.0	0.0	0.0	0.0	0.0	0.0
도소매업	0.0	0.0	25.0	0.0	0.0	0.0	0.0	4.5
사업서비스업	3.3	0.0	12.5	0.0	0.0	0.0	25.0	4.5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투자 동기 및 정보입수

한국기업의 중남미 투자 동기를 조사하기 위해 본 설문에서는 현지 내수시장 진출, 저렴한 노동력, 제3국 우회수출, 원자재/부품 확보, 자원개발 등 총 12개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69)]

설문조사 결과, 한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의 주요 동기는 저렴한 노동력 28.2%, 해외 고객요구에 대한 부응 21.8%, 제3국 우회수출 14.7%, 현지투자 우대조치 12.4%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미 투자 동기는 중남미 지역에서의 낮은 노동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고, 미국 유통업자가 대부분인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및 현지의 투자 우대조치도 주요 투자 동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투자자들은 중미를 제3국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원산지규정과 관세 등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이었다.

69) 우선 순위별로 3개까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4-29. 투자동기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현지 내수시장 진출	2.5	4.0	22.2	9.1	0.0	50.0	33.3	7.6
저렴한 노동력	31.6	36.0	16.7	27.3	26.7	0.0	11.1	28.2
제3국 우회수출	17.7	4.0	11.1	22.7	6.7	50.0	11.1	14.7
해외 고객요구에 대한 부응	22.8	20.0	22.2	22.7	20.0	0.0	22.2	21.8
원자재/부품 확보 용이	2.5	0.0	5.6	0.0	6.7	0.0	0.0	2.4
생산 공정상 여타 기업과의 연계진출	6.3	12.0	11.1	0.0	26.7	0.0	11.1	8.8
현지투자 우대조치	12.7	12.0	11.1	18.2	13.3	0.0	0.0	12.4
한국 내수시장 부진	1.3	8.0	0.0	0.0	0.0	0.0	0.0	1.8
한국 내 규제	0.0	0.0	0.0	0.0	0.0	0.0	0.0	0.0
현지의 특화기술 활용	1.3	0.0	0.0	0.0	0.0	0.0	0.0	0.6
자원개발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1.3	4.0	0.0	0.0	0.0	0.0	11.1	1.8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지 진출 및 현지 기업활동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은 어디서 정보를 주로 입수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업체가 현지 기 진출업체(40.0%)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회사 자체인력을 활용(25.6%)하거나 현지 정부 및 경제관련 기관(16.0%)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았다.

중미의 경우 기 진출업체를 활용한 정보 획득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투자업종이 섬유 및 봉제업에 집중되어 기 진출업체 및 인력을 활용할 경우 그 효과성이 높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섬유 및 봉제업에서 수직적 생산 네트워크를 지닌 기 진출업체와의 협력은 하청 성격을 지닌 업체와 원부자재 생산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측 지원기관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관련 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피상적이거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4-30. 정보 입수원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현지 기 진출업체	43.1	45.0	25.0	40.0	41.7	0.0	33.3	40.0
언론상 등 인터넷 정보	5.9	5.0	0.0	10.0	0.0	0.0	22.2	6.4
현지 정부 및 경제관련 기관	9.8	20.0	25.0	25.0	16.7	0.0	11.1	16.0
회사 자체인력 활용	25.5	25.0	25.0	20.0	25.0	100.0	33.3	25.6
전문 컨설팅 기관/ 해당 분야 전문가	3.9	0.0	8.3	0.0	8.3	0.0	0.0	3.2
한국 측 지원기관	7.8	5.0	0.0	0.0	0.0	0.0	0.0	4.0
기타	3.9	0.0	16.7	5.0	8.3	0.0	0.0	4.8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라. 현지경영 실태

1) 금융조달

중미 진출 한국 기업의 주요 운영자금 조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에서는 금융조달을 한국 모기업, 현지 협력선, 현지 금융기관의 융자, 한국 금융기관의 융자, 현지법인 유보이익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지법인 유보이익이 4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한국 모기업 17.6%, 현지 금융기관의 융자 13.2% 순으로 나타나, 전체 자금조달의 약 60%를 자체 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1. 금융조달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한국 모기업	20.0	18.8	11.1	9.1	11.1	33.3	33.3	17.6
현지 협력선	10.0	18.8	0.0	0.0	11.1	0.0	0.0	8.8
현지 금융기관 융자	5.0	12.5	22.2	27.3	33.3	0.0	0.0	13.2
한국 금융기관 융자	5.0	0.0	11.1	9.1	11.1	0.0	0.0	5.5
제3국 금융기관 융자	2.5	0.0	0.0	0.0	0.0	33.3	0.0	2.2
현지법인 유보이익	47.5	43.8	22.2	45.5	33.3	33.3	33.3	41.8
기타	10.0	6.3	33.3	9.1	0.0	0.0	33.3	11.0
총계	0.0	0.0	0.0	0.0	0.0	0.0	0.0	100.0

2)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 활동

중미 진출 현지법인의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활동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현지 공장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의 조달선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중미의 경우 투자진출 업종이 제한적인 가운데 원사, 섬유 등 주요 원부자재의 현지조달 능력이 떨어져 제3국(41.2%) 및 한국(30.8%)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4-32. 원부자재 조달

(단위: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현지시장에서 직접조달	36.9	6.3	12.7	34.4	55.0	30.0	0.0	28.1
한국으로부터 수입	40.5	42.7	33.0	8.3	15.0	60.0	95.0	30.8
제3국으로부터 수입	23.4	51.0	54.3	57.3	30.0	10.0	5.0	41.2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현지법인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 모기업에서 생산 중인 품목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기업에서 생산이 중단된 품목은 16.7%로 조사되었다.

중미의 경우 하청 성격의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주요 개도국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변국 시장진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모기업의 경영전략으로 인해 모기업과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33. 현지법인 생산품목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모기업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3.7	8.3	25.0	30.0	20.0	0.0	0.0	11.7
현재 모기업 생산 중인 품목	40.7	41.7	25.0	10.0	0.0	100.0	0.0	31.7
모기업 생산 또는 현지법인 가동 후 모기업 생산중단 품목	11.1	33.3	0.0	10.0	40.0	0.0	0.0	16.7
모기업 생산에 필요한 품목	14.8	8.3	0.0	10.0	0.0	0.0	0.0	10.0
기타	29.6	8.3	50.0	40.0	40.0	0.0	100.0	30.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우리 현지법인들은 현지 생산설비 중 한국산 신설비를 가장 많이 사용(전체의 39.1%)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제3국산 신설비를 사용하는 비중이 26.4%에 달해 전체적으로 신설비를 사용하는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모기업의 중고설비(12.6%)를 사용하거나 현지설비를 임대(9.2%)해 사용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다.

중미의 생산설비 형태는 업종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남미 전체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투자 비중이 높으면서 진출시기가 다소 오

래된 섬유 및 봉제업과 전자조립 산업은 초창기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신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면접조사에 따르면 최근에 투자한 기업들은 투자 유치국의 중고설비 반입에 대한 거부감, 기계류 등 한국산 자본재의 고비용 등으로 인하여 중국산 등 제3국 설비 혹은 현지 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한국 모기업의 중고설비라고 응답한 경우는 한국에서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설비를 이전한 경우와 현지 기 진출했던 업체를 인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 한국에 자리한 모기업의 기능은 대부분 생산 활동보다는 영업, 디자인을 포함한 관리 부문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4. 현지법인 생산설비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중미
한국산 신설비	43.9	41.2	50.0	16.7	33.3	50.0	39.1
한국 모기업의 중고설비	2.4	23.5	16.7	16.7	22.2	50.0	12.6
제3국산 신설비	26.8	23.5	16.7	41.7	22.2	0.0	26.4
합작선의 기본설비	4.9	0.0	0.0	0.0	0.0	0.0	2.3
현지설비 임대	12.2	11.8	0.0	8.3	0.0	0.0	9.2
기타	9.8	0.0	16.7	16.7	22.2	0.0	10.3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진출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만약 한국시장이라면 제품 수명주기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쇠퇴기라고 하는 응답이 64.3%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성장기(19.6%), 성숙기(14.3%)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중미 진출 기업들은 중남미 다른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한 기업보다 제품 수명주

기가 쇠퇴기에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데, 이는 응답 기업의 대부분이 섬유 및 봉제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미에서 성장기 혹은 성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는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화학 플라스틱 제조업체이거나 실질적으로 지역에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현지 판매법인의 응답이었다.

표 4-35. 제품 수명주기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중미
도입기	3.4	0.0	0.0	0.0	0.0	0.0	1.8
성장기	13.8	33.3	25.0	37.5	0.0	0.0	19.6
성숙기	20.7	11.1	0.0	0.0	0.0	100.0	14.3
쇠퇴기	62.1	55.6	75.0	62.5	100.0	0.0	64.3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업들의 현지 생산활동 결과를 한국 대비 생산원가, 한국 대비 품질, 한국 대비 인프라 수준, 한국 대비 납기 등으로 구분하여 1에서 5의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한국 대비 생산원가에 대해서는 양호(척도 4.3)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한국 대비 인프라 수준은 매우 불량(척도 2.0)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급격한 임금인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미는 여전히 임금수준이 낮고 제3국으로부터의 저가 원부자재 활용도가 높아져 생산원가에서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리적 근접성과 더불어 북미시장 중심의 주문관리를 통해 짧은 납기에도 부응할 수 있는 적기납품(quick delivery)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현지 생산활동 결과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중미
한국 대비 생산원가	4.3	4.1	4.7	4.4	4.4	4.0	4.3
한국 대비 품질	2.8	2.1	3.0	2.7	3.2	3.0	2.7
한국 대비 인프라	2.0	2.3	1.7	2.3	1.8	1.0	2.0
한국 대비 납기	4.0	3.5	4.0	3.4	5.0	2.0	3.9
평균	3.3	3.0	3.3	3.2	3.6	2.5	3.2

주: 척도는 5(매우 좋음), 4(약간 좋음), 3(대등), 2(조금 나쁨), 1(매우 나쁨)로 나타냄.

3) 매출·영업·마케팅

중남미 투자 진출 한국 기업의 지역별 총 매출액의 구성은 현지 내수판매와 한국을 포함한 제3국 수출로 구성되었다. 중남미 전체적으로 보면 제3국 수출 비중이 85%로 현지 내수판매 15%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미의 특성은 관련 내수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가운데 투자진출 비중이 높은 섬유 및 봉제업 생산품목 대부분이 북미시장에 수출되는 데 있다.

표 4-37. 총 매출액의 지역별 구성

(단위: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진출국 현지 내수판매	7.0	4.0	56.0	20.0	0.0	85.0	1.0	15.0
제3국으로 수출(한국포함)	93.0	96.0	44.0	80.0	100.0	15.0	99.0	85.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음으로 중남미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은 상품판매 시 OEM 상표, 현지법인 자체 상표, 국내 모기업 상품 또는 현지 파트너의 상표 중 어떤 상표를 많이 부착

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은 OEM 상표 부착(69.0%)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뒤는 현지법인 자체 상표(16.0%), 국내 모기업 상표(8.0%), 현지 파트너의 상표(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8. 판매 시 사용상표별 구성비

(단위: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중미
OEM 상표	82.1	86.7	49.8	57.1	60.0	69.0
현지법인 자체 상표	10.7	11.1	33.5	17.1	40.0	16.0
국내 모기업 상표	0.0	0.0	16.7	0.0	0.0	8.0
현지 파트너의 상표	7.1	2.2	0.0	25.7	0.0	7.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지 내수판매 시 한국 기업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하는지, 예를 들면 직영매장, 자체 유통업체 보유, 현지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4-39]와 같다.

중미에서는 내수시장 진출이 극히 제한적인 가운데에도 현지 기업 직납 비중이 27.3%를 기록하였고, 직영매장을 유통경로로 활용하는 비중도 16.4%로 높게 나타났다. 면접조사 결과 주로 개인업자들이 소규모 생산설비와 직영매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사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9. 내수판매 시 유통경로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직영매장	16.7	0.0	33.3	15.4	0.0	100.0	0.0	16.4
자체 유통업체	0.0	0.0	0.0	15.4	0.0	0.0	0.0	3.6

표 4-39. 계속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현지 유통업체와 직거래	11.1	0.0	11.1	7.7	0.0	0.0	0.0	7.3
대리	11.1	16.7	22.2	0.0	0.0	0.0	50.0	12.7
현지 정부에 납품	5.6	0.0	11.1	15.4	0.0	0.0	0.0	7.3
위탁판매	5.6	0.0	0.0	0.0	0.0	0.0	25.0	3.6
현지 협력선	11.1	0.0	0.0	7.7	0.0	0.0	0.0	5.5
프랜차이즈 가맹점	0.0	0.0	0.0	0.0	0.0	0.0	0.0	0.0
현지 기업 직납	16.7	50.0	22.2	30.8	50.0	0.0	25.0	27.3
기타	22.2	33.3	0.0	7.7	50.0	0.0	0.0	16.4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기술 및 경쟁력 비교

현지법인의 기술도입 원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기업이 진출국 현지 연구개발(38.5%)에서 도입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한국 내 모기업(35.4%), 현지 합작 파트너(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미 진출 기업의 상당 부분이 모기업이 없는 현지에 뿌리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미에 진출해 있는 봉제, 나염, 원부자재 관련 기업들은 모기업을 현지로 완전 이전하는 동시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이 이전한 기술이 진출국의 동종업계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역부메랑 효과를 입힐 가능성에 대해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작다”, “매우 작다”로 구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표 4-40. 현지법인의 기술도입 원천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한국 내 모기업	33.3	55.6	25.0	18.2	40.0	50.0	100.0	35.4
진출국 현지 연구개발	45.5	11.1	50.0	36.4	60.0	0.0	0.0	38.5
현지 합작 파트너	6.1	22.2	0.0	18.2	0.0	0.0	0.0	9.2
현지 연구기관	6.1	0.0	0.0	9.1	0.0	50.0	0.0	6.2
제3국 기술도입	6.1	11.1	0.0	0.0	0.0	0.0	0.0	4.6
기타	3.0	0.0	25.0	18.2	0.0	0.0	0.0	6.2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작다(22.4%)” 또는 “매우 작다(56.9%)”로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활동 항목에서 “현지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시장이라면 제품 수명주기가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절반 이상이 “쇠퇴기”라고 답한 설문조사와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41. 이전기술과 국제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관계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매우 크다	6.9	0.0	0.0	0.0	0.0	0.0	0.0	3.4
크다	6.9	11.1	0.0	0.0	0.0	0.0	0.0	5.2
보통이다	13.8	0.0	25.0	11.1	20.0	0.0	0.0	12.1
작다	20.7	33.3	0.0	11.1	40.0	0.0	100.0	22.4
매우 작다	51.7	55.6	75.0	77.8	40.0	100.0	0.0	56.9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현재 중국과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전체 응답기업의 19.9%)되었다. 이 밖에 기타 아시아 기업 19.9%, 인근 중남미 기업 19.2%, 한국 기업 17.8%, 현지국 기업 13.7% 순으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미에서의 특징은 중국 이외에 기타 아시아 지역 및 중미 주변국 기업들이 주요 경쟁기업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저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섬유 및 의류 업종의 특성상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미 7개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중미에서 한국 기업을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중이 17.8%로 나타났지만, 면접조사에서는 생산법인보다는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미지역 봉제업의 경우 수직적 통합을 갖춘 한국 업체들보다는 하청업체들이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2. 동종업종 중 경쟁국가 기업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한국	14.3	35.0	16.7	9.5	30.8	0.0	12.5	17.8
현지국	11.4	15.0	8.3	19.0	30.8	0.0	0.0	13.7
일본	0.0	0.0	16.7	0.0	0.0	0.0	37.5	3.4
중국	22.9	10.0	33.3	14.3	7.7	50.0	25.0	19.9
기타 아시아	28.6	10.0	16.7	19.0	7.7	0.0	0.0	19.9
미국	1.4	5.0	0.0	14.3	15.4	0.0	12.5	5.5
유럽	0.0	0.0	0.0	0.0	0.0	0.0	0.0	0.0
인근 중남미	21.4	25.0	0.0	23.8	7.7	50.0	12.5	19.2
기타	0.0	0.0	8.3	0.0	0.0	0.0	0.0	0.7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남미 진출 한국 기업체들은 현지 업체(외자기업 제외)와 비교해 특허 등 기술(척도: 4.0), 제품품질(4.2) 등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금융조달(2.6), 판촉·광고(2.4), 판매영업·마케팅(2.6) 측면에서는 현지 기업과 비교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 현지업체와의 경쟁력 척도 비교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특허 등 기술	4.2	3.7	3.5	4.2	3.3	5.0	4.5	4.0
원자재/부품조달	3.7	3.8	3.5	3.4	4.3	5.0	3.5	3.7
생산설비 능력	3.9	3.7	2.0	3.4	3.6	5.0	4.0	3.7
제품품질	4.4	3.8	3.7	4.3	3.8	5.0	4.0	4.2
브랜드	4.0	3.6	1.5	3.2	3.0	5.0	4.5	3.6
원가	3.0	3.2	4.0	3.1	3.2	4.0	5.0	3.2
노사관계	3.2	3.3	3.7	3.0	3.0	4.0	3.0	3.2
금융조달	2.8	3.3	1.0	2.0	2.2	4.0	2.0	2.6
인력확보, 노무관리	2.9	3.3	3.0	3.0	2.6	4.0	4.0	3.0
판촉·광고	2.6	2.2	2.0	2.0	1.5	5.0	3.5	2.4
국제적 영업, 수출	3.8	3.8	2.5	3.2	3.3	5.0	4.0	3.6
판매영업·마케팅	3.3	2.3	2.3	2.0	1.5	5.0	3.5	2.6
평균	3.5	3.3	2.7	3.1	2.9	4.7	3.8	3.3

주: 척도는 5(매우 우위), 4(약간 우위), 3(대등), 2(약간 열위), 1(매우 열위)로 나타냄.

5) 임금관리

임금수준 결정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가(지역사회) 규정대로 한다는 응답이 전체 73.0%로 대다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업계수준 감안 결정이 15.9%, 업체 독자 결정이 6.3%를 기록하였다. 중미의 경우 단체교섭을 통한 결정 비중이 낮은 이유는 준법 비중이 절대적

으로 높은 것도 있지만, 정부지원과 상급 및 현장노조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조정을 사전에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44. 임금수준 결정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업체 독자 결정	3.3	0.0	12.5	14.3	0.0	50.0	0.0	6.3
단체교섭 통해 결정	0.0	22.2	0.0	0.0	20.0	0.0	0.0	4.8
업계수준 감안 결정	16.7	0.0	12.5	28.6	0.0	0.0	100.0	15.9
국가 규정대로	80.0	77.8	75.0	57.1	80.0	50.0	0.0	73.0
인력파견 용역회사 결정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45. 연평균 임금 증가율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0~5%	10.0	0.0	12.5	11.1	0.0	0.0	50.0	9.4
6~10%	40.0	0.0	12.5	44.4	40.0	100.0	50.0	32.8
11~15%	33.3	0.0	37.5	0.0	40.0	0.0	0.0	23.4
16~20%	16.7	44.4	37.5	44.4	20.0	0.0	0.0	26.6
21% 이상	0.0	55.6	0.0	0.0	0.0	0.0	0.0	7.8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최근 3년간(2006~08년) 연평균 임금증가율은 6~10% 상승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전체의 32.8%). 연평균 임금증가율이 21% 이상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

업들도 전체의 7.8%나 있었다. 중미지역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니카라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좌파정부 등장 이후 최저 임금상승률이 최근 몇 년간 매우 높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각 직무에 대한 현지 고용인원의 월평균 급여는 사무직이 가장 높은 월 537달러, 다음으로 숙련공이 월 461달러, 비숙련공이 283달러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사무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숙련공, 비숙련공이지만, 파나마의 경우는 숙련공이 사무직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다.

표 4-46. 월평균 급여

(단위: 달러/월)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사무직	522	390	733	469	456	650	925	537
숙련공	428	297	470	288	518	500	2,275	461
비숙련공	289	214	208	205	279	390	925	283

투자진출 결정 시 인건비 예상치(기본급여 외에 각종 인건비 포함)와 실제 인건비 수준과 대비할 때는 현지진출 기업 대부분이 대등(42.4%) 또는 당초 예상치를 과소평가(50.8%) 했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루었다.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의 경우 중미 국가 중 당초 예상보다 인건비가 높은 대표적인 국가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미지역이 더 이상 저임금을 활용하는 투자대상 지역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기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표 4-47. 투자진출 결정 시 인건비 예상치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당초 예상치를 과대평가	7.1	0.0	40.0	0.0	0.0	0.0	0.0	6.8
대등	39.3	22.2	40.0	66.7	25.0	0.0	100.0	42.4
당초 예상치를 과소평가	53.6	77.8	20.0	33.3	75.0	100.0	0.0	50.8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 현지화 정도

본사와의 관계, 즉 현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 본사와 현지법인 중 어디서 주도적으로 행사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 현지화 정도가 높은 항목은 생산량 결정(척도: 4.8), 종업원의 채용, 승진, 급여 결정(4.0), 매출목표 결정(3.9), 주요 원료, 부품의 구매 결정(3.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사주도로 이루어지는 항목은 자금조달 결정(3.0), 신규설비 구매와 생산설비 확대결정(3.5), 신제품 도입에 관한 결정(3.3)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남미 진출 기업의 현지화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본사 파견인력의 현지 평균 체류기간은 3.7년으로 나타났다. 국별로는 도미니카공화국 6.5년, 파나마 4.5년, 엘살바도르 4.3년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과 현지 판매법인 진출 사례가 많을 경우 평균적인 현지 체류기간은 길고, 중소기업 및 개인업자 진출 사례가 많을 경우 체류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본사 파견인력에 대한 대우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8. 본사와의 관계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신제품 도입에 관한 결정	2.6	2.8	4.0	4.2	4.0	2.0	4.0	3.3
판매제품의 가격결정	2.5	2.6	5.0	4.2	4.0	5.0	4.0	3.4
매출목표 결정	4.0	3.2	5.0	4.4	4.5	4.0	2.0	3.9
해외 혹은 현지의 새로운 시장진출	2.7	2.4	4.3	4.0	4.0	4.0	4.0	3.3
생산량 결정	4.9	4.6	5.0	5.0	4.8	4.0	3.0	4.8
주요 원료, 부품의 구매 결정	3.3	3.6	5.0	4.6	4.3	5.0	3.5	3.9
신규설비 구매와 생산설비 확대결정	3.3	3.0	4.3	4.2	4.0	2.0	3.0	3.5
조직구조의 변경 결정	3.3	4.0	4.3	4.4	4.3	3.0	2.7	3.7
종업원의 채용, 승진, 급여 결정	3.8	4.4	5.0	4.0	4.5	4.0	2.7	4.0
자금조달 결정	2.8	3.0	3.7	3.6	3.8	1.0	1.0	3.0
평균	3.3	3.4	4.6	4.3	4.2	3.4	3.0	3.7

주: 척도 기준은 본사주도 1, 대등 3, 현지주도 5.

표 4-49. 현지 평균 체류기간

(단위: 년)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3.4	3.0	6.5	4.3	1.0	3.0	4.5	3.7

7) 경영성과

현지 진출 후 해당 기업의 사업실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이라는 응답이 60.0%에 달하는 등 대체적으로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업실적

이 저조하다” 또는 “향후 사업전망이 어둡다”라는 불만족의 비중은 전체 28.3%로 조사되었다.

표 4-50. 사업실적 평가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만족	현재 실적이 좋다	25.0	14.3	50.0	11.1	20.0	0.0	0.0	21.7
	아직 미흡하나 성장가능성이 크다	32.1	14.3	16.7	55.6	40.0	100.0	100.0	38.3
불만족	현재 사업실적이 저조하다	10.7	14.3	16.7	11.1	0.0	0.0	0.0	10.0
	향후 사업전망이 어둡다	25.0	28.6	0.0	11.1	20.0	0.0	0.0	18.3
판단유보	사업 초기라 아직 판단할 수 없다	0.0	0.0	16.7	0.0	0.0	0.0	0.0	1.7
	사업전망을 하기 어렵다	7.1	28.6	0.0	11.1	20.0	0.0	0.0	10.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최근 3년간(2006~08년) 매출액 또는 순이익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근거로 중남미 진출 한국 기업의 실적개선 또는 실적악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실적이 개선된 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41.2%)을 통한 실적개선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해외시장의 판매 증가(22.1%), 환율변동(14.7%) 등도 주요 실적개선의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표 4-51. 실적개선 이유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국내시장의 판매 증가	3.4	6.7	0.0	0.0	0.0	50.0	0.0	4.4
해외시장의 판매 증가	10.3	13.3	50.0	22.2	50.0	50.0	66.7	22.1
판매가격의 상승	0.0	6.7	0.0	0.0	0.0	0.0	33.3	2.9
수입조달 비용의 하락	0.0	6.7	0.0	0.0	0.0	0.0	0.0	1.5
국내조달 비용의 하락	0.0	0.0	0.0	0.0	0.0	0.0	0.0	0.0
인건비 감소	0.0	0.0	0.0	0.0	0.0	0.0	0.0	0.0
관리비·연료비 감소	10.3	20.0	0.0	0.0	0.0	0.0	0.0	8.8
생산성 향상	44.8	26.7	50.0	66.7	50.0	0.0	0.0	41.2
환율변동	24.1	20.0	0.0	0.0	0.0	0.0	0.0	14.7
기타	6.9	0.0	0.0	11.1	0.0	0.0	0.0	4.4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반면에 실적이 악화된 기업의 경우는 인건비 상승(28.7%)이 가장 큰 주범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해외시장의 판매 감소(25.4%), 판매가격의 하락(17.2%), 관리비·연료비 증가(16.4%) 등이 실적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이와 같은 실적개선 및 악화와 관련한 응답은 2008년 상반기를 전후한 세계경제의 호황과 침체, 그리고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

표 4-52. 실적악화 이유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국내시장의 판매 감소	0.0	0.0	0.0	0.0	0.0	0.0	0.0	0.0
해외시장의 판매 감소	25.8	25.0	16.7	22.7	33.3	0.0	50.0	25.4
판매가격의 하락	15.2	16.7	16.7	31.8	8.3	0.0	0.0	17.2
수입조달 비용의 상승	7.6	0.0	0.0	9.1	8.3	0.0	0.0	6.6

표 4-52. 계속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국내조달 비용의 상승	3.0	0.0	0.0	0.0	0.0	0.0	0.0	1.6
인건비 상승	28.8	33.3	33.3	22.7	33.3	50.0	0.0	28.7
관리비·연료비 증가	16.7	25.0	16.7	13.6	16.7	0.0	0.0	16.4
과다설비투자	0.0	0.0	0.0	0.0	0.0	0.0	0.0	0.0
환율변동	3.0	0.0	16.7	0.0	0.0	50.0	50.0	4.1
투자제도 변경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현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생산품의 품질(척도 4.7)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가격경쟁력(척도 4.2), 앞선 유연성과 적응력(척도 4.1), 앞선 기술(척도 3.9) 등도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에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었다.

표 4-53. 현지 경쟁력 유지 요인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가격경쟁력	4.0	4.9	3.6	4.3	4.4	5.0	4.7	4.2
생산품의 품질	4.8	4.9	4.8	4.4	4.6	5.0	4.7	4.7
브랜드 이미지	3.9	3.1	4.2	3.8	2.4	4.0	4.5	3.7
앞선 기술	3.8	4.3	3.8	4.3	3.0	3.0	4.0	3.9
현지시장에서의 마케팅 우위	2.3	2.7	3.6	3.7	1.8	3.0	3.5	2.7
수출시장에서의 마케팅 우위	3.9	3.1	2.8	4.5	3.6	3.0	4.0	3.7
앞선 경영기술	3.7	3.1	2.8	4.1	3.8	3.0	3.0	3.6
앞선 유연성과 적응력	4.1	4.1	3.8	4.1	4.2	4.0	4.7	4.1
현지 정부와의 교섭력	2.6	3.6	3.0	2.4	2.0	3.0	2.0	2.7
평균	3.7	3.8	3.6	4.0	3.3	3.7	3.9	3.7

주: 척도는 1부터 5까지로, “중요치 않음”을 1로 하고, “매우 중요함”을 5로 설정함.

현지공장 가동 후 국내 모기업의 변화에 대해, 진출 기업들은 국내 모기업의 수출액, 대현지국 수출, 매출액, 경상이익 및 대현지국 수입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국내 모기업의 경우 중미 이외 다른 지역에도 현지투자를 중복 실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미 변수만으로 이를 설명하기는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4. 현지공장 가동 후 국내 모기업의 변화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매출액	3.9	4.5	2.0	3.5	4.0	3.0	3.5	3.8
수출액	4.1	4.7	2.0	3.0	4.0	3.0	3.5	3.8
경상이익	3.4	4.0	4.0	3.3	3.0	3.0	4.0	3.6
대현지국 수출	4.1	4.7	2.0	3.5	4.0	3.0	3.0	3.8
대현지국 수입	3.1	5.0	3.0	3.5	3.0	3.0	3.0	4.0
생산규모 및 생산직 종업원 수	3.5	3.8	5.0	3.7	3.5	3.0	3.0	3.6
기술개발 활동	3.1	3.8	5.0	3.3	3.5	3.0	3.0	3.4
생산제품 단위당 부가가치	2.7	3.7	3.0	3.3	3.0	3.0	3.0	3.1
평균	3.5	4.3	3.3	3.4	3.5	3.0	3.3	3.6

주: 척도는 1부터 5까지로, “매우 감소”를 1로 하고 “매우 증가”를 5로 설정함.

마.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현지시장 진출단계(법인 또는 공장설립 단계)에서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인프라 부족(24.0%),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23.3%), 언어소통(16.4%), 정보부족(16.4%)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남미 비즈

니스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창업단계에서 여전히 행정 부문과 인프라 부문에서 개선의 여지가 높으며, 특히 전문적으로 지역정보를 제공해줄 인프라 구축과 현지어에 능통한 인력공급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표 4-55. 현지시장 진출단계 애로사항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	20.6	33.3	30.8	17.4	21.4	100.0	16.7	23.3
언어소통	16.2	0.0	15.4	26.1	21.4	0.0	33.3	16.4
투자허가기관, 파트너의 잦은 태도 변화	10.3	9.5	15.4	0.0	14.3	0.0	0.0	8.9
정보부족	17.6	9.5	7.7	21.7	21.4	0.0	16.7	16.4
공장부지 선정 및 시공의 어려움	4.4	4.8	0.0	0.0	0.0	0.0	0.0	2.7
인프라 부족	22.1	38.1	23.1	21.7	14.3	0.0	33.3	24.0
현지 협력선 물색 및 선정의 어려움	8.8	4.8	7.7	8.7	7.1	0.0	0.0	7.5
기타	0.0	0.0	0.0	4.3	0.0	0.0	0.0	0.7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지 경영 및 운영 단계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급격한 임금상승세에 따른 노동비용(19.1%) 및 생산비용(17.6%) 상승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고,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살인, 납치, 강도가 성행하면서 치안 불안이 세 번째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과테말라의 치안 불안은 경제활동에 약 50% 이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4-56. 현지 경영 및 운영 단계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노무관리	8.1	13.8	9.1	9.7	0.0	0.0	0.0	8.3
노동비용 상승	20.2	24.1	9.1	19.4	26.7	0.0	0.0	19.1
현지금융 조달난	6.1	3.4	4.5	9.7	13.3	33.3	0.0	6.9
생산비용 상승	17.2	13.8	18.2	22.6	26.7	0.0	0.0	17.6
인프라 시설 부족	4.0	6.9	13.6	3.2	13.3	0.0	40.0	6.9
내수시장 진출 곤란	1.0	0.0	0.0	3.2	0.0	0.0	0.0	1.0
판매대금 회수곤란	4.0	3.4	4.5	6.5	0.0	0.0	20.0	4.4
외자정책(투자규제)	0.0	0.0	0.0	0.0	0.0	0.0	0.0	0.0
원자재/부품 조달난	2.0	6.9	4.5	0.0	0.0	33.3	0.0	2.9
한국 기업과의 과당경쟁	6.1	3.4	0.0	3.2	0.0	0.0	0.0	3.9
원료비용 상승	4.0	3.4	9.1	3.2	13.3	0.0	0.0	4.9
에너지 공급	1.0	3.4	9.1	6.5	0.0	0.0	0.0	2.9
세제문제	0.0	3.4	9.1	3.2	0.0	33.3	0.0	2.5
환경규제	0.0	6.9	0.0	0.0	0.0	0.0	0.0	1.0
비효율적 관료주의	2.0	0.0	4.5	0.0	0.0	0.0	20.0	2.0
치안 불안	24.2	6.9	0.0	9.7	6.7	0.0	20.0	15.2
원산지규정	0.0	0.0	4.5	0.0	0.0	0.0	0.0	0.5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숙련공 구인난(33.9%)으로 나타났다. 임금이나 임금 외 부대비용 부담(20.9%), 언어 및 의사소통(15.7%), 전문직/기술직 구인난(15.7%) 등도 커다란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용상의 애로사항에서 구인난이 주요 사항으로 지적되었는데, 숙련공 및 비숙련공 구인난과 전문직·기술직 구인난을 포함하면 전체 50.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고용상의

애로사항들은 중미의 낮은 교육환경과 근로자 중심의 강력한 사회보장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57. 고용상의 애로사항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정부당국의 간섭	9.4	17.4	0.0	8.3	16.7	0.0	0.0	10.4
외지인 고용 곤란	1.9	0.0	0.0	0.0	0.0	0.0	0.0	0.9
숙련공 구인난	30.2	39.1	40.0	33.3	33.3	0.0	50.0	33.9
비숙련공 구인난	0.0	4.3	0.0	0.0	0.0	0.0	0.0	0.9
언어 및 의사소통	15.1	17.4	10.0	16.7	8.3	0.0	50.0	15.7
스카우트 전쟁	0.0	0.0	0.0	0.0	0.0	0.0	0.0	0.0
전문직/기술직 구인난	22.6	4.3	10.0	16.7	8.3	100.0	0.0	15.7
합작 파트너의 잉여인원 고용 요구	0.0	0.0	0.0	0.0	0.0	0.0	0.0	0.0
임금이나 임금 외 부대비용 부담	20.8	13.0	30.0	25.0	33.3	0.0	0.0	20.9
기타	0.0	4.3	10.0	0.0	0.0	0.0	0.0	1.7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관리와 관련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임금상승률(32.5%)과 과다한 사회보험료(22.0%) 및 수당/보조금(11.4%)이 임금관리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중미에서는 좌파정부가 재등장하면서 현재진행형으로 강화되고 있어 향후에도 감수해야 하는 애로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표 4-58. 임금관리 애로사항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업체간 임금인상 경쟁	16.7	4.3	]0.0	0.0	0.0	0.0	0.0	8.1
높은 임금상승률	29.6	43.5	30.8	33.3	38.5	0.0	0.0	32.5
임금결정 자주권 제약	5.6	0.0	7.7	6.7	0.0	0.0	0.0	4.1
과다한 수당/보조금	13.0	13.0	0.0	0.0	30.8	0.0	0.0	11.4
과다한 사회보험료	11.1	26.1	38.5	33.3	23.1	100.0	25.0	22.0
과다한 준조세	1.9	4.3	15.4	6.7	7.7	0.0	0.0	4.9
당초 인건비 예상치의 과소평가	9.3	4.3	7.7	0.0	0.0	0.0	0.0	5.7
업체간 임금수준 고려 결정	7.4	0.0	0.0	0.0	0.0	0.0	25.0	4.1
이직선언에 의한 임금인상 요구	1.9	4.3	0.0	0.0	0.0	0.0	0.0	1.6
문제없다	3.7	0.0	0.0	13.3	0.0	0.0	50.0	4.9
기타	0.0	0.0	0.0	6.7	0.0	0.0	0.0	0.8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지 인력관리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중미지역 전반적으로 책임의식 부족(27.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애사심 및 소속감 결핍(18.1%), 안일한 작업태도(13.0%), 높은 이직률(6.2%)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인력관리의 애로사항들은 중미지역 생산직 노동문화의 특성을 일부 반영한다. 즉 저기술, 비숙련공의 경우 직업을 미래의 삶보다 현재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중미지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노동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마킬라'라는 특수한 형태의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점이 인력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근로자는 한 기업에서 중대한 과실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 경우 같은 공단 내에 위치한 다른 기업에서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표 4-59. 인력관리 애로사항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안일한 작업태도	15.2	10.3	16.7	5.0	20.0	0.0	0.0	13.0
연장/시간외 근무 기피	5.1	3.4	0.0	5.0	20.0	0.0	11.1	5.7
책임의식 부족	26.3	24.1	33.3	25.0	33.3	33.3	33.3	27.5
애사심/소속감 결핍	17.2	20.7	22.2	20.0	0.0	33.3	33.3	18.1
위계의식 부족	2.0	0.0	0.0	0.0	6.7	0.0	0.0	1.6
제품/부품 절도행위	12.1	10.3	5.6	5.0	0.0	0.0	0.0	8.8
단체적 협동의식 결핍	6.1	6.9	5.6	5.0	0.0	0.0	0.0	5.2
지나친 평등의식	0.0	3.4	0.0	0.0	0.0	0.0	0.0	0.5
작업능력 부족	5.1	6.9	5.6	5.0	6.7	33.3	11.1	6.2
의사소통 어려움	0.0	0.0	5.6	10.0	6.7	0.0	0.0	2.1
현지 관리층의 과다한 권리행사	1.0	0.0	0.0	0.0	0.0	0.0	0.0	0.5
해고자 주권행사 곤란	7.1	0.0	0.0	0.0	0.0	0.0	0.0	3.6
높은 이직률	3.0	13.8	5.6	10.0	6.7	0.0	11.1	6.2
노사갈등	0.0	0.0	0.0	5.0	0.0	0.0	0.0	0.5
기타	0.0	0.0	0.0	5.0	0.0	0.0	0.0	0.5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지에서 자금조달 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이자율(26.7%), 담보설정의 어려움(25.0%), 복잡한 절차(19.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현지 기업금융 부족(16.4%), 모기업 보증요구(4.3%) 등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중미지역은 잦은 경제위기 경험으로 인하여 정책금리가 낮게 조정되더라도 기업 및 개인금융 금리는 다른 개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또한 현지 금융기관들은 위험 노출도가 높은 현지 기업 및 개인여신에 매우 보수적이어서 한국 기업들이 현지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특히 운영자금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공급의 시급성에 비추어 복잡한 절차와 시간소요로

어려움을 겪는 한편 토지 및 공장건물 등을 임대로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담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사례도 빈번하다. 이 외에 M&A 및 현지법인 설립을 제외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 설치조차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이다.

표 4-60. 자금조달 애로사항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모기업 보증요구	1.9	0.0	0.0	5.6	7.1	33.3	33.3	4.3
담보설정의 어려움	26.4	14.3	18.2	44.4	21.4	0.0	0.0	25.0
복잡한 절차	18.9	14.3	27.3	16.7	28.6	0.0	33.3	19.8
커미션 요구	5.7	0.0	0.0	0.0	0.0	0.0	0.0	2.6
한국경제 신인도에 대한 불신	1.9	0.0	0.0	5.6	0.0	0.0	0.0	1.7
높은 이자율	24.5	35.7	45.5	16.7	28.6	33.3	0.0	26.7
현지 기업금융 부족	18.9	21.4	0.0	11.1	14.3	33.3	33.3	16.4
기타	1.9	14.3	9.1	0.0	0.0	0.0	0.0	3.4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지에서 원부자재 조달 시 직면하는 애로사항으로는 품질(22.9%), 가격조건(20.7%), 납기(18.6%) 등이 주요 문제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 물량확보(15.7%), 현금만 가능한 결제조건(9.3%) 등으로 나타났다. 중미지역에서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물량 확보가 차별적인 애로사항으로 조사된 원인으로, 섬유 및 봉제 업종의 경우 현지의 수직적 통합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61. 현지 원부자재 조달 시 애로사항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가격조건	16.4	30.4	28.6	22.7	21.4	33.3	0.0	20.7
물량확보	17.9	17.4	28.6	9.1	7.1	33.3	0.0	15.7
결제조건(현금만 가능)	10.4	13.0	0.0	9.1	7.1	0.0	0.0	9.3
물류	1.5	4.3	14.3	0.0	0.0	0.0	25.0	2.9
품질	26.9	13.0	0.0	22.7	28.6	33.3	25.0	22.9
조달선 물색 및 선정의 어려움	6.0	17.4	0.0	13.6	14.3	0.0	0.0	9.3
납기	19.4	4.3	28.6	22.7	21.4	0.0	50.0	18.6
기타	1.5	0.0	0.0	0.0	0.0	0.0	0.0	0.7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지 내수판매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금회수 곤란(26.4%)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복잡한 세금제도(15.1%), 가격불리(11.3%), 유통업자 물색 곤란(9.4%), 거래선의 잦은 태도변화(7.5%) 등도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지목되었다.

중미지역에서는 현지제품 및 수입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낮고, 외자기업의 내수판매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중미지역에서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수출에 집중하고 있고, 내수판매에 종사하는 경우 개인업자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지에서 상품판매 시 물류상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상품수송 중 강도 및 도난(30.6%)과 복잡한 통관절차(25.9%)로 지적되었다. 이 밖에 도로망 미정비 및 열악한 포장상태(16.5%), 항만 서비스의 저품질 및 고가격(12.9%)과 항만 인프라 부족(11.8%) 등 항만 서비스 관련 인프라가 크게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미지역은 치안불안이 심각하고, 강도 및 도난으로 인한 애로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

표 4-62. 내수판매 시 애로사항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대금회수 곤란	30.8	25.0	23.1	25.0	33.3	0.0	25.0	26.4
유통업자 물색 곤란	0.0	16.7	7.7	0.0	0.0	0.0	50.0	9.4
현지 유통경로 복잡	7.7	0.0	15.4	0.0	0.0	0.0	0.0	5.7
내수비율 제한	0.0	25.0	0.0	0.0	33.3	0.0	0.0	9.4
지방간 시장보호 장벽	0.0	0.0	0.0	0.0	0.0	0.0	0.0	0.0
복잡한 세금제도	0.0	25.0	23.1	25.0	16.7	0.0	0.0	15.1
가격불리	23.1	0.0	7.7	25.0	0.0	0.0	25.0	11.3
거래선의 잦은 태도변화	23.1	0.0	7.7	0.0	0.0	0.0	0.0	7.5
물류/AS 고비용	7.7	0.0	15.4	0.0	0.0	0.0	0.0	5.7
기타	7.7	8.3	0.0	25.0	16.7	100.0	0.0	9.4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여 높다. 특히 통관 대기 중인 상태에서는 물론, 육상수송 과정에서 강절도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지사업 추진 시 직면하는 산업 인프라 관련 애로사항은 전력사정 불안(41.5%)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통시설 부족(32.1%)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중미는 발전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수입 의존성이 높은 가운데 전국을 연결하는 송배전 설비투자조차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간선도로 사정도 열악하여 트레일러 등 수송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3. 상품판매 시 물류상 애로사항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항만 인프라 부족	7.7	18.8	12.5	0.0	0.0	100.0	40.0	11.8
항만 서비스의 저품질 및 고가격	10.3	18.8	12.5	20.0	0.0	0.0	20.0	12.9
상품수송 중 강도 및 도난	41.0	12.5	25.0	30.0	50.0	0.0	0.0	30.6
복잡한 통관절차	30.8	25.0	12.5	40.0	0.0	0.0	20.0	25.9
도로망 미정비 및 열악한 포장상태	10.3	25.0	25.0	10.0	33.3	0.0	20.0	16.5
기타	0.0	0.0	12.5	0.0	16.7	0.0	0.0	2.4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64. 산업 인프라 관련 애로사항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전력사정 불안	37.8	39.1	53.8	50.0	45.5	33.3	33.3	41.5
교통시설 부족	35.6	30.4	30.8	12.5	36.4	0.0	66.7	32.1
토지이용 제한	0.0	0.0	0.0	0.0	0.0	0.0	0.0	0.0
용수 부족	11.1	8.7	7.7	0.0	9.1	0.0	0.0	8.5
항만 부족	6.7	13.0	7.7	12.5	0.0	33.3	0.0	8.5
기타	8.9	8.7	0.0	25.0	9.1	33.3	0.0	9.4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바. 투자진출 환경 평가

현지시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에서 5까지의 척도를 기준으로 16가지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중미시장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시장규모

가 크고 인접국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이었다. 그에 반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으며 현지 금융 이용이 어렵다는 부정적 시각도 아직까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5. 현지시장 특성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시장성이 크다	2.8	2.7	2.4	3.0	2.2	3.0	4.3	2.8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1.6	1.6	3.3	2.5	1.4	4.0	2.0	1.9
성장 잠재력이 크다	2.8	2.1	2.3	2.8	2.4	2.0	3.7	2.7
현지 유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다	2.3	1.8	2.3	2.7	1.8	2.0	2.7	2.2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2.4	1.5	1.5	2.8	1.8	2.0	2.3	2.1
인접국가 진출이 용이하다	3.7	3.1	2.3	4.3	2.8	3.0	4.0	3.4
현지 정부가 효율적이다	1.8	1.5	2.3	3.1	1.8	3.0	2.3	2.0
현지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1.4	1.9	2.0	2.0	1.8	1.0	3.0	1.7
금융비용이 낮다	1.6	1.6	1.7	2.5	1.8	3.0	3.0	1.8
과세수준이 낮다	3.2	2.9	2.3	3.3	3.0	3.0	3.7	3.1
자본 유출입이 자유롭다	3.8	3.4	3.5	3.4	4.0	4.0	4.3	3.7
계약과 지불이 원활하다	3.1	2.7	3.2	3.7	3.0	4.0	4.0	3.2
가격규제가 없다	3.6	3.0	3.8	3.7	3.2	4.0	4.0	3.5
직접투자지로서 적합하다	2.9	3.0	3.2	3.3	2.8	2.0	3.7	3.0
자원개발대상국가로 적합하다	2.4	2.0	2.0	2.3	1.8	1.0	2.3	2.2
현지시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2.7	2.3	2.2	2.7	2.8	4.0	3.0	2.6
평균	2.6	2.3	2.5	3.0	2.4	2.8	2.3	2.6

주: 척도는 1~5까지로, “정말 그렇다”는 5, “전혀 아니다”는 1로 설정함.

사. 향후 경영전략

향후 현지사업 운영방향에 대해 현상유지가 3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

며 투자축소(14.0%), 품목확대(12.8%) 순으로 나타나, 중미지역은 현상유지를 제외할 경우 투자축소, 제3국으로 이전(11.6%) 등의 비중이 높아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6. 향후 현지사업 운영방향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투자확대	7.7	16.7	10.0	10.0	0.0	0.0	16.7	9.3
업종추가	2.6	0.0	0.0	0.0	0.0	0.0	0.0	1.2
품목확대	5.1	0.0	20.0	30.0	12.5	0.0	50.0	12.8
현상유지	33.3	41.7	40.0	40.0	50.0	100.0	16.7	37.2
철수	2.6	0.0	0.0	10.0	0.0	0.0	0.0	2.3
투자축소	25.6	8.3	0.0	0.0	12.5	0.0	0.0	14.0
품목축소	7.7	8.3	0.0	0.0	12.5	0.0	0.0	5.8
진출국 현지 내 타 지역으로 이전	2.6	16.7	10.0	0.0	0.0	0.0	0.0	4.7
제3국으로 이전	12.8	8.3	10.0	10.0	12.5	0.0	16.7	11.6
기타	0.0	0.0	10.0	0.0	0.0	0.0	0.0	1.2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향후 중미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경영전략은 생산관리 강화(29.4%)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해외수출 확대(12.5%), 경영현지화 강화(11.9%), 관리인력의 육성(11.3%)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중미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전략은 크게 생산의 효율화와 해외수출 확대 및 현지화에 초점을 맞추어질 전망이다. 그에 반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등의 전략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67. 향후 현지사업이 지향해야 할 경영전략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생산관리 강화	34.2	29.6	18.8	26.3	35.7	33.3	0.0	29.4
신제품 개발	2.7	0.0	12.5	5.3	7.1	33.3	25.0	5.6
연구개발 강화	1.4	3.7	0.0	0.0	0.0	0.0	0.0	1.3
자동화 설비 확충	12.3	7.4	6.3	5.3	7.1	0.0	0.0	8.8
내수시장 진출	2.7	7.4	6.3	0.0	0.0	0.0	0.0	3.1
마케팅 강화	5.5	0.0	12.5	10.5	0.0	0.0	37.5	6.9
관리인력의 육성	9.6	18.5	12.5	15.8	7.1	0.0	0.0	11.3
경영현지화 강화	8.2	22.2	12.5	10.5	21.4	0.0	0.0	11.9
해외수출 확대	15.1	3.7	6.3	10.5	14.3	0.0	37.5	12.5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1.4	0.0	0.0	5.3	0.0	0.0	0.0	1.3
수익성 제고	6.8	7.4	12.5	10.5	7.1	33.3	0.0	8.1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향후 원자재 및 부품 조달선을 변경할 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상유지(66.7%)를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변경하더라도 현지 조달선 위주로 변경(26.7%) 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표 4-68. 향후 원자재·부품 조달선 변경 계획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현상유지	58.6	50.0	100.0	71.4	80.0	100.0	100.0	66.7
현지 조달선 위주로 변경	41.4	20.0	0.0	28.6	0.0	0.0	0.0	26.7
한국 조달선 위주로 변경	0.0	0.0	0.0	0.0	20.0	0.0	0.0	1.7
제3국 조달선 위주로 변경	0.0	30.0	0.0	0.0	0.0	0.0	0.0	5.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69. 향후 한국 본사와의 분업관계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현상유지	50.0	0.0	0.0	25.0	33.3	100.0	100.0	37.9
본사의 경영조직 변화 없이 현지에 생산조직 증설	0.0	40.0	0.0	25.0	0.0	0.0	0.0	10.3
본사의 생산조직 일부만을 현지에 이전	0.0	0.0	0.0	0.0	0.0	0.0	0.0	0.0
생산조직 100%를 이전하고 본사는 연구개발 및 영업만 수행	0.0	0.0	0.0	0.0	0.0	0.0	0.0	0.0
본사는 연구개발만 수행	0.0	0.0	0.0	0.0	0.0	0.0	0.0	0.0
본사는 영업만 수행	0.0	60.0	0.0	25.0	33.3	0.0	0.0	17.2
생산조직, 영업조직, 연구개발 조직 모두 현지 이전	8.3	0.0	50.0	0.0	0.0	0.0	0.0	6.9
현지로 완전이전(한국에 본사 없음)	41.7	0.0	50.0	25.0	33.3	0.0	0.0	27.6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70. 현지국과의 FTA 체결 시 진출기업의 기대 혜택

(단위: 비중,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중미
관세철폐	31.4	33.3	50.0	44.4	25.0	50.0	50.0	36.6
서비스 자유화	2.9	0.0	0.0	0.0	0.0	0.0	25.0	2.8
투자 및 정부조달 시 내국민 대우	17.1	11.1	0.0	11.1	25.0	0.0	0.0	12.7
기업인 및 기술자의 이동 원활화	5.7	11.1	12.5	11.1	0.0	0.0	0.0	7.0
비즈니스 환경 개선	37.1	44.4	25.0	22.2	50.0	50.0	25.0	35.2
기타	5.7	0.0	12.5	11.1	0.0	0.0	0.0	5.6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향후 한국 본사와의 분업관계를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상유지(37.9%)를 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현지로 완전이전(27.6%) 하겠다는 비중도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술개발 수요가 낮고 단순가공 수출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진출 비중이 높은 결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법인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모기업과 현지법인의 분업이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중남미 현지국과의 FTA 체결 시 관세철폐 효과를 가장 크게 기대(36.6%)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우리 기업들은 현지국과 FTA를 통해 노동법·제도·세관절차 간소화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35.2%)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설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칠레와 같이 비즈니스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기대는 관세철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주요 협력분야별 현황 및 평가

1. 개발협력
2. 중소기업 협력
3. 녹색산업 협력
4. IT산업 협력

1. 개발협력

가. 현황

한국의 개발협력은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09년 대(對)세계 원조금액은 양자간 원조가 약 5억 8,060만 달러, 다자간 원조가 약 2억 3,490만 달러로 약 8억 1,554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1년의 2억 6,465만 달러와 비교하면 지난 8년 동안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표 5-1. 한국의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 현황(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양자간 원조		376.1	493.5	539.2	580.6
	무상원조	259	361.3	368.7	344.5
	(KOICA)	(192.3)	(259.3)	(251.0)	(256.3)
	유상원조	117.1	132.2	170.6	214.1
다자간 원조		79.2	205.6	263.1	234.9
ODA 총계		455.3	699.1	802.3	815.54
ODA/GNI(%)		0.05	0.07	0.09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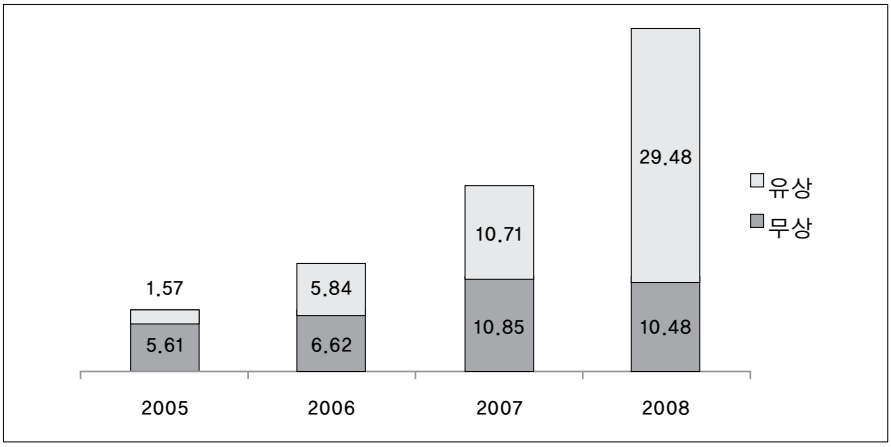
자료: OECD, KOICA, 외교통상부.

전 세계 원조 증가와 더불어 대(對)중미 원조규모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대중미 양자간 원조 총액은 약 4천만 달러였으며, 이는 한국의 전 세계 양자간 원조의 약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세계 원조의 경우 최근 무상원조가 유상원조에 비해 약 1.6~2.7배 컸던 데 반해, 중미의 경우는 유상원조가 무상원조 규모를 능가하는 특징이 있다. 2005년에는 무상원조가 유상원조에 비해 3배 이상 큰 규모였으나, 최근 유상원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2008년에는 유상

원조가 2,948만 달러로 무상원조에 비해 약 2배 가까운 규모를 차지했다.

그림 5-1. 한국의 대중미 양자간 ODA 현황(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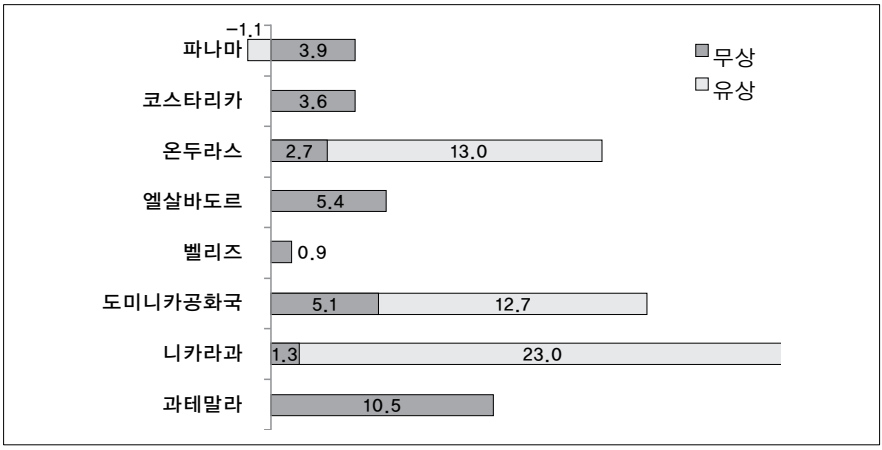
국별 원조규모를 살펴보면, 2005~08년 유상원조는 니카라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 순으로 각 1개 사업에 양도성 차관이 제공되었다. 니카라과의 경우는 후이갈파 시의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취수 및 정수장 건설과 배수관 매설 사업에, 도미니카(공)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세청 전산화 사업에, 온두라스에서는 병원 건립과 의료기자재 구입에 차관이 지원되었다. 특히 도미니카(공)의 관세청 전산화 사업은 우리나라의 관세 시스템이 중남미에 처음으로 수출된 사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중남미 인근 국가로의 후속사업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유상원조의 경우 금액은 크지만 사업 건수는 국별로 주로 1개의 사업에 지원된 것에 반해, 무상원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졌다. 국별로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에 가장 많은 원조가 이루어졌

다. 특히 과테말라가 2005~08년 기간 동안 약 1,053만 달러로 최대의 원조를 받았는데, 이는 과테말라가 한국의 무상원조 중점지원 대상국이었기 때문이다.[70]

그림 5-2. 한국의 국별 양자간 ODA 현황(2005~08년 누적, 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 5-2. 중미 국가들의 OECD/DAC 지위

LDC 최빈국	LIC 저소득국	LMIC 중저소득국	UMIC 고중소득국
		엘살바도르	벨리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자료: 2008년 8월 29일 개정된 OECD/DAC 수원국 리스트 분류기준에 따른 것임.

70) 한국은 OECD/DAC가 제시하는 수원국 분류기준에 따라 무상협력 대상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2011년부터 과테말라가 중점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중미지역에서 중점지원 대상국은 없어지고, 중남미지역에서는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가 중점지원 대상국으로, 나머지는 일반협력국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의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중 KOICA의 원조가 전체 무상원조의 약 8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5~08년 기간 동안 대중미 주요 무상원조 지원 분야는 정보통신, 교육, 행정제도 개선, 환경, 긴급구호 등의 인도적 지원이었다.

중미 8개국에는 최빈국과 저소득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빈곤퇴치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하며, 주로 중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에서 실행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원조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월드비전과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의 NGO가 중미에 거점 사무소를 두고 원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빈곤퇴치 사업은 NGO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2010년에는 KOICA와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가 과테말라의 파티시아 지역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NGO와 공공기관이 협력함으로써 인력 및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NGO들이 빈곤퇴치 프로그램에 주력하는 만큼 이 분야에서 민관의 원조 협력은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 및 정보통신 부문은 가장 활발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분야이자 중미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ICT 교육센터, 전자정부, e-비즈니스, 사이버 범죄 수사, 재해예방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업이 실시되었다. 특히 과테말라의 ICT 교육센터 건립사업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의료서비스 개선, 모자보건환경 개선, 산모 및 영아 사망률 감소, 전염병 예방 및 퇴치, 미성년 임신방지 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모자보건 향상과 전염병 예방 사업에, 소득수준이 높은 코스타리카 등에는 암 예방 및 조기진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별로 사업내용을 차별화하였다.

표 5-3. 대중미 분야별 무상원조*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5~08년
교육	1.23	2.04	1.92	2.08	7.27
보건	0.07	0.43	1.17	0.17	1.85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	0.25	0.61	1.43	2.29
식수공급 및 위생	0.01	0.01	-	0.14	0.15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2.28	1.48	1.21	0.28	5.25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0.45	0.21	0.11	0.14	0.91
운송 및 창고	0.02	0.03	-	-	0.05
통신	0.71	1.51	3.21	3.46	8.90
에너지 개발 및 공급	0.04	0.02	-	0.30	0.36
금융 및 재무 서비스	-	-	-	0.15	0.15
농업	0.03	0.04	0.07	0.03	0.17
임업	0.01	0.01	-	0.02	0.04
어업	0.06	0.01	-	0.01	0.08
공업	0.06	0.15	0.09	0.16	0.46
건설	0.01	0.10	-	-	0.10
통상정책 및 규정	0.07	0.16	-	0.05	0.28
관광	-	-	-	0.02	0.02
다부문(환경, 농촌개발 등)	0.03	0.10	2.08	0.93	3.14
인도적 지원	0.54	0.02	0.35	0.93	1.84
NGO 지원	-	-	-	0.03	0.03
비배분/비특정	-	0.03	-	-	0.03
합계	5.61	6.61	10.82	10.33	33.36

주: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무상원조 실적이며, NGO 원조는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문은 주로 도시지역의 직업훈련센터 건립을 중심으로 지원되어 도시의 교육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낮은 교육률을 고려한다면 농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환경부문의 주요 사업으로는 한-코스타리카 생물자원 공동연구센터 건립이 있다. 다른 부문 사업이 주로 한국이 우위를 가진 분야에서 중미국가를 원조하는 것이었다면, 연구센터 건립은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축적된 연구기술 등 현지 국가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차별화된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즈 등은 고소득국으로 분류되어 한국의 원조가 최근 축소되어왔다. 그러나 연구센터 건립은 이들 국가의 원조사업이 중저소득국과는 달리 현지 국가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중미의 높은 농업인구와 산업 인프라 확충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농촌개발이나 산업에너지 분야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농촌개발의 경우는 사업의 절반 이상이 연수생 초청에 집중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 평가

한국의 개발협력은 선진국의 지원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으로 인해, 한국이 제공하는 원조에는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수원국도 한국의 성공사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정신적 원조를 포함한다. 따라서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는 선진국의 원조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파급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국형 개발협력의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원조가 갖는 과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개발협력은 공여국 입장이 다소 강조된 특성이 일부 나타나는데,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부족과 원칙이 정립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성은 여타 공여국들도 가지고 있는 공통

의 문제인데, 수원국의 수요가 우선되지 못하는 동시에 수원국별 전문화·차별화된 협력방향이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미는 지리적·환경적·인구학적·경제적 특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라는 지역에 포함되어 분류된다. 따라서 중미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미 국가들간의 경제발전 정도, 교육수준, 정치발전, 환경적 취약성 등의 차이를 고려한 개발협력 방향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은 중점협력 대상국인 과테말라에, 부문별로는 초등교육과 보건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 공여국들도 과테말라를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한국의 원조가 차별성을 갖기가 힘들었다. 또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즈 등은 한국의 원조에서 소외되어왔다.

한국의 개발협력은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다. 시민사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놓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하여 국가별로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ODA에서 NGO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의 개발협력은 국가이익과 국제적인 공공성 사이에서 국가이익으로 원조가 기울어진 불균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 그동안 국제적인 공공성이라는 전 지구적 의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중소기업 협력

가. 현황

중미지역에서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앞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존재한다. 우선 중미지역의 협소한 시장규모, 수요의 다양성 결여,

무역거래 및 투자진출 패턴 등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 추진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대기업형과 중소기업형으로 구분하여 명확한 차별화나 한계를 긋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미국가 중 남북미 시장을 향한 중계무역 기지로서의 성격을 활용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의 진출 사례가 있는 파나마를 제외하고는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다. 또한 한국의 대중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품목조차도 일부 대기업의 전자제품,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면 수요로 하는 품목이나 수요 규모 면에서 전형적인 소량 다품종의 중소기업형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더구나 해외직접투자와 기술협력 분야도 파나마의 중계무역기지로서의 기능을 예외로 하면 대기업형 시장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형이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중미지역은 브라질과 같이 내수시장을 위해 투자진출할 만큼 내수 규모가 큰 시장도 아니다. 단지 지리적으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북미시장 또는 남미시장이나 EU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 전진기지로서 적합한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현지 여건으로 중미지역에 투자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파나마 등에 진출해 있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중미의 제반 여건을 종합 검토할 때, 중미지역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무역과 투자, 기술협력 측면에서 경제협력을 다져나가기에 적합한 중소기업형 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고려하여 서술하였다.

한국 기업의 대중미 투자진출 역사는 1978년을 전후한 시기로 소급해 올라간다. 진출 초기에는 단지 조금 더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에 대해 봉제산업 투자를 시작한 것이 효시였으나, 이후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등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특히 중미지역 중 과테말라는 주변국보다 늦은 1986년에 처음으로 한국 봉제기업이 투자진출을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에 정점을 이루었다. 이는 한국의 중소 섬유·봉제업체들이 1980년대 후반 들어 국내의 임금수준 상승뿐만 아니라 봉제

업에 종사하려는 인력 공급부족에 따른 생산능력과 가격 경쟁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CBI 정책[71]에 의한 중미·카리브 지역에 대한 무역특혜를 바탕으로 미국시장 우회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중미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중미 투자진출이 급격히 증가한것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의 중미 투자진출은 2010년 6월 기준 총 859건에 1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중남미 전체에 대한 투자진출 기록(2,666건, 104억 달러)과 비교하면 금액은 15.3%, 건수는 32.2%로 전형적인 소규모 자본의 중소기업형 투자진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의 해외투자 지출 통계(99,472건, 1,444억 달러)와 비교해도 건수로는 1.1%인 데 비해 투자규모로는 0.9%로 중미에 대한 투자진출은 중소기업 투자진출이 주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미 및 도미니카(공) 8개국 중 건수와 금액기준으로 볼 때 파나마가 가장 규모가 크고 진출 건수도 많아 389건에 12.6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하고 있다.[72]

---

71) CBI 정책은 1983년 레이건 행정부가 중미 카리브 지역 국가에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를 무한정 지속하기에도 재정 부담이 따르는 데다, 이들 국가가 원조에 대한 타성이 붙고 일부 정권의 원조자금 오용 등이 문제가 불거지자 대안으로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강구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1983년 미국 정부는 근거 법으로 카리브지역 경제회생법(CBERA: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CBI 정책은 구조적 빈곤과 정치적 불안의 악순환 속에 있는 중미 카리브 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는 쿠바를 기지로 한 사회주의 물결이 중미·카리브 지역에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여 이들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데 그 근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투자자산을 보호하려는 의중도 담겨 있다. 예컨대, 1980년대와 같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의 좌익 게릴라 집단의 준동이나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좌익 정부와 같은 반미 좌익 정부가 들어서 미국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거나 임의 매각하는 등 행위를 하는 국가에는 이 법의 특혜제공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72) 그러나 파나마의 투자진출은 엄격하게 보면 여타 중미지역과는 투자진출 패턴과 목적이 조금 다르다.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이라기보다는 최소 중견기업 이상 기업들의 대중남미 및 북미를 향한 중계무역, 운송, 금융 산업의 거점 기능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를 통계상으로 분석해 보면, 중미 전체 투자진출 실적 859건, 16.0억 달러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는 1,859천 달러다. 이를 다시 파나마 투자진출 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투자진출 실적 470건, 3.4억 달러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를

표 5-4. 한국의 대중미 투자진출 추이

(단위: 천 달러, 건)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10	누적 잔고
과테말라		9,853 (25)	1,933 (2)	10,452 (16)	14,266 (6)	1,420 (2)	111,081 (202)
엘살바도르		-	1,380 (4)	3,230 (2)	1,353 (5)	-	38,538 (44)
온두라스		10,480 (11)	2,644 (8)	511 (2)	6,775 (8)	-	113,129 (126)
니카라과		-	1,000 (3)	806 (3)	4,500 (2)	-	34,895 (34)
코스타리카		3,748 (3)	3,297 (2)	-	120 (2)	-	33,364 (44)
파나마		7,409 (20)	20,425 (11)	-	153,815 (24)	51,000 (26)	1,255,253 (389)
벨리세		0 (1)	200 (1)	-	-	-	6,437 (7)
도미니카(공)		-	3,000 (1)	251 (1)	-	100 (1)	4,207 (13)
중미 계(C)		31,490 (59)	33,879 (32)	15,250 (24)	180,829 (47)	52,520 (29)	1,596,904 (859)
중남미 계(B)		66,812 (76)	125,690 (83)	1,504,617 (91)	556,847 (140)	332,218 (133)	10,411,036 (2,666)
전 세계(A)		1,068,451 (906)	3,214,792 (2,503)	5,218,942 (3,900)	7,071,172 (8,805)	6,917,975 (3,813)	144,409,535 (99,472)
C/B (%)	금액	47.1	27.0	10.1	32.5	15.8	15.3
	건수	77.6	38.9	26.4	33.6	21.8	32.2
C/A (%)	금액	2.9	1.1	0.3	2.6	0.8	1.1
	건수	6,5	1.1	0.3	0.05	0.8	0.9

주: 2010년은 1~6월 기준 통계이며, ( ) 안은 투자신고 건수임.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산출하면 727천 달러가 나온다. 반면 대파나마 평균 투자진출 규모는 건당 3,227천 달러가 나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중미지역에서 실질적인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거점국가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국가들은 국내에서 경쟁력 한계 기업으로 몰린 봉제업체들이 국내 생산여건이 악화되는 데다 미국의 바이어 측에서 CBI 정책을 활용한 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제품의 생산과 미국시장과 인접하여 제품 운송기간도 절감할 수 있는 중미지역으로 생산거점 이전을 요구해오는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생산기반을 중미지역으로 이전해온 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한국계 투자진출 통계에는 본국에서 투자자본을 반출하지 않고 해외에서 자본을 조달하여 투자한 자생기업들이 수출은행의 공식 투자통계 외에 투자건수에 최소 50% 내외 정도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들 자생기업들은 해외교포자본의 진출도 많지만, 우리 투자진출 기업에서 일하던 관리자나 기술자들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중미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평균 자본규모를 산출해 보면, 역시 중소 봉제기업들이 집중된 과테말라와 도미니카(공)에 진출한 기업들이 가장 투자규모가 작고, 비교적 탄탄한 봉제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였던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등은 비교적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5-5. 중미 진출 투자기업의 건당 평균 투자규모 비교

(단위: 천 달러)

구 분	파나마	니카라과	벨리세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도미니카(공)
규 모	3,227	1,026	920	898	876	758	550	324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재가공.

중미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투자진출 패턴은 과테말라에 진출한 기업들의 패턴과 대동소이하다. 과테말라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1990년대 초 대대

적으로 한국에서 생산기반을 이전해온 업체들이며, 봉제뿐 아니라 편직, 염색, 부자재, 무역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출해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부자재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과테말라 섬유협회(VESTEX)에 따르면, 자국의 섬유의류 산업의 생산 및 고용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60~70%이며, 의류 수출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70%에 달한다.

한편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투자진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중미 총 투자진출 건수 859건 중 59.8%에 달하는 514건이 제조업 투자진출이며, 이들 진출기업 대부분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평균 투자규모가 98만 달러 수준임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해보면 [표 5-6]과 같다.

제조업 부문 투자는 역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및 파나마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북부 중미 3국에 대한 투자는 봉제업과 이와 관련 부자재, 염색, 봉사 등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파나마는 선박용품, 어망 수리업 등 다양한 제조업종이 진출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미에 다수 진출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파나마를 중심으로 한 금융업과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엄격히 구분한다면 중소기업 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업종이나, 일부 중소기업도 이에 투자진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역시 파나마 중심의 도소매업, 즉 중계 무역업에도 다수 업체가 투자진출하고 있다.

표 5-6. 한국의 대중미 업종별 투자진출 추이

(단위: 천 달러, 건)

구 분	총액	제조업	도·소매업	농림어업	금융업.운수업	건설업.부동산임대업	기타
과테말라	111,081 (202)	91,045 (195)	-	-	-	19,984 (6)	51 (1)
엘살바도르	38,538 (44)	38,538 (44)	-	-	-	-	-
온두라스	113,129 (126)	102,049 (114)	588 (2)	9,978 (6)	300 (2)	214 (2)	-
니카라과	34,895 (34)	32,803 (30)	92 (2)	2,000 (2)	-	-	-
코스타리카	33,364 (44)	27,780 (30)	586 (7)	4,498 (3)	-	500 (1)	0 (3)
파나마	1,255,253 (389)	207,100 (88)	113,431 (51)	49,356 (50)	468,123 (99)	409,569 (88)	7,675 (14)
벨리세	6,437 (7)	0 (1)				3,000 (4)	3.437 (2)
도미니카(공)	4,207 (13)	4,176 (12)	-	31 (1)	-	-	-
중미계(B)	1,596,904 (859)	503,491 (514)	114,697 (62)	65,832 (61)	468,123	0 (101)	11,163 (20)
평균 투자규모	1,859	980	1,850	1,080	4,638	4,290	558
중남미 계(A)	10,411,036 (2,666)	2,105,583 (1,262)	698,088 (263)	127,049 (182)	11,066,510 (356)	849,771 (249)	4,435,965 (354)
금액 B/A(%)	15.3	23.9	16.4	51.8	4.2	51.0	2.5
건수 B/A(%)	32.2	40.7	23.6	33.5	28.4	40.6	5.6

주: 2010년 기준 투자 잔고를 분석한 데이터이며, ( ) 안은 투자신고 건수임.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재가공처리.

나. 평가

중미지역은 왜소한 시장규모나 빈약한 부존자원 등의 조건으로 남미지역과 달리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한국에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심대상 지역이 아

니다. 대만이나 중국의 경우도 경제적 관심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히려 지리경제학적 관심도가 크다면 중소기업들이 다수 투자진출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배후 소비재 생산기지로서 중미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는 미국 정도가 관심이 큰 국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나 스페인은 경제적 가치로보다는 정치외교상의 가치를 더 높게 보면서 선진국으로서 또는 과거 식민지 시대 종주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다. 스페인은 남미지역에서와 같은 유통, 통신, 금융 부문에 대한 집요한 진출확대 정책을 중미에서는 한 템포 늦추며 비교적 순수한 의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대만과 중국은 "두 개의 중국이냐, 한 개의 중국이냐"라는 국제 정치·외교적 관심사에 따라 우리나라의 냉전 외교시대와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대만은 외교력과 대외경제협력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의 관심과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다지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스타리카와의 수교 이후 필요하면 중미지역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역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중미 국가들에 장기적인 실익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미국은 배후 생산기지로서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축으로 하는 반미 사회주의 국가 동맹이 니카라과를 매개체로 확산될 우려와 남미산 마약의 운반통로로서의 취약점, 불법이민 문제 등 현안 문제들을 안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적 안정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자원공급처로서 또 대단위 소비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남미와는 달리, 주요국의 중미를 보는 시각과 정책적 목적이 상이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중미지역 대상 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위해 벤치마킹할 만한 적절한 대상국이 없다. 다만 일본의 협력방식 중 경제 외적인 문화전파를 전제로 한 기술협력이나 특정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방식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미에 투자진출을 시작한 지도 30여 년이 넘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기회비용을 부담하며 진출기업들이 성숙해졌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미지역에서 30년 전에 겪어야 했던 애로사항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잘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미 국가의 행정 시스템과 관료주의, 그리고 중미의 독특한 국민성 등이다.

중미는 남미 국가들과 달리 국토면적도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풍부한 지역도 아니다. 또한 인구규모나 국민 소득수준 등 전반적인 경제구조 면에서 내수비중이 큰 수출시장으로서의 활용성도 그다지 크지 못하다. 또한 경제도 지나치게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중미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미를 연결하는 지리·경제적 여건과 EU와의 역사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EU시장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생산거점으로서의 가치가 큰 지역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 등을 활용해서 국내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하고 있는 산업 부문에 대한 해외 이전투자 및 기술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 경험의 제공 등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다져나가는 것이 보다 실용적인 진출 확대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녹색산업 협력

가. 현황

우리나라와 중미지역과의 녹색산업 협력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최근 양 지역간 녹색산업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니카라과 전력망 확충산업, 니카라과 후이갈파

(Juigalpa) 상수도 확충산업, 온두라스 송배전망 확충사업(한국수출입은행 2010) 등이 있으며, 해외환경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니카라과 레온(Leon) 시 및 리바스(Rivas) 시 상수도 시설 사업 타당성 조사(2009년 9월 시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0)가 대표적이다.

중미지역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 지역과의 녹색산업 협력도 아직까지 미미한 편이다. 중남미지역과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 폐기물 자동선별 장치 사업, 페루 주택 건설부와 수처리 프로젝트 관련 양해각서 체결(2009년 10월), 콜롬비아의 쿠쿠타(Cucuta) 시와 폐수처리 플랜트 관련 사업(2009년 10월), 페루 피스코(Pisco) 구리광산 폐(弊) 구리 슬러지 재생설비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2010년 3월) 등을 들 수 있다.

중미 녹색산업 협력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여기서는 SWOT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협력의 강점과 기회를 최대화하고 약점과 위협을 최소화하는 협력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강점

중미지역은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들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지속하며 과거와 다른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안정적 경제성장세로 향후 중미지역에서 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많은 국제 에너지 분석기관들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중미지역에서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5~6%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산업 및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미 각국은 이러한 녹색산업(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우대 및 인센티브(관세, 소득세, 수입세, 소득세) 등 각종 제도적·정책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73]

2) 약점

한국과 중미 간에는 아직까지 녹색산업에 대한 산업별 분류 개념 정립이 불확실한 상태다. 한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 정의와 분류는 이제 막 시작 단계로, 이러한 개념의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상호간의 협력이 용이하다. 이미 중미에 진출한 선진국가들(미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등)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기술적으로도 한국이 추구하는 녹색성장과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녹색산업 원천기술들이 개발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 단지 플랜트 수출에서 멈춘다면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리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 중미지역도 이제 막 녹색산업의 투자에 힘을 쏟고 있어, 아직은 환경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다. 중미지역과의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도 또 다른 애로사항이다. 현지 사업 진출 시 물류 및 운송비용도 중요 고려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지화 전략은 사업 진출 초기부터 고려해야 할 문제다. 해외진출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 지역은 재정적으로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기업들은 다자은행과의 협력이나 합작투자 방식으로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산업 및 운송 체계 등 기초시설 인프라가 미약한 점도 애로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기술과 인력도 현저히 부족하다. 영어권인 벨리즈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미 국가들이 스페인어 사용 국가여서 의사소통의 문제는 물론 정보의 입수도 쉽지 않다.

3) 기회요인

중미지역은 풍부한 생물자원 및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는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의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R&D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클 것으로

73) 하상섭 외(2010),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참고.

전망된다. 이미 중미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도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중미지역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의 섬유·봉제업체들에 새로운 환경 및 에너지 분야로 진출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중미지역 환경기초시설(수질, 폐기물, 대기)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도 증대할 것이다. 특히 ODA, IDB 및 CABEI를 활용한 활발한 투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4) 위협요인

중미지역과의 협력 추진 시 가장 큰 위협요인은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다는 점이다. 활화산(지열), 지진, 태풍, 홍수, 산사태, 가뭄 등에 대한 피해가 빈번하여 진출에 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이미 환경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에 진출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도 후발 주자인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협요인이다. 기업의 운영 측면에서 위협요소는 중미지역이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하며(2009년 온두라스 쿠데타 등), 범죄율이 높아 치안이 크게 불안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 우리 기업들의 현지 네트워크 부재, 기업운영의 효율성 낙후, 중미지역에서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도 위협요인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나. 평가

우리나라는 중미지역의 현안 분야인 수자원 관리 분야와 쓰레기 매립지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녹색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산업에서도 커다란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또한 IDB 회원국(2005년 3월 가입) 지위, 미래 SICA 역외 옵서버(2010년 말 결정) 및 CABEI 회원국(2010년 가입 협상 중) 지위를 잘 활용할 경우 중미지역 환경 및 에너지 산업에 대한 공동 참여와 투자 기회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5-7. 한국 녹색산업의 대중미 협력여건 SWOT 분석

- 2000년대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연 6%) - 향후 지역 차원의 에너지 수요 증가(5~6%) - 에너지 분야 외국기업의 투자 증가 - 녹색산업,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업 투자 및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녹색산업에 대한 개념 정립 불확실(생태환경과 생활환경) - 해외진출 국가(미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등)와의 경쟁 - 녹색산업 원천기술 미비(일괄지급 방식) - 녹색산업 시장규모가 작음 -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 - 재정기반 취약 - 산업 및 시설 기반 인프라 미약 - 기술과 인력 부재 - 의사소통의 어려움 - 정보 부족	
	S(강점)	W(약점)	
	O(기회)	T(위협)	
- 풍부한 생물자원 및 자연자원 공동개발 협력 잠재성 높음 -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R&D 분야 차원의 연구기회 제공 -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산업 진출 기회 제공(섬유가공업에서 에너지 산업 분야로) - 정부의 환경기초시설(수질, 폐기물, 대기)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 필요성 증대(ODA, IDB 및 CABEI 연결)		- 자연재해 발생률 높음 - 해외 기업들의 환경시장 선점 - 정경유착 등 정치사회적 불안 - 해외 사업소 네트워크 부족 - 기업 운영의 효율성 낙후 - 한국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	

4. IT산업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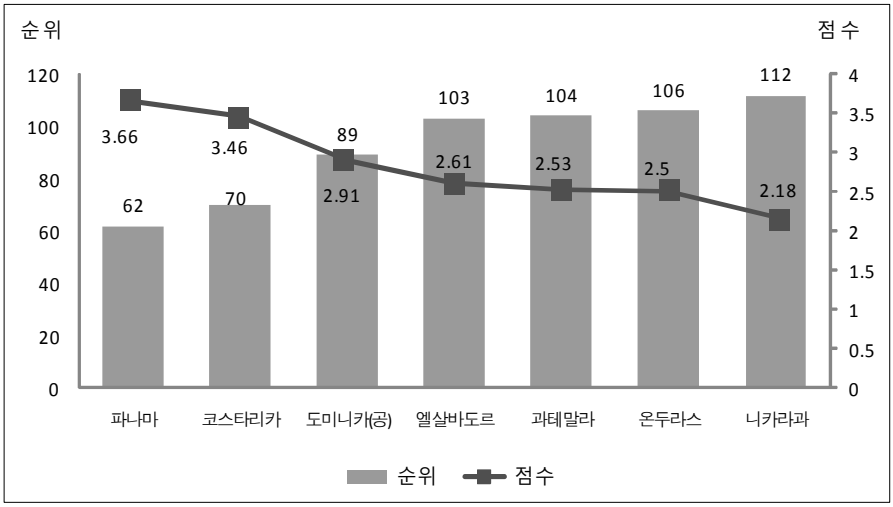
가. 현황

중미 IT산업을 평가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점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다. 즉 중미지역에서는 산업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때는 물론 각종 통계처리에 있어서도

정보기술(IT)과 통신부문(communications)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IT를 ICT와 동일하게 간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IT라 함은 ICT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중미 IT산업 협력 여건은 경제 및 사회적 특성으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제2장에 나타나듯이 소규모 경제, 저소득, 농업중심의 경제구조, 높은 빈곤율, 열악한 교육환경, 투명성 부족 등 각종 경제 및 사회적 여건들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중미지역 디지털 지표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다음 그림들에서 보듯이 세계 순위나 평가점수 등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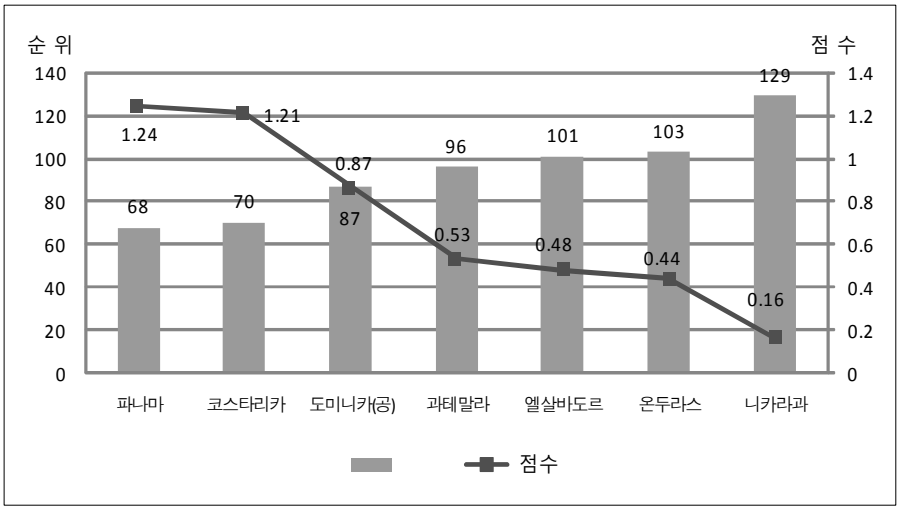
그림 5-3. 중미지역 정보화 현황: ICT 발전지수(IDI)



자료: ITU 참고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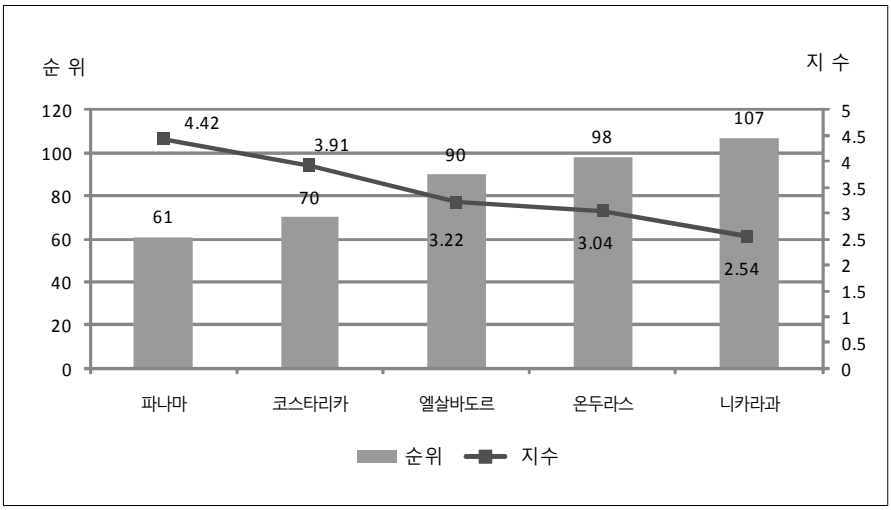
74) 중미지역 디지털 경제지표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CT 발전지수(IDI), 이용지수, 접근성, 활용능력 △ UN Global E-Government Survey 2010의 전자정부발전지수, 전자정부 준비지수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 국제경쟁력 지수, 인프라환경 지수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그림 5-4. 중미지역 정보화 현황: ICT 이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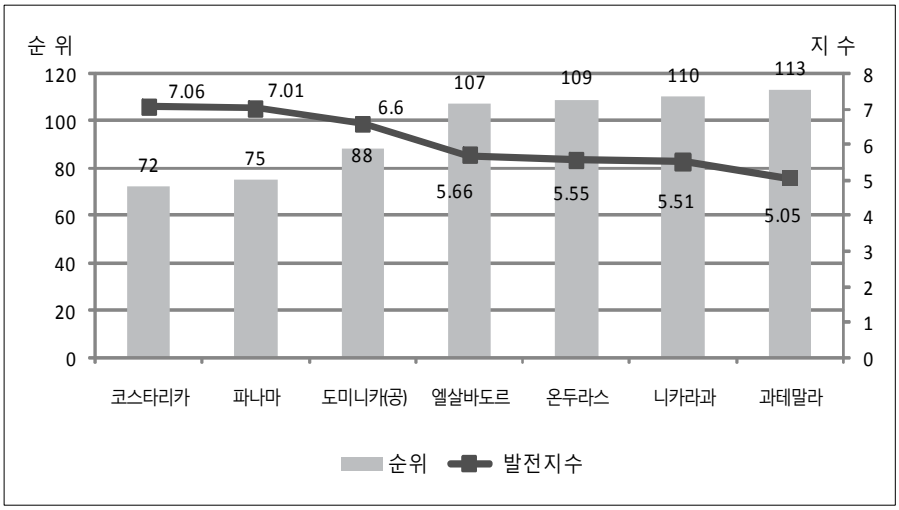
자료: ITU 참고 재작성.

그림 5-5. 중미지역 정보화 현황: ICT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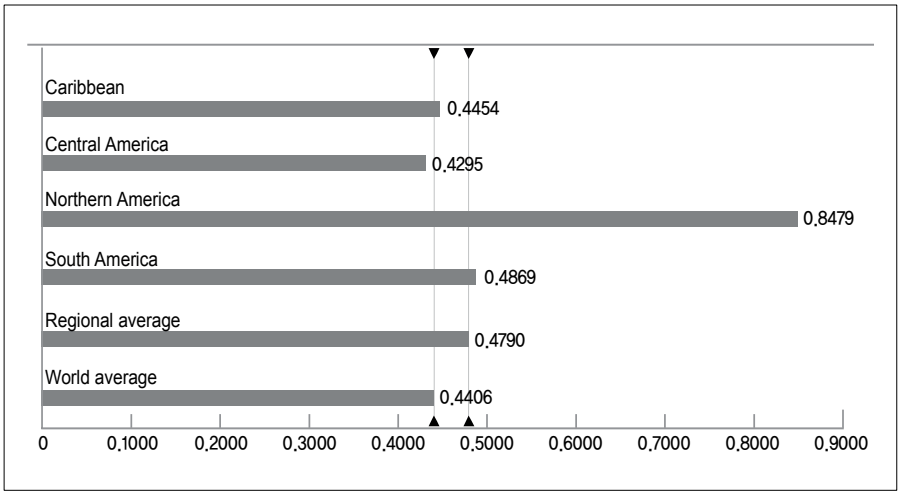
자료: ITU 참고 재작성.

그림 5-6. 중미지역 정보화 현황: ICT 활용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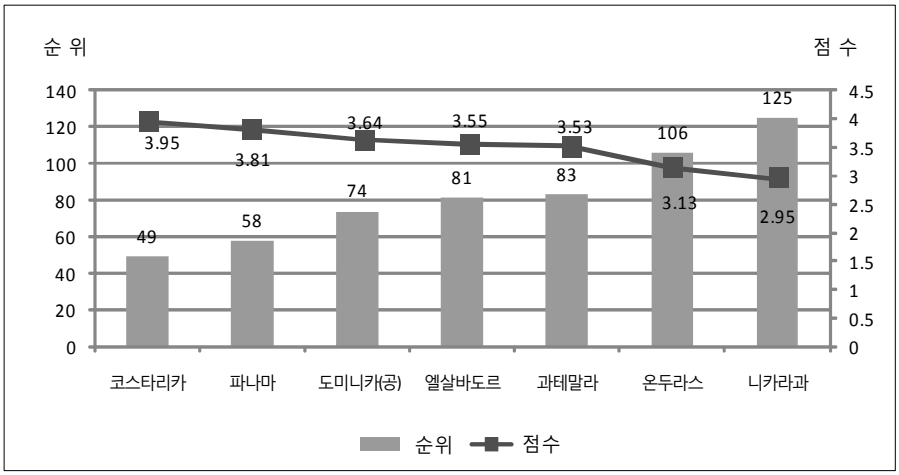
자료: ITU 참고 재작성.

그림 5-7. 중미 및 세계의 전자정부 발전지수 비교



자료: The UN Global E-Government Survey(2010).

그림 5-8. 중미 네트워크 준비지수(2009~10년)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9~2010(2010. 10).

중미지역은 IT산업 성장의 기본적인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선통신, 이동통신, PC 보급, 인터넷 서비스 보급 및 활용, 소프트웨어 등 부문별 수준에서도 상대적으로 낮다.[75] PC 보급률(보유 가구)은 지역 평균 10%에 불과하고, 국가별 유선통신 보급률(인구 100명당)은 코스타리카(31.8), 엘살바도르(17.6), 파나마(15.4)를 제외하고는 10% 미만이다. 이동통신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빠르게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개인당 다수의 선불카드(SIM) 활용과 음성통화 위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76] 인터넷 보급률도 여전히 저조한데, 코스타리카가 가장 높은 35%(사용자 160만 명)를 기록하고, 파나마 28%, 도미니카(공) 23%, 과테말라 16%, 엘살바도르 14%, 온두라스 10%, 니카라과 4%로 뒤를 따르고 있다. 특히 광

75) "Panamá encabezó penetración celular en 2009." http://www.compuchannel.net (accessed July 6, 2010).

76) 이동통신 보급률은 파나마를 선두로 과테말라 124%, 엘살바도르 123%, 온두라스 103%, 도미니카(공) 86%, 니카라과 56%, 코스타리카 43%를 각각 기록하였다. 성장 측면에서 볼 때 온두라스의 사용자가 2004년에 70만 7,200명에서 2009년 12월 현재 770만 명으로 급증하여 가장 두드러졌다.

대역 인터넷 이용자율은 2009년 코스타리카가 6.01%, 파나마가 5.82%를 각각 기록하여 세계 평균인 7%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미 지역에서는 최고 수준에 있으며, 도미니카(공)는 4.0%, 엘살바도르는 2.0%(2008년)이고, 니카라과는 0.8%(2008년)로 저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 여건과 IT산업의 여건은 역설적으로 중미지역이 가능한 한 단기간에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 즉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최적 수단으로서 교육, 보건위생, 환경, 관광, 농업, 문화 및 중소기업 등 중미지역이 가진 개발 어젠다에 IT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중미 각국은 세계적 추세로 볼 때 IT를 활용하는 데 있어 아직 후발주자이지만,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또한 중미지역은 IT산업을 스스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독자적인 IT 개발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여력도 부족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화 의지[77]에 기초한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IT를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IT 개발 경험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스페인을 비롯한 EU 및 미국 등 선진 기업들간의 시장선점 경쟁도 점점 격화되고 있다.

77) 중미 국가들은 현재 경제 및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는바, IT 도입으로 고용창출, 경제성장 도모, 생산성 제고 등 공통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중심 과제로 민·관 협업체제 구축, 시민사회 및 정부의 비전이 담겨 있는 통합정책 마련, 정보화 교육 및 기술양성학교 설립, IT의 경제적 영향 측정 및 정보화 마인드 제고, 정부 주도 정책 집행 및 spillover 효과 파급, IT 접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중앙정부와 지방 및 소도시의 정보화 전략 연계 운용 등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국별 프로젝트 이외에 중미지역은 통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고속도로망(AMI)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표 5-8. 중미지역 국별 IT 전략 및 정책

국가	전략 및 정책
과테말라	- CONCYT: ‘Plan Nacional de Ciencia, Tecnología e Innovación 2008-2012’ 인터넷 확충으로 정보서비스 개선, 디지털 불평등 개선 - 농촌정보화: ‘Centro Comunitario Digital’ 농촌의 정보접근성 확보 - IT 인프라 확충: 디지털 매체의 활용도, 연결성, 접근성 개선 - 콘텐츠 산업 육성: IT 인프라 확충에 따른 콘텐츠 창출 - 연결성(connectivity) 개선: 소외지역에 대한 정보 연결성 확충 - INAP 및 부통령실: ‘e-Government’ e-Planning, e-Education, e-Development, e-Service 등 CONCYT와 더불어 IT 육성정책 수립 - 공공서비스의 정보화
도미니카(공)	- OPTIC+CNSIC: e-Dominicana 정부 인트라넷/무역포털/911사업/기업설립지원 단일화 창구/전자민원 등 - CTC+CCI: 농촌정보화/정보화 인력 양성 - 관세청: 전자통관 및 전자결제 시스템 운용 - 정부: IT 산업단지로 사이버파크 조성
코스타리카	- 대통령 직속 전자정부위원회: ‘Gobierno Digital’ 행정/정부조달/조세/전자민원/교육/보건위생/선거 등 - CECI(Centros Comunitarios Inteligentes) 다목적 ‘인터넷카페’/교육 콘텐츠 개발
파나마	- SENACYT+CAPATEC: 국가 IT산업 진흥 전략 - SENACYT: e-Panama - City of Knowledge 건설: Business Incubator, Industrial Techno-Park, Panama Pacífico 첨단산업단지 - 해양관련 기관 통합전략: Estrategia Nacional Marítimo 파나마 운하 확장/해양자원 개발/해양법 - 유럽형 디지털 TV 방송 수신 튜너 DVB-T 표준 채택

한편 중미는 지역통합체 차원에서도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경제·사회·문화 교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메소아메리카 프로젝트(구 PPP: Plan Puebla Panama)의 일부분으로 중미지역 IT 환경의 기본이 되는 메소아메리카 정보고속도로(AMI: Autopista Mesoamericana de la Información)가 대표적이다. AMI는 광통신망 연결사업, 농촌지역 정보통신 연결망 구축 및 NAP(Network

Access Point)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핵심은 광통신망 연결사업으로서 중미전력통합체제(SIEPAC)에 따라 건설되는 송전망을 활용하여 역내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미지역 IT 환경하에서 한국의 대중미 IT 부문 진출 혹은 협력은 낮은 시장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IT 부문 투자 진출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대부분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왔다. 즉 중미 IT 관련 인사들을 초청·훈련시켜 정보화 마인드를 주입하고 이들을 통한 사업 개발과 추진을 시도하는 한편 IT 청년봉사대 파견 등 주로 인력 초청 및 청년봉사단 파견이

표 5-9. 한국의 대중미 주요 IT 협력 사례

국가	협력사업 사례
과테말라	- 한-과테말라 IT 훈련 협력 MOU 체결(2006년 2월) - 양국 교육협력 양해각서 체결(2007년 1월) - Educative Informatics Highway Project: 전국에 교육센터 설립-사업 부진 - e-Security: 출입국관리, 경찰정보화, 정보교류 DB 구축-현재 사업 지연 - KOICA(2006~08), 250만 달러: 한·과테말라 ICT 훈련센터 건립 - KOICA(1991~2009), 2,001만 달러: 13개 프로젝트, 초청연수, 장비, World Friends Korea 사업, 재난구조, NGO 지원 - KOICA: 정부민원 포털서비스(사업비 180만 달러) - 경북도청: IT 분야 관계자 방문 및 교사 초청 - KOICA: 관세정보화 350만 달러 원조승인 예정-CUPIA 주관기업
도미니카(공)	- 우리나라 관세청의 전자통관 UNI-PASS(오토에버시스템즈-인터데브) 추진 중: EDCF 자금 - NEIS(교육행정) 시스템 이식 추진 - NIPA: e-Government 마스터플랜에 참여 - EDCF 자금: 관세정보화 2차 사업, e-Document,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및 출입국 통제시스템 추진
코스타리카	- '나라장터' 시스템 이식 - 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삼성SDS) 구축 - 여권정보화: 전자여권. 기술검토 후 결정 단계

자료: 저자 정리.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미지역의 정보화 정책에 동참하는 협력 사업들이 구체화되었다. IT 분야의 협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그동안 중남미지역 IT 서비스 진출을 위해 도미니카(공), 코스타리카 등에서 국가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사전타당성 조사, 수주지원단 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사전타당성 조사 지원, 수주지원 활동을 통해 2008년 도미니카(공) 관세정보화(2,000만 달러), 2009년 코스타리카 전자조달시스템(830만 달러) 수주에 기여했다.

나. 평가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중미지역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고, 세부 항목별, 국가별, 지방별, 업체 규모별, 소득별로 디지털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대중미 IT산업 협력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IT산업 협력을 평가해 보면, 첫째 단기적인 경제적 실익보다는 역내진출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testbed) 혹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친화력을 높여가는 과정이었다. 한국의 IT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국 기술 및 상품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대중미 접근법은 매우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미지역이 IT산업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보일 때까지 중기적으로도 동일한 전략을 유지하는 한편 실리적으로 우선 접근해야 할 목표시장을 역내에서 선정하여 진출을 강화하고 이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타리카, 파나마 및 도미니카(공)를 우선 목표시장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78)]

표 5-10. 대중미 IT산업 협력여건 평가 순위

구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
면적			3	2	1		
인구			1	3			2
국가청렴도	1	2				2	
외채 규모			1	2			3
GDP 규모	3		2				1
1인당 소득	2					1	3
신용등급	3	2	3			1	
ICT 발전지수	2					1	3
ICT 이용지수	2					1	3
ICT 접근성	2	3				1	
ICT 활용능력	1					2	3
전자정부 준비지수	1	2				3	
네트워크 준비지수	1					2	3
ICT 시장환경		2	3			1	
ICT 정책/규제		3				1	2
ICT 인프라 환경	2					1	3
ICT 민간부문 준비지수	1		3			2	
ICT 비즈니스 준비지수	1	3	2				
ICT 정부부문 준비지수	2					3	1
ICT 민간부문 사용지수	3					1	2
ICT 비즈니스 사용지수	1		2			3	
ICT 정부부문 사용지수			3			2	1
GCI 전체	2	3				1	

78) 본 연구의 참고자료가 된 주요 지수들(41개 항목)을 활용하여 필자가 항목별로 순위를 정할 경우 코스타리카가 16개 부문에서, 파나마 13개, 도미니카(공) 4개, 엘살바도르 3개, 과테말라 2개,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가 각각 1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를 차지한 항목을 국별로 보면 코스타리카가 9개, 엘살바도르 6개, 과테말라 8개, 온두라스 2개, 파나마 12개, 도미니카(공) 5개로 나타났다. 한편 3위를 기록한 항목을 보면 코스타리카가 4개, 엘살바도르 8개, 과테말라 9개, 온두라스 2개, 파나마 5개, 도미니카(공) 13개로 나타났다.

표 5-10. 계속

구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
GCI 제도	1	3				2	
GCI 인프라		2	3			1	
GCI 거시경제 환경		3	2			1	
GCI 위생/초등교육	1	3				2	
GCI 고등교육/훈련	1					2	3
GCI 상품시장	1	3				2	
GCI 노동시장	1	2					3
GCI 금융시장			2	3		1	
GCI 기술준비도	2					1	3
GCI 시장규모	3		2				1
GCI 비즈니스 성숙도	1		3			2	
GCI 혁신	1		3			2	
인프라 민간투자 매력도		1	2				3
인프라 일반투자 환경 요소		1	3				2
인프라 투자특별 요소		1	2				3
인터넷 이용자 비율	1					3	2
HDI	1					2	3
ICT 지출/GDP	2			1		3	

둘째, 최근 한국의 발달된 IT 기술을 개발협력 관점에서 전수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 정보화 시스템은 국가의 세수를 증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정부패를 감소시키며, 각종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성공적인 개발협력 사례가 되고 있다.

셋째, 현재까지 대중미 IT산업 협력의 사례가 수적으로나 금액 면에서 절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는 한국 IT산업의 중미시장 진출이 다른 경쟁국 혹은 기업에 비해 늦게 출발한 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시장개척의 적극성이 부족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특히 중미의 IT산업 여건이 열악하여 단기적인 시장으로서 매력도가 떨어진 점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열악한 환경을 기회시장으로 반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결과일 것이다. 이에 최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미 IT시장 진출은 기회시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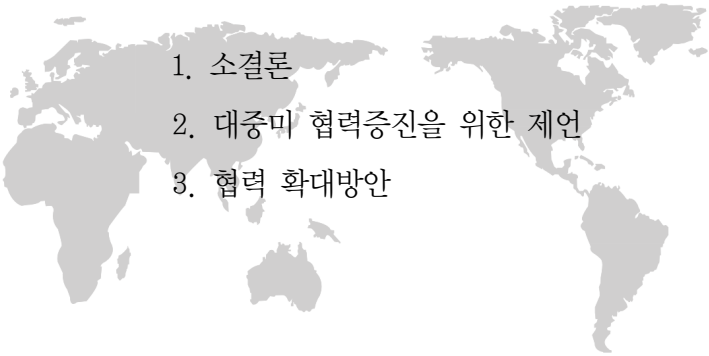
넷째, 협력사업의 분야도 한정적이다. 중미와 같은 저개발국의 경우 교육, 보건위생, 부패, 빈곤, 치안, 농촌, 교통, 환경, 산업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지방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IT를 접목할 여지가 넓은데, 최근까지 협력사례를 보면 전자정부(세관정보화, IT센터 및 국가전산센터 구축, 전자조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원인은 진출 경험이 일천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지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미 각국 혹은 지역적 차원의 정책에서 비롯되는 IT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한국의 대중미 IT산업 협력은 산업적인 관점에서보다는 제품시장의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현지 IT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보다는 프로젝트성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한국의 IT제품, 특히 시스템을 수출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IT산업 협력보다는 IT시장 개척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미지역의 인적·물적 토대가 IT산업의 활성화와 한국 기업의 IT산업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발굴하기보다는 정부 혹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의지, 기술 컨설팅을 담당하는 기업, 그리고 자금조성 관련단체 간의 협력체제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업은 관주도 사업이었다. 이는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 대부분이 EDCF 지원대상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부족한 데 따른 결과였다. 또한 협력사례 대부분이 민간부

문 IT 개발보다는 중미지역 국가들의 전자정부 등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으로서 대외협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6장
21세기 한·중미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1. 소결론
2. 대중미 협력증진을 위한 제언
3. 협력 확대방안

1. 소결론

본 연구는 서론에서 최종 연구 목적인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화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 및 협력 가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중미지역 및 각국의 경제구조 및 특징, 경제발전전략, 경제통합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중미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경제권이면서 저개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간 격차도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대외의존성과 산업구조의 미분화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기에는 성장의 동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미지역 공동개발정책과 각국별 경제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부족과 사회인프라 투자 수요가 커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중미지역의 특징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지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발전 잠재력을 지닌 중미는 향후 소득이 향상될수록 소비시장으로서의 규모도 확대되고, 우리의 투자진출 교두보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미지역은 1990년대 이후 최빈개도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또한 현 수준에서 다소의 한계는 있지만,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해외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내·외 경제통합은 중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앞서 중미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대중미 협력전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미국, EU,

중국 및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의 대중미 진출 현황과 협력전략은 상호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실익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면서도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중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을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대중미 협력전략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국가의 능력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 우선 논리, 중국과 대만의 외교적 논리, EU의 개발협력 논리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실익과 외교 논리를 앞세우는 일본의 협력전략이 가장 취사선택 가능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 논리는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가 취해온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단지 전략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대중미 협력방안이 부재했을 뿐이다.

셋째, 대중미 통상협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제4장에서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 투자, 제도적 협력을 진단해보고, 특히 한국의 대중미 수출 및 투자진출의 실질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협력 현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협력의 애로사항을 도출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중 측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양측은 각각 세계시장에서 지닌 경쟁력을 한·중미간 교역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섬유와 운송장비 등은 중미로의 수출이 활발하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경쟁력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저조한 수준이다. 중미국가들은 농산물, 가공식품, 원자재, 동물성 유지 및 왁스, 섬유, 고무·제지·목재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들 중 한국에 활발하게 수출되는 상품은 커피, 반도체, 일부 원자재 등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양 지역은 높은 교역증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중미 수출확대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실시한 시장진출 애로사항 조사에서 마케팅

능력 부족,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 환율변동, 높은 관세 등이 지적되었다. 비관세 장벽으로는 △수입을 위한 복잡한 사전허가 및 승인 필요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과 부담이 과도 △외환거래 및 송금규제로 인한 어려움 △전시품 및 샘플 통관의 특혜가 없으면서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및 허가 절차 필요 등 다양하게 나타나 개선되어야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출 애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이 정부 및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은 △중미에 한국 경제·문화 등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현지국과의 신속한 FTA 체결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중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교육기관 또는 과정 마련 확대 △홈페이지, 안내서, 설명회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제공 △상무관, 무역관 등 정부관련기관 설치 확대를 통한 현지수출 애로 해소 지원, 현지 비자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간 협상 필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컨설팅 서비스 △중미 국가와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미 투자는 국별·분야별로 쏠림 현상이 심하였다. 국별로는 파나마에, 투자업종의 경우 파나마에서는 서비스 업종에, 나머지 국가에서는 섬유봉제업에 국한되어 있었다. 중미지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중미 외국인투자가 전통적인 저임금 기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관광, IT, 환경, 인프라 개발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우리의 대중미 투자도 업종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었다. 한편 중미 투자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시장성이 크고 인접국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낙후, 현지금융 활용 한계 등이었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제도적 통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확대 필요성이 있었다. 투자보장 협정과 한·SICA 대화협의체를 제외하고는 평가할 만한 제도가 없

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유일하게 파나마와만 체결한 상태다. 실질적인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양국간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및 정례회의의 활성화 등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미지역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별 협력 여건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계량적 모형을 통하여 협력 분야를 선정하기보다는 중미의 일반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중소기업 협력, 녹색산업 협력, IT산업 협력을 선정하여 한·중미간 분야별 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미 분야별 협력은 한계가 분명하게 들어났지만,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물론 중미지역의 관점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진출 가능성도 높았다. 녹색산업 및 IT산업은 최근 부각되는 협력 분야로서 정부 및 기업의 진출 노력이 필요하였고, 개발 및 중소기업 협력은 확대 및 성숙 단계로 진입해야 할 분야로 평가되었다.

2. 대중미 협력증진을 위한 제언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중미를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은 소규모 저개발국, 빈곤국, 정치사회적 불안정, 공산품 수출시장, 농산물 및 자원 수입시장,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형 투자 우회수출 전진기지, 일방적인 ODA 수원국, 외교목적의 일회성 협력국 등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실익을 강조한 교역, 투자, ODA 정책은 강조된 반면, 중미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 양측은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통상만을 현상 유지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증진의 한계는 협력전략 부재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안 미비, 협력제도 부족, 불균형적인 통상구조 향유, 이벤트성 단발적인 외교정책, 중미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협력 등에서도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첫째, 중미를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수출시장 혹은 투자진출보다 개발협력을 통해 미래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협력의 기본은 중미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는 상생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중미의 가치와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전략과 더불어 지역 블록 차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협력 확대의 기본으로 각종 제도적 협력 장치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미에 적합한, 중미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리의 진출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인된 산업분야별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3. 협력 확대방안

가. 한·중미 경제협력전략 수립

앞서 선진국의 대중미 협력 사례를 평가할 때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도쿄선언문을 통해 대중미 포괄적 경제협력전략과 주요 협력 분야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미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 차원의 대중미 경제협력전략이나 이니셔티브는

부재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중미 경제협력정책은 대통령의 중미 순방에 맞추어 개별 국가를 겨냥한 이벤트성 위주의 단기적이며 일회성 성격의 사업에 그친 경우가 태반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중미 경제협력전략의 비전을 담은 포괄적이고 전략적이며 중장기적인 성격의 가칭 '한·중미 경제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전략은 △무역, 투자 등 통상협력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퇴치 등 개발협력 △환경문제 등 지역 차원 및 글로벌 이슈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중미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발협력을 중시해야 한다. 아직 경제규모가 작고 소득수준이 낮은 중미와의 경제협력에서는 단기적인 교역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미 개발협력을 통해 장기적 경제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한편 이 지역에서 우리의 국가 브랜드와 국격을 제고하는 전략이어야 한다.

한편 대중미 전략에서는 중미통합체제(SICA)를 중심으로 지역통합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의 협력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중미지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고, 언어·역사·문화적으로도 높은 동질성을 갖고 있어 지역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그리고 최근 국제적으로도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해 다자 및 지역 차원의 개발협력이 강조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 통상협력 확대방안: 제도화

중미를 상품시장, 투자진출 시장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동시에 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경쟁국들이 중미지역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은 선결과제이다. 어떤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며, 어떤 업종에, 어떤 형태로 투자를 확대할지의 구체적인 제안은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므로 정책적 함의를 지닌 통상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제도화를 제안한다. 그러나 제도화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상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미지역 혹은 국가들이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은 특정 제도가 중미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측간 관계 증진에 필수적이며, 특정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한국을 매개로 중미지역이 세계경제에서 획득할 수 있는 실익이 크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중미지역이 한국에 대해 지니고 있는 제조품 수출국, 우회수출시장을 활용한 투자국, 상생보다 실익을 추구하는 협력국 등 고정관념들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이미지 제고는 각종 협력관계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1) FTA 추진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파나마, 코스타리카와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민간부문에서 타당성을 연구하는 수준에서 FTA 체결을 위한 행보가 개시되었지만, 타결될 때까지 극복해야 할 난관은 많다. 국내적으로는 소규모 국가와의 FTA 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하고, 중미 국가와는 한국과의 FTA가 국가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설득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의 FTA를 중미지역의 복잡한 경제통합망에 어떻게 연결시킬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중미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한·중미 국가간 FTA 협상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9] 이와 같은 중미 국가들과의

79)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4장 제2절 수출실태조사 평가와 과제 참고.

FTA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관세철폐 효과, 현지국과 FTA를 통해 통관절차 간소화와 정부조달시장 참여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상국인 파나마와 코스타리카도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방적 이익추구가 아닌 중미 국가들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는 개발협력형 FTA 모델을 개발할 경우 중미 국가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편 파나마, 코스타리카의 FTA를 조기에 타결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중미지역과의 FTA에는 관심이 부족하지만, 중미지역의 특성상 FTA가 가시화될 경우 중미경제통합체 회원국들의 추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멕시코, MERCOSUR와의 FTA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미국을 위시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미와의 FTA를 활용하여 한국은 미주지역 전체와 자유무역망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 CABEI 가입

우리나라는 1996년 제1차 한·SICA 정상회의에서 CABEI 가입을 약속했으며, 2005년 제2차 및 2010년 제3차 정상회의에서도 재확인한 바 있다. CABEI의 자본금 증액 및 가입 프리미엄 요구는 우리나라의 가입을 지연시킨 걸림돌로 작용했지만,[80] 중미지역에서 CABEI가 지닌 위상을 고려할 때 가입을 지연시킬 정도의 장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CABEI 가입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한·중미 협력관계의 최대 현안인 CABEI 가입 문제 해결은 대중미 경

80) CABEI의 자본금 증액으로 한국의 출자금 규모는 5,760만 달러(1996년)에서 3억 625만 달러(2009년 4월)로 크게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출자금의 25%인 납입자본금도 7,656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CABEI는 납입자본금의 약 19.5%인 1,492만 달러를 가입, 프리미엄으로 추가 요구 중이다. 2010년 12월 1차 협상을 개최했는데, 2011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가입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제협력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 둘째, IDB만큼 경제적 실익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회원국으로서 CABEI가 발주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회원국 조달시장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81] 셋째, CABEI의 설립 취지로 볼 때 CABEI와 연계한 지역 차원의 개발원조 공여를 통해 대중미 공적원조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넷째, CABEI를 매개로 한·중미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대중미 투자진출의 안정성과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과 함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이 절실하다. 2010년 현재 파나마에 국한된 협정을 중미 전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세금을 회피하고자 이익금 등을 역외 해외법인에 예치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 개발협력 확대방안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크게 개발협력 채널 다양화, 개발협력 분야의 다각화,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먼저, 개발협력 채널 다양화 방안으로는 민관협력 활성화, 남남협력 또는 삼각협력 시행 및 다자간 협력 확대를, 개발협력 분야 다각화의 차원에서는 농촌개발 중심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운영과, 원주민 공동체 문화 보존 및 교육지원 확대방안을,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별 지원전략 수립 제도화, 통합형 인력관리 네트워크 구축, 시민홍보와 참역 확대 등을 제안한다.

---

81) CABEI의 지역개발 프로젝트 금액은 2004~08년간(집행 기준) 약 72억 달러에 달했다.

표 6-1. 대중미 개발협력 확대 및 효율성 증대 방안

개발협력 채널 다양화	민관협력(PPP) 활성화
	남남협력/삼각협력 시행
	다자간 협력 확대
개발협력 분야의 다각화	농촌개발 중심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운영
	원주민 공동체 문화 보존 및 교육 지원
제도적 개선	국별 지원전략 수립 제도화
	통합형 인력관리 네트워크 구축
	시민홍보와 참여 확대

첫째,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활성화 방안으로서, 중미에 진출한 한국기업, NGO 그리고 현지기업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기업의 진출이 많은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CRS)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유상원조를 활용하여 산업단지간 도로연결 등의 인프라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실시했던 농촌지역 정보화 마을 구축사업도 한국의 장점을 살린 PPP 사업이 될 수 있다. 교육과 빈곤퇴치 분야에서 한국기업, 정부, NGO가 협력하는 방안도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직업학교를 설립하고, 현지진출 NGO가 운영을 담당하며, 정부가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파견을 담당한다. 그리고 한국기업이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기업, 시민단체, 정부가 파트너십으로 구성한 현지기관이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한국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를 주축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발전경험과 자원을 수원국으로의 원조에 활용하는 남남협력 또는 삼각협력을 시행할 수 있다. 한국과 중미 수원국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한국의 기술보다는 유사한 환경을 갖춘 중미 주요국의 기술이 수원국에 쉽게 적용되어 원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는 그동안 중소고득군으로 분류되어 한국의 원조에서 소외되었던 코스타리카 및 파나마와 한국 간의 협력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점지원 대상국인 과테말라의 원조성과를 주변국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도 있다. 사업부문으로는 한국의 원조경험이 많고 강점을 지닌 ICT, 교육, 보건을 제안한다.

셋째,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원조를 확대하여 한국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원조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다. 한국의 IDB 신탁기금 출원은 지원의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우수한 기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미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먼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카리브 개발은행에 대한 접근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촌지역 빈곤퇴치 프로그램 운영이다. 중미국은 최빈국과 저소득국에는 속하지 않지만, 빈부격차로 인해 인구의 약 22%가 빈곤상태이며, 특히 농촌지역에 빈곤이 집중화된 경향이 있다. 중미 농업은 환금작물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농장농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안정적인 주식확보에 문제를 겪고 있고, 특히 농한기에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 증산을 위한 지원, 새로운 영농방식 전수를 통한 생산성 확대, 농가공 공장 설립을 통한 계절별 안정적인 소득원 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섯째, 중미지역의 높은 원주민 인구를 고려하여 공동체 중심의 문화보호 운동 지원, 원주민 문화 디지털화, 장기적 빈곤퇴피 프로그램도 주요 협력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별 지원전략 수립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먼저 유·무상 구분 없이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한국의 원조는 정부부처, 국책기관, 수출입은행,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권화되어 있어 통합된 국별 지원전략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원국의 원조수요

와 한국의 원조분야를 일치시켜야 한다. 중미지역은 인프라 통합 프로젝트인 푸에블라 파나마 플란(PPP: Plan Puela Panama)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는 중미 전체에서 높다고 하겠다. 과테말라의 경우는 바이오에너지 개발, 온두라스는 지속가능한 개발, 빈곤감소, 보건, 지역개발, 거버넌스에, 엘살바도르는 사회보장제도, 치안, 기후변화 등에 개발수요가 높아 국별로 이들 수요를 반영한 원조가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으로서, 중점국가를 거점으로 원조를 집중하여 주변국으로의 연관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온두라스를 중점지원 국가에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 또한 국별 지원전략 수립 방안으로서 정책수립 담당자, 수원국 정부나 시민단체, 한국의 지역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인력관리 방안으로서 중미지역에 대한 지역전문가 양성, 해외봉사단에 대한 현지교육 확대, 국내 초청 중미 전문가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국내외 중미 개발협력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시행한다.

여덟째, NGO 등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원조사업에 대한 경제적·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정책대안 마련이라는 측면과 공적원조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해주고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갖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라. 주요 산업협력 확대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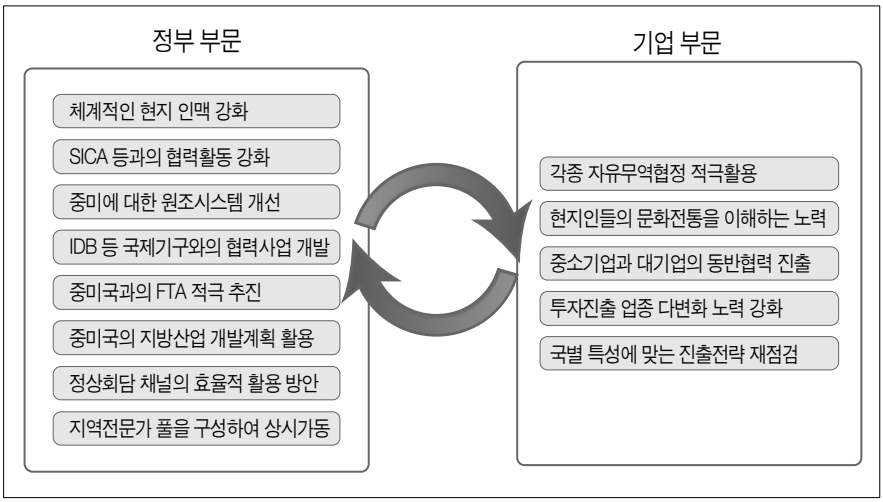
1) 중소기업 협력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세련된 모습으로 중미지역에 진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략과 유념해야 할 과제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의 중미지역을 대상으로 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부문만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고, 중미지역 관주도형의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타입의 정치·

경제·사회적 독특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민·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를 전제로 강화전략을 수립해야 할 전제로 한다.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미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정부 부문과 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림 6-1. 한·중미 중소기업 협력 확대방안



우선 정부 부문으로, 중미지역은 중남미지역 내에서도 정치·경제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아 우리나라의 대중미 통상외교도 그다지 역점을 부여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냉전시대 유엔에서 남·북한간 표 대결을 위한 한 표의 가치가 더 컸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중미는 지정학적으로 남북미를 연결하는 교통로의 위치인 데다 남북미 시장에 대한 우회생산 및 수출거점으로서 중요한 지역이고, 또 중소기업들이 진출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조기 정착하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당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보다 최적으로 활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체계적으로 현지 인맥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미가 전형적인 국가주도형 후진국임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차원의 중미 각국 정부와의 대관 협력채널과 인맥구축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후진국일수록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한 감성적 해결방법이 더 편리한 경우가 많다. 특히, 중미에서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현지의 인맥구축은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단계별로 구축해 나가야 미래형 인적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공관을 중심으로 현지진출 기업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방한 초청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친한파 또는 지한파 인맥을 꾸준히 확대,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중미경합체제(SICA) 등 지역기구와의 협력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미국가들은 현실적으로 자력으로 자국의 경제를 꾸려나가기도 힘겨운 상황으로, 개별국으로는 미국이나 EU 등 외부세력과의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1960년대부터 부침은 있었지만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시켜온 체제가 SICA다. 물론 파나마의 경우 최근 중미통합이 허상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통합체제에서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중미 사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고 접근해 들어가는 데는 SICA의 역할이 한 축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큰 재정적 부담이나 노력 없이도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미의 통합기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82] 또한 SICA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수시로 바뀌는 중미 각국의 인맥구조를 보완하여 각국에서 SICA에 참여하고 있는

82) 예컨대 일본이나 대만 등은 SICA 내 중소기업지원센터인 CENPROPYME나 경제통합 추진기구인 SIECA 등 중미 역내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등에 대해 크지 않은 규모의 자금과 기술 인력을 지원하여 SICA를 통해 중미 각국 정부와의 협력채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인사와 인맥을 관리해 나가는 방안도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선발개도국으로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원조 공여자의 입장에서 SICA와의 협력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대중미 원조 시스템의 개선이다. 일반적으로 공여국은 규모에 관계없이 자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하는 만큼 부담을 느끼지만, 수혜국 입장은 주겠다니 고맙기는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입장인 중미국가들이 느끼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고맙게 받겠다'는 수준의 유·무상 원조사업보다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중미 비즈니스 개발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중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원조시스템 구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단발성 원조보다는 한국 진출기업 보호와 측면 지원용 기획 사업에 적합한 대상국과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I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IDB의 중미 지역 사업에 대한 공동 협조융자 또는 프로그램의 지원 등을 통해 IDB와 중미 양측에 다 같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일본의 IDB를 통한 유·무상 원조사업 유형을 분석해 보고 유사한 또는 보다 더 창의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미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로서는 실리보다는 명분이 더 강한 모양새가 되겠지만 쌍방간 열대 농산물 외에는 민감 품목도 별로 없으므로 양측간 FTA의 조기체결 추진을 통해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만족하기 어려운 원조사업보다는 우리 기업을 통해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방법을 통해 미국, EU 등과 같이 제도적으로는 중미산 상품에 대해 수출시장을 열어주어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과 산업기술을 전

수하여 양자간의 경제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여섯째, 중미 각국의 지방산업 개발계획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중미 각국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을 분산키고 경제개발에서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는 있으나, 빈약한 재정사정으로 이러한 사업도 외국정부의 원조나 IDB 등의 자금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 영세기업에 대한 기술훈련사업은 미국의 USAID, 독일의 기술협력공사(GTZ), 일본의 JICA, 대만의 기술지원단 등의 자금 및 기술훈련 교관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지원 등은 IDB 등의 지원 자금이 주요 재원이며, 일부만 각국의 정부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소재 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중미 각국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투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편의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한국전용공단 조성 사업이나 전기·도로 건설 등 SOC 부문에 대한 유·무상 원조사업, 기술훈련센터 지원 사업 등을 묶어 중미국의 지방산업 개발계획에 참여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발생되어온 문제점과 악화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정상회담 채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양측의 정상회담 채널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치르는 형태가 아닌, 적절한 간격으로 정례화하여 활용해 나갈 경우, 한국기업들의 대중미 진출이 원활해지고 보다 정당한 대우를 받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중간 점검 차원의 총리주재 회담이나 외교통상장관회담, 경제협력 관계장관의 회담 형식을 정례화하는 등 진행 형식을 보완하여 우리나라가 중미국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표명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전문가 인재 풀을 구성하여 상시가동 체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 외

에도 현지 공관의 경제협력활동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진출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미지역에서 수학을 하였거나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력의 인재 풀을 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파견 공무원들은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전문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지 언어능력을 갖춘 외부 경제통상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상시적으로 중미국 정부, 중미 경제통합기구 및 유관기관, 지역개발은행 등과의 협의채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내에서 해당 지역에 정통한 경제 및 지역전문가들을 과감히 기용하거나 현지 교민 자녀 또는 유학인력 출신의 전문인력을 기용하여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펼쳐나가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업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각종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의 중미 및 카리브 지역 진출은 이들 국가들의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CAFTA-DR 발효로 중미 수출품의 미국시장 진입이 더욱 용이해지고, 섬유, 의류 수출품목의 원산지규정 완화에 힘입어 중미지역은 향후에도 북미의 주요 섬유·의류 공급지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중미 마킬라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유행 상품과 고부가가치 상품 등 아시아 국가의 저가제품과는 차별화되는 보다 고급화된 제품으로 미국시장을 공략해야 하겠다. 또한 기존의 단순 임가공 방식과는 달리 원료생산, 제직, 염색, 가공 등 제반 생산공정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생산라인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원산지규정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생산방식을 개선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CAFTA-DR의 무역 특혜가 금융, 통신, 운송, 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섬유산업을 위주로 한 제조업 투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도 모색해 볼 만하다. 특히 이 협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강화되어 우리 기업들도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관광업 등 중미 각국 정부들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부문부터 우선 접근하는 방식으로 투자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동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많은 기회비용을 투입하고 학습효과를 어어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지인들 특히 원주민 근로자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백인들과는 뭔가 부족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경영기법이나 노무관리 자세, 현지법이나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 문화적 차이와 관습의 상이 등에 대한 이해부족과 현지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아직도 현지인 및 현지 근로자들과 노사관계가 원만치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현지인들과 현지 정부 중하급 관료들의 외국인 사용자들에 대한 자기보호 및 자기방어 본능과 유색인 또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자세 등도 가미되었다.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중미 각국의 땅과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진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지에서 각 진출업체가 속해 있는 조직사회와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힘닿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그리고 부단히 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들이 쌓여나갈 때 각 진출기업들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국가이미지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간 및 대기업과의 동반협력 진출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한국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이나 생산관리 능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 경험이 없어 해외진출 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안정적인 시장진출과 개척을 위해서는 해외진출에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방식을 통해 초기단계 진출 시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으로서는 능력에 못 미

치는 IT산업 부문의 투자 등에 협력기업 형태의 동반진출을 통해 한국이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하더라도 봉제업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산업에도 관심을 갖고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동종 중소기업간 협업형태의 진출방식도 해외 투자진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경감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투자진출 업종 다변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의 대중미 진출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를 중심으로 CBI와 CAFTA-DR 등 현지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대북미 시장에 우회수출하기 위한 봉제업 관련 염색, 방직 등의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임금 산업에 대한 진출은 현지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보다 저임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진출이라는 오해가 더 작용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봉제업 외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산업(ICT), S/W 개발을 포함한 지식정보 산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산업, 환경·생태관광 산업, 대미 수출용 절화산업, 식품가공산업, 의약품, 전기·전자기기 조립산업 그리고 본국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열대과일, 커피, 사탕수수 등 기호식품 재배산업, 종자개량 산업 등으로 투자진출 업종을 다변화시켜 나가면서, 중미 국가들의 경제개발정책에 부합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산성과 수익이 보장되는 새로운 업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겠다.

다섯째, 국별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의 종합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예컨대 카리브 해의 도미니카(공)는 미국과는 CAFTA-DR을, EU와는 카리브 지역국 일원으로 카리브-EU 경제자유교역협정에 참여하고 있고, 도미니카(공)와 인접한 아이티의 경우 미국의 최빈국에 대한 배려정책으로 섬유·봉제 부문의 특혜무역제도(일면 HOPE법)를 수혜 받는 등의 여건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도미니카(공)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이티 등이 미국시장뿐만 아니라 EU시장 진출을 위한 섬

유·봉제 및 신발, 의약품 등 생산수출 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므로 새로운 시각에서 이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전략을 재검토하고 투자분야의 다변화 및 복합화 전략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녹색산업 협력

가) 정부 역할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 현재 녹색산업 해외진출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녹색성장 발전 모델의 국제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녹색산업 수출이 가능한 유망업체를 선정하여 중미지역 진출 경쟁력을 진단하고 진출을 위한 세부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주도 진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미 중미지역에 진출한 해외 기업체들과의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기술·수출 경쟁력 진단 및 가이드라인을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은 신규 진출을 노리는 우리나라 기업체들에 커다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지역적 특성상 중미진출을 위한 이 지역의 녹색 및 환경시장 정보조사 등 기업 맞춤형 세부사업지원을 위한 환경산업체 수출마케팅 강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다. 이러한 정책입안 과정에서 특히 정부의 녹색산업 금융정책은 중미지역에 이미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례처럼 ODA 자금뿐만 아니라 해외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지원 및 탄소금융(CER) 확보를 위한 수출입은행 탄소펀드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원 정책들이 연계된 금융지원이 함께 해야 중미지역 진출을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나) 민관학연 공동연구 및 학술연구 지원

진출 기업들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민관학연 공동연구 및 학술연구를 적극

적으로 지원하여 해외 녹색환경시장 정보조사를 활성화하고, 중미지역 중에서도 진출이 유망한 국가들을 선별해 개별 국가들마다 특화된 녹색산업의 분야들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차원의 진출 전략들을 보다 상세화해 나가야 한다. 진출이나 투자를 원하는 중미지역의 환경기업이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내 환경기술을 연수시키고 공동으로 미래 녹색산업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고려도 중요하다. 특히 코스타리카 같은 산림정책이 우수한 국가나 파나마와 같은 수자원 관리에 특화된 국가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부문에서 태양열, 풍력, 지열 등에 특화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등과의 녹색산업 협력은 상호 우호협력 강화를 통한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여타 다른 중미 국가들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 국가들에 대한 진출 노력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중미지역 전체 차원의 진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미지역 경제통합 공동체인 CAFTA-DR 혹은 SICA를 통해 지역통합을 유도해가는 이 지역은 미국의 녹색환경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 진출과 투자 과정에서 CAFTA-DR은 공개입찰이나 정부조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있어 큰 규모의 녹색산업 진출 시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미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녹색산업들을 공동 연구함으로써 이 지역에 맞는 미래 녹색기술을 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녹색환경기술 R&D 및 투자가 더욱 증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미지역 녹색환경시장의 효과적인 개척을 위해 자원개발, 플랜트·건설 등의 사업과 환경산업을 연계한 동반진출 추진 정책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중미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물 공급 분야, 고체 쓰레기 처리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은 현재 우리나라의 강점인 플랜트와 건설이 연계되어 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별로 연계한 그룹형 혹은 패키지형 동반진출 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 풍부한 산림 및 생물자원을 지니고 있는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 또 따

른 R&D 분야를 발전시킬 기회가 풍부한 지역이다. 지리적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녹색환경시장 개척단 파견 정책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중미지역처럼 환경시장의 규모가 작고 기술적으로 그다지 발전되지 않은 지역에서 국내 기업간 과당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초기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국가별로 환경이슈 및 현안문제 해결에 부합되는 녹색환경 산업들을 개발하여 진출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 공동협력이 가능한 분야와 기술을 개발함은 물론, 제도적으로도 개별 국가들의 환경법과 환경규제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환경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산업 등에 협력 네트워크를 이어갈 필요한 전문가나 미래 인재를 양성(green job)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 공동진출 모색

우리 기업이 중미지역 녹색환경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문화적 애로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현지 네트워크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 중미지역은 후견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발주처 행정업무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경우 전반적인 사업 진행이 보다 용이하다. 따라서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이나 현지 네트워크와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과의 공동진출을 도모하는 것도 효율적인 진출 전략이 될 수 있다. 중미지역 진출에 경험이 없는 우리 기업이 단독 진출할 경우 분야의 전문성 부족 및 막대한 금융부담과 사업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시도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진출하고 있던 선진국 기업과의 제휴도 바람직하며, 국내 유관기업체들간의 컨소시엄 형태로의 공동진출 방안도 모색해볼 만하다.

라) 현지화 강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중미지역에서 문화적 이질감, 사회적 폐쇄성, 정치적 이해관계, 복잡한 조세제도 및 상거래 관행 등 현지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녹색산업 시장에 뛰어들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고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지화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중미지역에는 유럽계와 미국계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어 신규 시장진입이 어렵게 때문에 적극적인 국가홍보, 기업홍보, 현지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지도를 높여가는 우회전략도 필요하다.

마) 협력 유망분야

현재 우리나라가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의 3대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기술은 매립 폐기물 고효율 선별 및 재활용 선별 신기술, 환경 플랜트 기술,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다공성 식생블록과 식생매트 제조 기술, 폐기물 소각 폐열 스팀 재생산 기술, 전기이륜차 전용의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기술, 하이브리드 정전여과집진시설 및 여과집진시설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시설 등의 기술 개발, 100MW급 태양전지 기판, 폐내화물 분류 알고리즘 설계 및 CO_2 고정화 기술, 하수처리 공정에서 선형화된 모델을 이용한 호환조의 폭기/비폭기 주기의 제어 기술 등이다. 이 밖에도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녹색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녹색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녹색생산·소비문화 확산을 기치로 기업·시민단체·정부·대학·일반국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 녹색생활 실천방안 모색을 강화하고 있다. 즉 “Me First, 2030 Green Korea” (기업과 국민이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

량을 30% 감축하자는 슬로건)를 목표로 녹색생활을 녹색소비와 연결시켜 가고 있는 중이다.[83]주요 분야로는 녹색상품(가정, 사무실), 녹색유통·교통·서비스(쇼핑·여가), 녹색건축(그린홈), 녹색기술·에너지(녹색 인프라) 등 녹색생활 실천에 필요한 산업들로 다양하다. 녹색상품의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가전제품에 대해 CO_2 저감효과를 수치화하거나 식수(植樹) 효과로 보여줌으로써 제품의 환경 친화성을 알기 쉽게 보여주고, 소비자들이 향후 제품구매 시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녹색유통·교통 분야에서는, 환경부와 유통업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녹색매장 시범사업을 통해 매장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생활 확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녹색건축(그린홈)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필요한 벽지, 페인트, 단열재, 절수제품 등 다양한 친환경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미래 주택 및 도시에 적용될 에너지 절감형 첨단 녹색기술들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녹색생활과 녹색소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경험을 중미지역에 전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녹색소비와 녹색산업의 조화로운 경험은 아직까지 이들 분야에 크게 취약한 중미 등 해외에 전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미지역은 최근 10년간 안정적인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기초 환경설비 및 전력수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위생과 복지 및 환경을 고려한 환경설비와 환경 컨설팅에 대한 수요, 신규 및 기존 노후설비 교체·개보수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녹색산업의 경우 그동안 국가주도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점차 민간기업의 위탁관리와 운영이 확대되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개방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83) http://www.greengrowth.go.kr/index.do 참고.

특히 기초환경 설비는 아직까지 중미지역 국가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세계 물 시장(상수도, 하수도, 식수, 수자원 개발)은 연평균 6.5% 성장에 힘입어 2025년에는 그 규모가 8,6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물 산업은 21세기 블루골드 산업으로 불린다. 현재 세계 물 시장은 일부 다국적 메이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미지역의 경우 유럽기업들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시장분석을 통해 맞춤형 해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낮은 전력보급률 확대와 지속적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미지역 국가들이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책을 펴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진출여건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 농촌과 오지 지역에서 전력부족이 심각하고 소규모 발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발전사업의 진출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풍력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진출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중미지역은 또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스마트 그리드 등과 연계한 진출에서도 매우 잠재력이 크다. 중미 각국이 정책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등, 조리 및 난방기구, 냉장고를 비롯한 전자제품으로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3) IT산업 협력

대중미 IT산업 협력 방안을 △중미 현지수요 부응 △한국의 기존 협력 개선 △세계적 추세 부응의 관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미 국가들의 ICT 정책과 전략을 감안할 때, 첫째, 전자정부, 교육정보화, 보건위생, 농촌정보화, IT산업 클러스터 사업 및 지방정부의 정보화 등이 주요 협력분야가 된다. 현재의 e-Government 지수와 기타 경제지표 등을 살펴볼 때 중미

는 독자적인 전자정부 구축 및 운용이 재정부족, 통신 인프라 미흡 등의 요인으로 제한적이어서 차관도입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할 의지가 높다. 따라서 국가별 정보화 계획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성과(디지털 격차 해소, 인력양성, e-Learning 등)를 더욱 강조하는 홍보전략을 전개하여 진출 사례는 물론 분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앞선 방안과 연계하여 국가별 ICT 육성 정책과 전략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미지역 실험시장인 도미니카(공)는 국가의 적극적인 정보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투자가치가 가시적이거나 단기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 전자인증 시스템 등 기초적 IT 소프트 인프라, 인터넷 사용 등 통신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통신망 등 하드 인프라 구축 등의 부문에서 투자가 미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실험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DMB 사업과 현재 도미니카(공)가 추진하고 있고 추진의지가 높은 IT 인재 양성,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 시스템 등에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통신망 확충에 전략적으로 매진하고 있어 통신설비 부문 진출이 유망하며,[84]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면 IT 소비시장보다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인텔 사 진출과 관련 기업들의 산업 클러스트화는 코스타리카 IT산업의 강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니카라과는 부패, 빈곤, 치안, 생산성 및 정치개혁 등을 사회개발계획의 핵심과제로 삼고 각 과제에 IT를 접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러한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인 IT 협력 사업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85]

---

84) 코스타리카전력공사(ICE)는 IDB로부터 5억 달러의 통신 현대화 자금을 지원받아 3G 통신 도입을 진행 중이어서 Telefónica, Digicel, América Móvil, Millicon 등 외국 통신업체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85) 부패-재정정보화, 주민정보화, 선거개표 등; 빈곤-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정보화, 인터넷 보급 확충 등; 치안-경찰정보화; 환경-종합방재시스템;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농업 근대화, 중소업체 정보화 등; 정치개혁-출입국 정보화; SIE(Smart Infrastructure Engineering) 사업-지방행정시스템, 지능형

셋째, 중미지역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경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중미 각국 및 지역공동체는 경제의 지배 부문인 중소업체와 IT를 접목하는 것이 발전의 동력이라고 판단하고 중소업체의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하고 있다. 즉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이 모두 포함한 중소기업의 생산, 투자 및 무역 등에 IT 접목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기업보다는 적정 기술 수준을 달성한 또는 소호에서 규모를 달성한 기술지배적 중소업체를 발굴하여 이들의 경험을 현지 중소기업들과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존 협력방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첫째, 기존 중점 협력사업의 집중 및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의 대중미 전자정부 구축 단계에서의 협력사례는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보다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관련한 IT 서비스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동반진출 등 협력 모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IT 서비스업체의 해외사업 개발과 중소 SW업체의 시스템 구축 참여라는 부가적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둘째, 협력선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기존의 개별국가 혹은 중앙정부 프로젝트 수주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협력사업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중미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정책결정과 경쟁적 기술도입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전자정부 사이트, 인프라, IT 산업단지 조성 등 해당 지방단치단체와의 협력분야가 새로이 개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나라 중앙정부 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발생한다.[86)]

교통정보시스템(ITS), 자동요금징수시스템(AFC), 스마트카드 등

셋째, 정보기술 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정보화 인력 양성, IT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운용 협력, 정보화 마을 운용 협력 등 우리가 경험을 한 분야로 협력사업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술 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정보화 인력양성 프로젝트의 경우 중미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파크를 활용하면 잠재 고용인력 개발, 사이버파크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고급과정의 교육기관 설립이나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용[87]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정보기술 교육기관은 산관학 협력 차원에서 IT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경험을 통한 중소업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중소업체의 건전한 성장경험 등은 훌륭한 협력사업이 될 수 있다. 중소업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등 우리나라가 습득한 경험[88]은 훌륭한 대중미 협력사업이 될 수 있다. 한편 중미 일부 국가들은 기술혁신의 무한경쟁시대인 지식정보 사회에서 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국가 및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IT 분야에서는 사이버파크 조성이 대표적인 사

86) 충청남도의 사례처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개발도상국 무상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조 약정서 체결은 실질적으로 중미의 각 지방이 처해 있는 문제들에 접근할 수 여지를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의지만 있다면 기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던 중미 각국의 농·수·축산 분야 기술교육, 교육, 보건위생, 농촌개발 등을 위해 국내 초청 연수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청년 IT 봉사단 및 새마을지도자 파견 등을 통한 선진기술 및 경험, 지식 전수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수요를 수월하게 발굴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87) 우리나라에는 용인시 등 지역별로 사이버를 통한 외국어 학습, 컴퓨터 등 기술교육 등을 제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은 e-Learning 체계에 학생들과 직장인의 학습 및 기술 콘텐츠도 가미함으로써 자녀들을 빈곤의 세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모의 기술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중미지역 교육, 빈곤문제 등에 IT를 접목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88)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중소업체 정보화 지원사업의 경우 생산, 경영 등 기업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을 위한 경영정보지원시스템(MIS), CRM, ERP, ECM, BPM, RFID/USN, 전자무역 솔루션 등의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으로서 POP, MES, CAPP, PDM, RFID/USN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례다. 중미는 IT를 접목한 디지털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대표산업인 관광과 농업의 전국적인 클러스터를 추진할 여지가 높다. 이 경우 2004년부터 시작된 IT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경험 전수는 또한 훌륭한 대중미 협력 소재가 된다.[89] 또한 농업과 관광에 경제적 근간을 두고 있는 중미지역 농촌사회 정보화사업을 발굴할 경우 우리의 정보화 마을 운영 경험[90]과 연계시킬 수 있어 경쟁력을 지닌 협력방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제도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양자간에는 산업협력위원회 등 포괄적인 형태의 협력제도조차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IT분야만의 협력을 위해서라도 통합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가칭 '한국·중미 IT협의회'를 상설 운영하여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별 관련업체간 회의와 대상국가에 대한 IT 정보를 논의하며, 협력 진행에 따른 모니터링, 사후관리 및 신사업 발굴을 하는 지속적인 협력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회에는 IT 기술전문가와 지역전문가와의 협업 체제 구축 및 운용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와 같은 협의회의 좋은 사례로는 중남미·스페인 IT 단체협의회연합(ALETI: Federación de Asociaciones Latinoamérica, el Caribe y España de entidades de tecnología de la información)[91]이 있다.

---

89)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주도로 산업 클러스터 정책이 기존 산업단지를 산학연 협업체제하의 혁신 클러스터로 재편하는 정책이나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역별 특성 (정보 인프라, 기업경쟁력, 부존자원, 문화, 전통 및 역사 등)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다.

90) 우리나라의 정보화 마을(INVIL) 사업 방식은 정보화 마을 선정 후 초고속 인터넷망과 컴퓨터를 보급하고 마을정보센터를 건립하여 정보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마을 홈페이지에 마을소개를 비롯해 주변 관광지, 특산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시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정 자원에 기반한 정보화 마을 성공 사례들은 빈곤한 농촌개발에 정책적으로 매진해야 할 중미 국가들에 던지는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91) ALETI는 중남미 17개국과 스페인 간의 IT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맹으로서, 역내 IT 관련 모든 기관(연맹, 상공회의소 및 연합회 등)을 통합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 기술 상호교류 및 유통을 촉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보지식사회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며 중남미의 IT 정책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 프로젝트의 주체가 되는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를 유도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지 프로젝트 수주 프로세스에 대한 세밀한 이해와 접근방식 등을 민간기업에 제공하여 스스로 시장을 개척할 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중미지역 진출에 대한 위험을 줄여주는 방안으로서 공공자금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 직접금융 제공 방식의 Vendor Financing은 위험 사업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신용기관(ECA)의 무역금융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중미 IT산업 협력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한다는 관점에서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 등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개발기구들의 대중미 협력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감안한 협력방안 도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 중미지역의 핵심 개발은행인 CABEI를 적극 활용한다. CABEI는 중미지역에서 IDB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자개발금융기관으로서 설립 이후 일반기금 및 신탁기금(FEPEX, FOEXCA, CAFEI) 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사업 외에도 프로젝트 기술협력, 중소업체 지원 등에 매진하고 있다. CABEI의 경우 사회개발 기회에 지원하고 있어 직접적인 경제적 실익은 작지만, CABEI 프로젝트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의 여타 프로젝트 사업을 개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0년부터 CABEI에의 가입을 논의 중인 점은 고무적이다.

둘째, 회원국으로서 IDB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면서 IT분야 사업기회를 창출하자는 측면에서 IT Trust Fund(신탁기금) 설치를 제안한다. IT 신탁기금의 목적은 IDB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미를 포함한 중남미지역에서 정보화 컨설팅, 전자조달 및 관세시스템 등의 분야에 진출 시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데 있다.

셋째, 통신 인프라 확충, 교육기회 확대, SI, 디지털 격차 해소, 환경 및 재해 등 개발기구들이 다수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

근 세계은행의 협력 프로젝트 사업의 방향이 모바일, e-Transformation[92], Green IT 등으로 집약되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은 향후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진출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은행은 2011년 중미 전략국가로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및 도미니카(공) 등을 지정하였다.[93]

92) 중미 국가들은 과거의 전자정부 개념에 e-Business를 적극 활용하는 e-Transformation를 지향하고 있다. 즉 IT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IT 도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입을 통해서 국가별로 새로운 정보화 경쟁 환경에 맞도록 변환(e-Transformation)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93) 김준연(2010. 11. 7), 「SW 글로벌 진출 및 협력을 위한 WB 워크 및 I3E 컨퍼런스 출장 결과보고」, NIPA.

참고문헌

[국문 자료]

권기수·김진오·고희채. 2009.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연구보고서 09-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규·김진오·나수엽. 2005.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문 자료]

Alicia Barcena y Osvaldo Rosales. 2010. *La Republica Popular China y America Latina y el Caribe: Hacia una Relacion Estrategica.* CEPAL.

BCIE. 2010. *Economic Trends & Outlook: Central America and Dominican Republic.* (April)

CEPAL. 2008. "Subregión Norte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Información del Sector Agropecuario. Las Tendencias Alimentarias, 1995-2007." LC/MEX/L.874.

_____. 2009a. "La crisis de los precios del petróleo y su impacto en los paises centroamericanos." LC/MEX/L.908.

_____. 2009b. "La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 y sus Perspectivas frente a la Crisis Internacional." LC/MEX/L.954.

_____. 2009c. "Panamá y el Proceso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LC/MEX/L.946.

_____. 2010a.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ia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0."

_____. 2010b. "Estudi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09-2010."

Dollars. 2005. "Development and Diplomacy." *Taipei Times.*

Daniel P. Erikson. 2009. "China's Starategy towards Central America: The Costa Rican Nexus." *China Brief*, Volume 9, issue 11.

Danirel P. Erikson and Janice Chen. 2007. "China, Taiwan, and the Battle for Latin America." *The flecher forum of world affairs,* Vol. 31: 2. (Summer)

ECLAC. 2009. "Confronting the Crisis: The Central American Isthmus and the Dominican Republic: Economic Evolution during 2008 and Prospects for 2009." LC/MEX/L.904.

_____. 2010. "Economic Survey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9-2010." LC/G.2458-P.

_____. 2010. “Statistical Yearbook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9.” LC/G.2430-P/B.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Regulation (EC) No. 1905/2006 of 27 December 2006.

Fonseca, Roberto. 2009. “A full, desde el Istmo para el mundo.” Estrategia y Negocios. Feb. de 2009.

Gobierno de El Salvador. 2010. “Plan Quinquenal de Desarrollo 2010-2014.”

Gobierno de Reconciliación y Unidad Nacional de Nicaragua. 2009. “Plan Nacional de Desarrollo Humano Actualizado 2009-2011.” Resumen Técnico. (September)

Hornbeck J. F. 2010. “U.S.-Latin America Trade: Recent Trends and Policy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MF. 2010.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Informe de Resultados: Cierre de la Negociación con La Unión Europea en Madrid.” http://www.aacue.go.cr(13~18 de Mayo de 2010).

Johana Mendelson Forman and Susan Moreira. 2009. “Taiwan-China Balancing Act in Latin America.” *Chinese Soft Power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pp 97-101. CSIS.

MIDEPLAN. 2007. *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06-2010.*

MINISTERIO DE ECONOMÍA, PLANIFICACIÓN Y DESARROLLO / CONSEJO NACIONAL DE REFORMA DEL ESTADO, DOCUMENTO BASE DE LA PROPUESTA DE ESTRATEGIA NACIONAL DE DESARROLLO 2010-2030: UN VIAJE DE TRANSFORMACIÓN HACIA UN PAÍS MEJOR.

OECD. 2010.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DISBURSEMENTS, COMMITMENTS, COUNTRY INDICATORS 2004-2008.

Padilla, Ramón, M. Cordero, I. Romero y R.Hernández. 2008. “Evolución reciente y retos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de exportación en Centroamerica, México y República Dominicana: Una perspectiva regional y sectorial.” *Serie Estudios y Perspectivas.* No. 95, LC/MEX/L.839/Rev.1.

Panama. “Plan Estratégico de Gobierno 2010-2014.”

República de Honduras. 2010. “Visión de País 2010–2038 y Plan de Nación 2010-2022.” Presentados para consideración del Soberano Congreso Nacional, Enero.

Shannon K. O'Neil. 2008. “U.S.-Latin America Relations: A New Direction for a New

Realit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IECA/DGTI. Sistema de Estadísticas de Comercio de Centroamerica(SEC).
UNCTAD. 2010.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Investing in a Low-Carbon Economy." (July)
UN. 2010. *The UN Global E-Government Survey 2010.*
World Economic Forum. 2010."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9～2010."

[통계 및 인터넷 자료]

대만외교부
대만통상부(Bureau of Foreign Trade)
대만 국제협력 및 발전기금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미국 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일본 외무부
일본중앙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외교통상부
CEPAL, SIAGRO http://www.eclac.org/estadisticas/bases/
EUROSTAT
OECD/DAC
IMF, DOTS
ITU
JETRO
NYU Wagner School
UNCOMTRADE
USTR

Executive Summary

Korea's New Scheme for Enhancing Economic Cooperation toward Central America

Jino Kim, Ki-Su Kwon, Hee-Chae Ko, and Misook Park

This research presents four (4) questions related to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merica, and then suggests answers for each question. First, what are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recently in Central American economy and what impacts will they have on relations with Korea? The Central American economy has shown rapid growth recently and pulled the region's countries out from the ranks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As income levels grow, the consumer market expands and the region assumes greater importance as an investment and export destination. The ongoing economic integration within and outside Central America, which aims to generate economies of scale and to connect the region to the world market, makes Central America an ideal bridgehead for market expansion to other regions.

Second, various strategies employed by different countries have bolstered mutual cooperation with Central America. What were the strategies that were implemented and what are their implications? Cases involving the Unites States, EU, China, Taiwan and Japan are analyzed. The results state that the actual cooperation and strategies vary depending on the country. Political, diplomatic or security concerns (rather than

economic) provided the base rationale for such strategies. In addition, the countries focused on utiliz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cases suggest that Korea must adapt a cooperation strategy that accords with its own needs and capabilities, as different countries cooperate for different reasons. The various countries' reasons for cooperation are: security (US), diplomatic (China/Taiwan) and ODA (EU). The example most pertinent and applicable to Korea is the economic and diplomatic approach taken by Japan. But although Korea has been engaged in activities similar to Japan's there is, as of yet, been no clear measures that can actually be termed a strategy.

The third question concerns obstacles for the expansion of commerce between Korea and Central America. To provide an answer, chapter 4 explains the trade, investment and institutional relations between the two. It should be noted that a surve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achievements and limits of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Although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Central America has increased dramatically, it is not significant as a proportion of total world trade. Moreover, the two parties are not taking full advantage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products. For example, though Korea's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are very much competitive in the world market, their exports to Central America, however, is lower than expected. Central America, as a region, has competitiveness in a range of product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s, raw materials, animal and vegetable oils, fats and waxes, textile, rubber, paper, wood manufactures, etc. Nevertheless, products that are actively exported to Korea are limited to coffee, semiconductors and some raw materials.

The survey mentioned above pointed out the barriers to trade: △ the lack of marketing ability △ emergence of a competitor such as China △ exchange rate volatility △ high tariff rate and etc. The survey also point to non-trade barriers including: △ requirement of complex import license or prior approval △ additional tax aside from

formal tariffs △ restrictions on exchange transaction and remittance △ no preferential treatment for specimens, etc. The companies that participated in the survey as respondents, asked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following measures to facilitate trade: △ efforts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Korea among Central Americans through cultural and economic activity △ early conclusion of FTA with Central America △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for export △ support for dispatching market researchers and for participation in exhibitions △ the expansion of expert training programs or institutions △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foreign markets through web pages, guidebooks, etc. △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al agencies such as commercial attaches and trade centers to handle potential difficulties, simplify the process for visa issuance, and collaboration with Central America for expedited customs procedures △ provision of consulting services for export by government agencies such as KOTRA, Small Business Corporation and etc., △ setting up permanent consultative channels to respond to export barriers.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Central America has evolved from initial investing in manufacturing based on cheap labor to tourism, IT, environment, infrastructure and high value added manufacturing. Korea's FDI, however, has been directed at a specific country, like Panama, or industry - the service sector in case of Panama and in textiles for the other countries. It is necessary that Korea diversify its FDI in Central America.

Central America is evaluated as having high potential as a large consumer market and easy accessibility to larger markets nearby. There are, meanwhile, negative aspects to the region, such as political instability, insufficient infrastructure and the limits to utilization of the local financial market.

A more robust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needs to be established to deepen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entral America.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and the Korea-SICA conversation group are the only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Korea and Central American currently share. But though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is of practical use for investing companies, Panama remains the only country that signed the agreement with Korea. To boost trade and investment in Central America, a more institutional groundwork including an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various cooperative channels and regular meetings, needs to be established.

Fourth, what are the sectors where Korea and Central America have potential for greater cooperation and how can both parties earnestly engage each other in cooperation? Regarding the above, this study selected four (4) sectors. Actual cooperation in each sector is then subsequently assessed and policy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for further progress in cooperation. Those sectors ar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green industry and △IT.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has hitherto been clearly limited.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cooperation, however, needs to be ascertained. Government and companies need to initiate the investment in Green and IT industries. As for ODA and SMEs, cooperation needs to proceed to the next stage, to expansion and maturation.

The limited development of Korea-Central American relations is due to the combination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absence of specific cooperation measures, insufficient institutions, imbalance in the structure of bilateral commerce, temporary diplomatic policy, and most of all, a unilateral policy which did not consider the situation and the needs of Central American countries. Consequently, this report proposes plans for widen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merica. One, it is imperative that Korea change its perception of Central America; to recognize the region as an earnest partner for cooperation. Two, the ODA, which appreciates the future value of Central America as large market,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rade and investment for short-term economic benefits. Priority should be given to socio-economic develop-

ment of Central America, which would lead to sustainable mutual benefits. Three, a regional approach rather than a country-level approach is needed. That is to say, Korea needs to cooperate with Central America as a whole as well as with individual countries. Four, various cooperative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as a basis for closer relations. Five, cooperation in industry should be comply with the actual needs of Central American partners, and it need to be done in the sectors where Korea has actual needs and possibilities.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목록

■ 2010년

10-01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이홍식

10-02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 현혜정 · 장용준 · 강준구 · 김혁황 · 박철형

10-03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 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 서정민 · 김영귀 · 박지현 · 김정곤 · 금혜윤

10-04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 조미진 · 김한성 · 김민성 · 양주영

10-05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10-06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 윤덕룡 · 오승환 · 김소영

10-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허인 · 이동은 · 이윤수 · 양다영

10-08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 박영준 · 이동은 · 오용협 · 안지연

10-09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 조종화 · 박복영 · 박영준 · 양다영

10-10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 지만수 · 박월라 · 이승신

10-11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 · 중 경제관계 / 이장규 · 나수엽 · 여지나 · 박민숙

10-12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 /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단

10-13 한 · 중 · 일 역내 투자동향과 활성화 방안 / 정형곤 · 이홍식 · 방호경 · 나승권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0-14 일본과 EU의 환경협력 추진전략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판 · 이형근 · 김균태 · 오태현

10-15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김홍종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10-16 한 · 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
이재영 · 이철원 · 황지영 · 파벨 미나키르

10-17 중남미 건설 · 플랜트 시장의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고희채 · 박미숙 · 허경신

10-18 한 · 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김진오 · 권기수 · 고희채 · 박미숙

10-19 한 · 인도 CEPA 이후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
조충제 · 성한경 · 최윤정 · 송영철

10-20 ASEAN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
김태윤 · 손기태 · 정재완 · 이재호 · 백유진

10-21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
박영호 · 한바란 · 정지선 · 주진홍 · 김민희 · 전혜린

10-22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
김태윤 · 손기태 · 정재완 · 이재호 · 백유진

10-23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순철

10-24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조명철 · 김지연 · 홍익표

10-25 주요국의 저출산 · 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 김양희 · 강유덕 · 손기태 · 김은지 · 이현진

10-26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정지원 · 권 율 · 한바란 · 정지선 · 박수경 · 이계우

10-27 전략적 동반자시대의 한 · 러 경제협력 구상 /
정여천 · 황지영

■ 2009년

09-01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정성춘 · 이형근 · 권기수 · 이철원 · 오태현 · 김진오 · 이순철

09-02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 박영호 · 이철원 · 권기수 · 정재완 · 황지영

09-03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 정책 방향 / 최낙균 · 이경희 · 김정곤

09-04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 방안 / 김준동 · 강준구 · 김혁황 · 김민성 · 이성봉

09-05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중·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 정형곤 · 이성봉 · 나승권

09-06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09-07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영향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09-08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 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 송영관 · 강준구 · 금혜윤

09-09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 성한경 · 박혜리 · 남호선 · 양주영

09-10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 서진교 · 최낙균 · 박지현 · 이창수 · 박순찬

09-11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 권 율 외

09-12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 이창재 · 김한성 · 방호경 · 노유연

09-13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 윤덕룡 · 문우식 · 송치영 · 유재원 · 이영섭 · 채희율

09-14 해외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연구 / 이동은 · 송원호 · 오승환

09-15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윤덕룡 · 허 인 · 오승환 · 이호진

09-16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 오용협 · 최창규 · 박영준 · 김연실

09-17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의 모색 / 윤덕룡 · 오승환 · 이호진

09-18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 이승신 · 윤창인 · 박월라 · 여지나 · 배승빈 · 박민숙 · 조현준

09-19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관한 연구 / 정성춘 · 김양희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09-2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 권기수 · 김진오 · 고희채

09-21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조명철 · 김지연 · 홍익표 · 이종운

09-22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 박영호 · 정지선 · 허윤선

09-23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1, 2, 3권) / 이장규 외

■ 2008년

08-01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 김준동 외

08-02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 김상겸 · 유재원 · 한홍렬 · 김수이 · 이상현

08-03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 이장규 · 이준규 · 이승신 · 여지나 · 배승빈

08-04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 최낙균 · 정형곤 · 김한성

08-05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 서진교 · Sherzod Shadikhodjaev · 이경희 · 박지현 · 윤창인

08-06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송영관 · 송백훈 · 강준구

08-07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 정 철 · 김정렬 · 김혁황 · 성한경

08-08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 임혜준 · 김정곤 · 박혜리 · 이홍식

08-09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08-10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 현혜정 · 김혁황 · 박철형 · 성한경

08-11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 조종화 · 강삼모 · 이인구

08-12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
오용협 · 백승관 · 김연실

08-13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
지만수 · 박월라 · 이승신 · 박현정 · 최의현

08-14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
김양희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08-15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
이재영 · 이순철 · 황지영 · 이종문

08-16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이준규 · 김종혁 · 고희채

08-17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원호 · 권 율 · 김진오 · 박수완

08-18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
박복영 · 이계우 · 이순철 · 정지선 · 박수경

08-19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
박영호 · 박복영 · 권 율 · 허윤선

08-20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조명철 · 홍익표 · 김지연

■ 2007년

07-0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흥종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07-0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 · 이홍식 외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07-04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혜정 · 김혁황 · 김민성 · 박철형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07-06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07-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 · 박제훈

07-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 · 이장규 · 박현정 · 여지나 · 배승빈 · 조현준

07-09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구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형곤 · 오용협 · 원동욱 · 나승권

07-10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 · 이형근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 · 최윤정 · 정재완 · Prabir De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 · 채 욱 · 한홍렬 · 신현준

07-13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
박복영 · 채 욱 · 이제민 · 이 근 · 이상철

김진오(金眞梧)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o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공저, 2009)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공저, 2009) 외

권기수(權奇洙)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브라질리아 연방대학교(UnB) 초청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kskwon@kiep.go.kr)

저서 및 논문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공저, 2009)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공저, 2009) 외

고희채(高熙彩)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석사, 박사과정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 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hcko@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공저, 2009)
「IMF 구제금융기간 전후 자산변동과 가계소비에 관한 실증연구-패널 데이터 분석」
(공저, 2009) 외

박미숙(朴美淑)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중남미지역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現, Email: misookp@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콜롬비아 FTA 협상 추진의 의의 및 대응방향」(2010)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Flow of Labor: OECD Countries」(2009) 외

연구보고서 10-18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2010년 12월 27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蔡 旭
발 행 처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 쇄	(주)예원기획 전화: 745-8090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342-2 94320 정가 10,000원
978-89-322-1072-8(세트)

절취선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양재대로 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발간자료 등 제공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한 · 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Korea's New Scheme for Enhancing Economic Cooperation toward Central America

Jino Kim, Ki-Su Kwon, Hee-Chae Ko, and Misook Park

중미지역은 비록 경제규모는 작지만 전략적 위치와 안정적인 경제성장, 거대경제권과의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체결 등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깊지는 않지만 중미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미를 이해하고, 우리의 대중미 협력을 확대하며,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종합적 · 심층적인 연구 및 조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미의 경제구조, 경제 발전전략, 경제통합 추진 현황, 주요 선진 및 경쟁국의 대중미 전략, 한-중미 협력관계 등 중미지역의 협력 여건을 종합적 ·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와의 협력증진을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들을 제시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02-3460-1001, 1114 F.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ISBN 978-89-322-1342-2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